

인권정보자료실
SAel.1

한국전쟁 · 미일안보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0주년기념

제5회 일본대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냉전 · 국가폭력과 일본

일시 : 2002년 2월 22일(금) ~ 25일(월)

장소 : 교토 ·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

주최 :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일본대회 실행위원회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 테러리즘」 국제심포지엄 일본사무국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심포지엄 오키나와사무국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한국위원회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폭력」 국제심포지엄 대만비서처

후원 : 리츠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리츠메이칸대학 국제지역연구소

冷戦・国家暴力と日本

東アジアの平和と人権

国際シンポジウム

第五回日本大会

SAel.1

목 차

2월 22일

경과보고 : 「제5회 일본대회 취지 및 경과보고」 모멘 (일본사무국 사무국장) / 1

기념강연 : 「세계를 뒤덮는 아프가니스탄 폭격」 김석범 (작가) / 5

2월 23일

오전(09:00~12:10) : 미일안보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의 냉전시대

「미일안보조약과 전후일본의 보수체제」 코케츠 아츠시 (야마구치대학) / 9

「한국전쟁 휴전직후 이승만의 반일운동과 한·일 양국인의 연대」 서중석 (성균관대) / 21

「샌프란시스코조약체제와 중국 양안문제의 역사와 현실」 정지엔민 (대만사회과학연구회) / 34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오키나와 -제3조가 의미하는 것-」 미야사토 세이젠 (류큐대학) / 50

오후(13:40~16:50) : 동아시아의 냉전과 젠더

「점령하의 미군기지 매매춘과 지역」 히라이 가즈코 (시즈오카대학) / 60

「한국전쟁과 여성 :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 김귀옥 (경남대) / 68

「성폭력 용인체제인 안보 -침묵을 깨고-」 우라사키 시게코 (오키나와 여성사 연구자) / 83

「대만지구 계엄시기 정치안건 연구 -여간첩 상시원 무죄판결의 예-」

주더란 (대만중앙연구원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 / 92

밤(18:20~20:50) : 전후 일본의 아시아 인식을 묻는다

「교과서문제」에 나타난 일본의 아시아 인식」 타나카 히로시 (류큐쿠대학) / 106

「『대만론』에 나타나는 대만분리주의자의 노예의식」 두지평 (중국인민대학) / 114

「한국에서 본 교과서문제」 하종문 (한신대) / 120

2월 22일

2월 24일

오전(9:00~12:00) : 보고 및 증언 「한국전쟁·냉전 하의 민중투쟁」

「유골송환운동과 냉전 : 하나오카(花岡)사건의 사례」 주파지에 (하나오카 봉기를 생각하는 모임) / 133

「한국전쟁 시기 교토 자유노동자의 투쟁」 코시로 슈이치 / 143

「나고야(名古屋)·오스(大須) 사건에 대한 증언」 사카이 히로시 / 149

「스이타(吹田)·히라가타(枚方)사건을 검증한다」 와키타 켄이치 / 157

「미군 점령기의 제일조선인 운동」 정영재 / 168

4지역 사무국 보고와 공동방침 제안

「오키나와 심포지엄의 회고와 앞으로의 전망」 타카라 벤 (시인) / 176

「공동방침 제안」 서승 (리츠메이칸대학) / 181

경과보고 : 「제5회 일본대회 취지 및 경과보고」 모멘 (일본사무국 사무국장)

기념강연 : 「세계를 뒤덮는 아프가니스탄 폭격」 김석범 (작가)

제5회 일본대회 취지 및 경과보고

모멘 (墨面, 일본대회담당·사무국장)

지금까지 1997년·대만, 1998년·제주, 1999년·오키나와, 2000년·광주 등 4회에 걸쳐 개최된 「국제심포지엄」도 이제 오늘부터 여기 교토와 올해 10월 '여수' 두 곳에서, 연속하여 제5회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은 매회 대만, 한국, 오키나와, 일본 등 각지에서 300인을 넘는 노동자, 시민, 학생, 활동가, 연구자 등이 모여, 수일간에 걸쳐 제각각의 지역에서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민간 심포지엄이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과거 4회에 걸친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들은 냉전기 동안 자행된 동아시아 민중에 대한 생활파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권유린, 학살 및 그러한 탄압에 대해왔던 개별적인 투쟁사·생활사를 검증하고, 그것을 동시대의 동아시아와의 연관·연쇄 속에 자리 매김 하려는 시각을 제기해 왔습니다. 대만 심포지엄에서는 '2·28사건'과 장개석에 의한 계엄통치기의 '백색테러'를, 제주 심포지엄에서는 '제주4·3사건'에 대해 각각의 진상 해명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예회복을 테마로 삼았습니다. 또한,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점령기의 어둠을 밝히고, 광주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명예회복에 성공한 '광주민중항쟁' 20주년의 경험을 검증해 왔습니다.

냉전구조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은 침묵과 망각을 강요당했으며, 사건의 진상에 대한 탐구는 물론 부조리한 죽음과 박탈된 생활을 보상하는 일, 게다가 그 책임자를 추궁할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해 왔습니다.

본 심포지엄이 일관되게 냉전·분단체제 속의 국가 테러리즘에 의한 민중학살 문제를 중심적 과제로 삼으며, 이를 발판으로 냉전 해체로 다가서고자 하는 방법의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은, 오늘날 대만에서의 2·28사건보상조례나 계엄시기 부당심판안건 보상조례의 성립, 한국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법의 성립 등과 연동하면서 분출된 한국전쟁시기를 전후하는 민간인학살문제 해결을 위한 호소의 고양은 선견지명의 선구적인 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전구조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경을 뛰어넘어 결집시킨 본 심포지엄 개최는, 동아시아 각지의 냉전기 '민중학살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보상운동의 고양에 최소한의 공헌을 다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 6월, 수년에 걸쳐 쌓여온 사람들의 희망이자 동아시아에 '평화와 인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프로세스가 극적으로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날 다시금 암운이 우리들의 머리 위를 덮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진화'를 바라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으며, 그에 주체적으로 추종하는 '일본'이 또 우리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는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 만들기가 '북한위협론'과 '대만 「독립」' 책동, 중국위협론을 "지렛대"로 하는 선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는 급속한 우경화·군사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재편과 함께, 그 모순들이 광범위한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오늘날 이미 방대한 '도산', '실업'으로 매일같이 신문 지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서 흘린 한반도 민중들의 피와 그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아시아 민중의 희생 위에 구축된 '고도경제성장'의 "은혜"에 흠뻑 빠져있었던 일본 민중은 이제 그럴 수 없게 되면서, 오늘날의 힘든 상황과 사회적 폐색감을 편협한 내셔널리즘·반역사의식으로 전화시키면서, 스스로를 아시아 민중의 대극에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배외주의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과서문제'나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생겨난 유감스런 사태라 하겠습니다.

본 심포지엄 사무국에서도, 한국 사무국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여, 작년 3월에는 4개 지역 사무국이 공동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에 대하여 엄중하게 경고한다」는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아시아 각지, 일본 각계에서도 수많은 항의성명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지역인 4개 지역으로부터 공동으로 발표된 이 항의성명의 질적인 의의는 심대하였으며, 일본의 여론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본 사무국이 과거 4회에 걸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하여 길러온 사상적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구체적인 성과임과 동시에, 4개 지역 사무국에 의한 첫 공동행동으로, 참으로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9월 11일에 미국·뉴욕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계기로 '보복'을 강력히 외치는 부시 정권의 '전쟁'에 일본정부는 쉽게 동조하며, 재빠르게 파병을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4회에 걸친 심포지엄을 통하여 배운, 미국의 '정의'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무수한 민중들이 학살당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9·11이 아니라 10·9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해진 희생과 고통, 부정에 입각하여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테러란 무엇인가. 본 심포지엄은 냉전하의 테러가 패권국가의 구조적인 폭력에 의해 연쇄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점, 동시에 그러한 구조야말로 과거의 폭력을 잊게 하며 허용하게끔 해왔던 역사를 주시해 왔습니다. 국가가 테러리즘의 주체가 되어 온 역사를 이제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여수에서 연속적으로 개최된 제5회 대회에서, 우리들은 한국전쟁을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냉전기에 초점을 두고, 한국전쟁을 포함하는 이 시기 동아시아 민중들의 수난과 투쟁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히 일본대회에 있어서는 한국전쟁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 일미안보조약에 의해 구조화된 전후 일본의 위치를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본 사무국에서는 본 대회의 개최에 앞서, 이러한 검증작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공개학습회'를 5회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하여 왔습니다.

【제1회】 2001년 1월28일 (일)

테마 「전쟁과 민간인 학살 - 20세기의 현황과 21세기의 전망」

강사 : 강정구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중심으로>

【제2회】 2001년 4월 7일 (토)

테마 「하나오카 (봉기) 사건을 지켜 본 폐광 도시」

강사 : 猪八戒(하나오카 "봉기"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일본의 패전직후부터 냉전기에 걸친 일·한·중 삼국민중의 접점과 관련성>

【제3회】 2001년 6월 9일 (토)

테마 「동아시아의 냉전과 젠더」

- 타이페이에서 공창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국제액션포럼」 보고를 중심으로

강사 : 미즈시마 노조미 / 소다 마사토

<냉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젠더 문제에 대한 보고>

【제4회】 2001년 10월28일 (일)

테마 「한국전쟁·일미안보체제와 노동자들의 투쟁」

강사 : 고시로 슈이치

<한국전쟁기 일본민중의 투쟁에 관한 구체적인 양상>

【제5회】 2002년 2월10일 (일)

테마 「일본의 현상과 본 심포지엄 개최 의의」

강사 : 스에카와 키요시

이제 오늘부터 국제 심포지엄·일본대회가 개최됩니다. 내일 오전 세션은 「일미안보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동아시아의 냉전시대」를 주제로, 한국전쟁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강화된 동아시아의 냉전구조에 일본이 어떻게 관계하였으며, 어떻게 아시아민중과의 대극에 전후일본의 체제가 구축되었는가는 참으로 “현실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걸친 일본의 양태를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또 오후에는 군사기지화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후’에 여성들이 어떻게 자리 매김 되었는가, 그 구조적인 성폭력을 검증할 것입니다.

3일째 오전에는 한국전쟁하에 전개된 일본본토에서의 민중투쟁의 역사를 발굴·검증을 통하여 동아시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새로운 민중연대운동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그밖에, 옵션으로는 4일째 간사이지역에서의 민중항쟁 흔적을 답사할 것입니다만, 현재 군사시설과의 물리적인 연속성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개회 전에 이미 ‘치안유지법’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만, 내일 오후에는 교과서문제, 미군기지의 동아시아적 전개, 대만해협 양안문제를 비롯한 매력적인 워크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의 ‘화해와 통일’, ‘평화와 인권’에 대한 역류가 이제 세력을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에서의 ‘화해·통일’의 프로세스를 보다 공고히 하고, 나아가 중국양안관계, 또는 동아시아와 일본과의 화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방향 전환이 전혀 없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친 발표자들의 다채로운 발표와 참가자에 의한 진지한 토의가 이러한 전망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본 사무국의 취지와 경과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념강연】

세계를 뒤덮는 아프가니스탄 폭격

김석범 (작가)

나는 지난 9월 11일의 NY테러 그리고 10월 9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이후 하나의 깊은 절망감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었다. 이 절망감은 청년기 특유의 인생에 대한, 또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실존적 절망이라든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히 눈에 보이게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압도적인 폭력, 어찌할 수도 없는 물리적인 시스템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런 절망이다.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폭력의 시스템은 미국의 극단적인 부와 힘에 의해 뒷받침된 체제와 겹친다. 나는, 실제로, 최근 한 두 달 동안, 두터운 공기 층이 마치 강철과 같이 진득하게 압축되어서 몸뚱이의 자유를 빼앗은 채 조여들어 오는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여있었다. 그것은 완만하지만 끊임없이 조여들어 오는 가위눌림 같은 정신상태였다.

멀리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제한된 미디어를 통해서나마 전달되는 영상의 저 편에 있는 것. 모든 인간과 모든 존재에 대한 파괴와 황폐. 저 땅에서 살육을 저지르고 있는 힘은 전 세계에, 그리고 이 일본에도, 동아시아에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이 「악의 축」이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한 가운데 하나인 조선반도 북반부를 언제든지 표적으로 삼겠다는 태도에도, 그것은 표명되어 있다.

「9·11」은 미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의 중심부에 대한, (비대칭을 세계의) 증오와 원한의 마그마로 변한 적대자로부터의 공격이고, 그것은 그 자체가 인과적인 보복의 의미를 갖는다. “아프가니스탄의 불상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치욕의 나머지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것은 이란 영화 ‘칸다하르’의 감독 마흐말바프(Makhmalbaf)가 자신의 저서에 붙였던 타이틀인데,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 그 전망대가 ‘탑 오브 더 월드(Top of the World)’라는 별명을 갖는 세계무역센터의 붕괴는 현대의 바벨탑의 붕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테러 실행범들만이, 승객이 아무도 없이, 그리고 무인(無人)의 빌딩에 자폭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있다. 펜타곤만을 노렸다면 모르겠지만, 한 순간에 3천 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유가 어찌됐건, 잔혹한 살인 행위에 다름없다.

테러 실행자들이 스스로를 천상(天上)의 영생(永生)에 맡기고, 승객만을 동행자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들이 그들과 같이 영생(永生)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은 테러리스트 이외의 타당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보복이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스스로에게 기인한 보복을 단절시킬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미국은 ‘새로운 전쟁’

을 시작했다. 정(正)과 사(邪)의 이원론에 근거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이라고 일컫고,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의가 곧 세계의 정의라고 하는 우월자(優越者)의 타자부재(他者不在)의 의지가 있다.

세계 최빈(最貧)의 기아와 난민으로 시달리는, 몹시 황폐해진 국토를 표적으로 한 최초의 공격은 하루 동안에, 아라비아 해상에서 발사된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가 50 발. 한 발에 120만 달러나 된다. 공격 시작 직후의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전체 시세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록히드, 마틴 등의 군수산업 주에 매수 주문이 집중했다고 한다(『東京新聞』2001年10月9日夕刊). 미국의 2003년도 국방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0퍼센트(480억 달러)증액. 이는 곧 군산공동(軍産共同)의 준(準) 전쟁 예산으로,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일까.

미국은 미사일로 아프가니스탄 측의 방공 능력을 먼저 친 후에 직접적인 공중 폭격에 나섰다. 서글픈 것은 세계의 대국이, 일본,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각각의 국내 사정으로 인해, 구미 여러 나라와 반 테러 동맹을 형성하고 아프가니스탄을 포위해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마치 상처 입은 한 마리 어린 양을 맹수들이 혼적조차 남기지 않고 갈기갈기 뜯어 먹어치우는 꼴이다. 이런 일들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원자폭탄 급의 위력을 갖는다고 하는 ‘데미지 커터’(광역 파괴 성능 폭탄)나 한 발에 202개의 소폭탄을 채워넣은 클러스터 폭탄 등으로, 이미 더 이상 폭격할 목표가 없다고 할만큼 철저하게 파괴시켰다. 무고한 민중을 뉴욕의 3천 여명의 희생자를 웃도는 수 천명을 살해한 것뿐 아니라, 부상자와 그 밖의, 죽음 이외의 엄청난 잔학(殘虐)과 비참(悲慘)이 과거의 비참을 덧칠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잠정 정권이 발족한 현재에도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탈레반에 대한 승리 선언을 했지만 그것은 마치 레슬링 선수가 잣난아기의 손목을 비틀어 꺾으면서 승리를 자랑하는 짓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정신의 빈곤을 뭐라고 해야 할지.

NY테러는 과연 빈 라덴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증거는 아직도 나와 있지 않다. 용의만으로, 주변으로 행동반경을 넓히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탈레반 측에서 빈 라덴의 범죄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그를 인도할 것이고, 제3국으로의 탈출, 국제법정에서의 재판에 동의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일축하고, 한 나라를 실질 지배하고 있는 정권을 군사력으로 괴멸시켰다. 왜, 빈 라덴의 네트워크와 관계가 있다고 해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NY 테러를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이토록 심한 파괴와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노엄 촘스키는 미국이 세계의 테러 국가의 우두머리로서 지금까지 세계의 각처에서 어떤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를, 『9.11 미국에게 보복할 자격은 없다』(山崎淳번역) 라는 저서에서 엄정(嚴正)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의 보복 공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RA (아일랜드공화군)의 폭탄이 런던에서 폭발했을 때, 서(西) 벨파스트를 폭격하라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또 IRA 자금의 대부분은 보스톤에서 나오고 있지만, 보스톤을 폭격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범절차를 다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방법이 취해졌고, 테러의 배후에 가로놓인 문제를 처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연방 빌딩이 폭파되었을 때, 중동을 폭격하라는 소리가 높아졌다. 범행이 중동 출신 사람의 소행으로 밝혀졌다면, 틀림없이 폭격이 가해졌을 것이다. 범행에 국내의 극우 무장투쟁집단이 관계된 것으로 밝혀지자, 몬타나나 아이다호를 격멸, 말살하라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다. 대신 수사가 이루어졌고, 범인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판결을 받았다. 범죄의 배후에 있는 불만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

촘스키를 따라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미국 스스로가 폭력의 순환을 단절시키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미국에게 직접, 간접으로 국가테러를 당해온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와 민중이 그 힘만큼 미국에 폭탄을 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남, 북조선도 그리고 남쪽의 제주도 출신인 나 자신도

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폭격을 가한 나라를, 「전쟁은 평화」(아른다티로이, 『世界』2002년 1월호)에서 인용한다.

“중국(1945-46, 1950-53), 조선(1950-53), 과테말라(1954, 1967-69), 인도네시아(1957), 쿠바(1959-60), 벨기에령콩고(1964), 페루(1965), 라오스(1964-73), 베트남(1961-73), 캄보디아(1969-70), 그레나다(1983), 리비아(1986), 엘살바도르공화국(1980년대), 니카라과(1980년대), 파나마(1989), 이라크(1991-99), 보스니아(1995), 수단(1998), 유고슬라비아(1999),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자가 300만. 조선 전쟁에서는 사망자 약 150만, 부상자 3백만. 북조선에 대한 철저한 응단폭격은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은 남아 있지 않다”고 미국 지휘관이 큰 소리 칠 정도로까지 온 나라가 폐허로 변했다. 미국의 진점, 간점의 국가 테러에 대해서, 국가적인 대항수단이 되는 전쟁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 당하는 대로 굴복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테러는 약자의 무기라고 한다. 테러 행위는 자폭도 포함해 스스로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루어진다. 식민지 시대의 조선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한 독립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테러 투쟁이 이루어졌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1909년 10월)이 그것이고, 민족 독립 투쟁 조직인 의열단의 결성(1919년 11월), 강우규의 조선 총독 사 이토 마코토 암살 미수 사건(1919년 9월), 김상옥 종로경찰폭파사건(1923년 1월), 이봉창 의거(일본 천황 암살 미수, 1932년 1월), 윤봉길 의거(상해 홍구 공원 폭파 사건, 1932년 4월) 등등. 실행자는 전부 체포, 사형됐다.

클 머리에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말한 것은, 21세기 초두부터 미국이 같은 지구상의 인간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잔학 행위를, 정의의 이름 아래, 그 대항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저지른 인간성에 대한 문명의 탈을 쓴 야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의 죄 없는, 하물며 굶주림에 직면해 삶을 빼앗긴 사람들을 신행 폭탄으로 무참히 살육하는데 어떠한 인간적인 이유와 명분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가 일본의 패전에 필요 불가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 원폭 투하 이후 반 세기 동안, 미국은 그에 대해 어떠한 인류적 반성을 했으며, 스스로의 행위에 교훈을 얻어왔을까? 그렇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전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공습. 미국의 행위에서 나타난 인간성의 퇴보, 퇴폐의 상징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차별 공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프가니스탄 공습은 세계를 뒤덮는다. 미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 사용도 불사하겠다는 새로운 핵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년말의 “2002년은 아프가니스탄에 한정되지 않는 다른 지역에도 파급되는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는 부시 대통령의 망나니같은 도발적 발언에, 우리들은 단지 기막혀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핵 사용의 냄새를 풍기는 이 발언의 구체적인 착지점이 어디인지. 핵 공포의 상호억제시스템이 성립돼있던 소비에트와의 양극시대가 그렇다는 생각조차 든다.

21세기 후반은, 인류를 파멸의 구렁으로 빠뜨렸던 제 2차 세계대전의 교훈으로부터, 세계의 항구평화를 이념으로 하여 새롭게 국제연합(UN)이 탄생했고, 유럽에서는 각국의 패권을 서로 억제하기 위한 EU가 형성되어, 올해부터 유로 유통이 실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점에 서있는 미국의 일극지배시스템이 세계를 뒤덮고, 그에 반항할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절망을 수반한다. 그리고 절망은 nihil리즘을 낳는다. 나는 테러에 몸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서운 절망에 불충분하나마 일말의 공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테러는 nihil리즘이다. nihil리즘의 미래는 공무(空無).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절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테러리즘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의해 초래된 이 절망감은 한편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 일으킨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힘을 줄 것 같다. 그리고 이 절망감을, 바닥으로 추락하는 무력감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길로, 그리고 그 투쟁의 연대로 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21세기를 20세기에서 이어지는 폭력과 전쟁의 세기로 만들 것인가. 인간성의 보편(普遍)의 옹호를 위해서, 국가 테러라는 무기가 아닌 평화 헌법이라는 무기를 갖는 일본의 역할은 참으로 크다. 평화는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끊임없는 투쟁을 의미한다. 일본이 더욱 더 평화헌법이라는 이념으로 중무장을 하고,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확실한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불안에 휩싸인 세계 평화의 위대한 요새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2월 23일

오전 : 미일안보조약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동아시아의 냉전시대

오후 : 동아시아의 냉전과 젠더

저녁 : 워크숍

- ① 「전후 일본의 아시아 인식을 묻는다」
- ② 「동아시아 미군기지의 새로운 전개」
- ③ 「중국 양안 문제와 미·일의 관여」
- ④ 「민간인학살사건과 명예회복의 현황」

미일안전보장과 전후일본의 보수체제

코케츠 아츠시 (篠塚 厚, 야마구치 대학)

지금 일본의 정치는 '새로운 전전(戰前)!'을 맞이하고 있다. 전후 일본의 정치는 미일 안보 체제에 의해 규정받고 유지되었으며 변화되어 왔다. 지금의 보수주의는 미일 안보체제의 세계화와 군사 동맹화의 노선을 설정하면서 종래 내재되어 온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려고 하고 있다.

본 보고의 목적은 미일 안보조약과 전후 일본의 보수체제와의 상호 연관성·상호 규정성을 논하고자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있어 오늘날의 위기적 상황을 염두에 두며, 현 단계에 있어서의 일본 보수체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전후 일본정치와 미일 안보조약의 위치

1) 천황제 존치와 미일안보체제 성립 전사

먼저 전후 일본정치에 있어서의 미일 안보 조약의 자리 매김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면서 중요한 점부터 논하겠다. 전후 일본의 보수체제의 출발점은 패전과정에 있어서의 천황제 존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농지개혁·재벌해체·교육민주화·육해군 해체 등의 점령정책에 의해 전전기(戰前期)의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제 기구의 개편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천황제가 존속됨으로서 이를 형성한 궁중·중신 그룹을 중심으로 한 보수세력은 사실상 온존하게 되었다.

존속된 천황제는 동시에 전전기의 보수 정치가와 관료층을 전후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

1) 이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 군국주의 시대를 말함.(편집자주)

당하게 된다. 더구나 전전기 보수세력은 스스로 천황의 권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성단'에 의해 일본의 패전 직전에 육군 주전파로부터 정치 주도권을 탈환했다. 전후 보수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이다.

천황제의 존속이 분명히 외압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속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보수세력의 동향은 전후 일본의 보수정치의 존재 형태에 중요한 성격을 부여하였다. 동시에 '상징화' 된 천황의 새로운 정치적 역할도 준비하게 되었다. 미국에 대한 오키나와의 군정 통치의 요구, 사실상 미일 안보 조약의 계기가 된 천황제 메시지 등, 일련의 천황의 발언 및 정치행동은 전후 일본의 보수 구조의 골격을 형성하였다. 전후 미국의 대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철저한 비군국주의화와 민주화로 대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경제적 능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도 일본의 지위를 아시아의 소국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었다.

일본의 정치세력이 친미적인 것은 당연시되었지만, 독립국가로서의 전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약을 가하였다. 즉 일본은 아시아의 '반국가'(semi-state)로서 태평양의 한쪽 구석에 놓여질 운명이었다. 물론 전후에 살아 남은 보수세력은 그와 같은 아시아의 '반국가' 일본의 지위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천황제를 핵으로 하여 일본의 재건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 기회는 의외로 일찍 찾아왔다. 1949년 10월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이다. 그로 인해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포스트 중국으로서 일본의 존재가 급부상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신하여 아시아의 거점으로서 일본을 절대적인 동맹국으로 육성할 방침을 채택하고 당시의 대일정책을 뒤집었다. 소위 '역코스'이다. 이 '역코스'의 전형적인 사례가 미일안보조약 체결과 그와 연동한 일본 재군비이다.

2) 보수세력을 소생시킨 미일안보

그러나 미국은 큰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즉 일본의 철저한 비군사화, 즉 민주화와 평화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일본점령하에서 제정된 일본국 헌법의 존재였다. 일본국 헌법에 비무장 중립주의를 규정하는 제9조를 둔 것은 군국주의의 온상인 천황제를 존속시키는 것을 비판하고 경계했던, 과거의 미국의 동맹국들, 즉 미국과 함께 군국주의 일본과 싸웠던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연합국의 불안과 비판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더구나 미국이 대일정책의 기본인 비군사화 정책을 수정하고,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재군비를 개시하도록 한 것은 연합국간의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은 그와 같은 알력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본의 재군비의 목적은 공산주의 일본에 대한 침투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반복해서 설명하였다. 동시에 재군비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촉진한다는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외의 여론을 염두에 두고, 일본국 헌법을 일체 수

정하지 않았다. 일본의 재군비화와 일본열도의 미군기지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천황으로부터의 요청(천황메시지)을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재군비 및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에게 강제한 결과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일본의 패전 과정을 리드한 요시다 시게루 등의 보수세력과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 요시다 등의 보수세력은 '성단'에 의해 아무런 상처 없이 보수세력으로 재생하게 되었다.

요시다 등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절대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사실 요시다 등은 미일 안보 조약의 체결 교섭의 과정에서 피점령국 대표의 자격으로 미국의 요청에 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확보하려 하였다. 즉 일본 정부의 군사비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면서, 미국의 재군비 요청에 응함으로써 미국의 대일 경제 지원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미일 안보조약 체결에 의해 구축된 미일 안보체제하에서, 경찰예비대로부터 보안대, 더 나아가 자위대의 창설로 이어지는 일본의 재군비 과정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60년대의 미일관계는 미일 안보에 따른 미국에 대한 전 국토 기지 대여 방식에서 상징되듯이, 일본이 아시아의 반공 방파제 국가로서 성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자본주의 아시아 최대의 시장으로서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일본에 있어서도 미일 안보체제는 확실한 경제발전을 담보로 하는 '경제 조약'으로서의 자리 매김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실제로 그와 같은 혜택을 가져온다고 적극적으로 받아 들었다. 즉 군사 안보의 측면보다도 경제 안보로서의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으며, 미일안보의 경제 메리트를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미일 동맹관계와 일본의 보수세력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일본 보수세력은 냉전구조라는 국제정치의 큰 틀 속에서 미일 안보체제를 지렛대로 이용하여 스스로의 이익구조를 구축하고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경제대국 일본을 달성했다. 국내정치에서는 이익에 따른 정치를 철저히 하면서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이끌어내, 장기적 정권안정에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대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모순을 잉태하였고, 현재 까지도 그 모순은 청산되지 않았다. 그 최대의 문제가 경제 격차의 문제이다.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에 전면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경제대국화의 길을 달려 왔지만, 일본의 제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 이외에 아시아를 대상으로 삼았다.

일찍이 일본이 침략한 식민지였던 지역에 수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출 상대국이 친미적이면서 친일적이어야 했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이나 필리핀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권위적이면서 개발독재형의 정권에 대해 철저한 지원을 미국과 연계하여 실행하였다. 일본은 주변 여러 국가들을 군국주의화함으로써 친미·친일정권을 유지시키며 그 정권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항상적으로 수출공세를 하였다. 사카모토(坂本義和)는 이것을 '주변 군국주의', '대체 군국주의'라고 지칭한다. 주변국들을 군국주의화하여 일본의 수출시장으로 삼고, 일방적

인 수출 초과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그로 인해 일본의 수출 주도형의 무역 구조가 정착하고 그것이 또한 일본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지탱시켜온 힘이었다.

미일 안보체제가 경제 이익에 연동하는 한, 일본의 보수세력도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안보와 경제의 깊은 연관관계가 일본의 보수세력의 강화와 보수주의의 민중으로의 침투를 결정 지우게 되었다. 물론 일본의 수출시장으로서의 타깃이 된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과의 무역관계로 일정한 이익배분을 받는 층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대신, 국내 산업은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민중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압정에 신음해야 했다.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의 경제발전을 담보로 보수주의를 유지하는, 한편 아시아의 민중들에게는 경제적, 정치적 억압을 초래했다. 거기에 미일 안보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2. 전후 일본사회의 변동과 미일 안보체제

1) 전후 보수체제를 담보로 한 미일 안보체제의 역할

다른 각도에서 본 미일 안보체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전후 일본의 보수체제를 유지시켜온 미일 안보체제의 첫째 역할은 전후 일본의 외교·군사 영역 뿐만 아니라 정치영역을 포함한 정책일반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것이다. 미일 관계가 변동하면, 곧 바로 미일 안보체제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변동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상대적 쇠퇴와 일본 자본주의의 확대발전에 의한 미일 경제마찰이 심화되는 속에서, 미일 안보조약이 일방성(편무성)에서 쌍무성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더구나 소련 붕괴에 의한 냉전구조의 종언에 따라 대소 동맹으로서의 미일 안보체제의 역할과 그 정당성이 심각하게 재고되었다.

미국의 대소 전략 강화를 목적으로 결정된 1978년의 '미일 방위협력의 지침'(구 가이드 라인)을 문제삼고, 미일 군사 공동작전 체제의 구축과 '싸울 수 있는 자위대'로의 전환을 도모하였다. 소련 붕괴 후 대소 전략의 소멸이라는 사태에 대응해서 1998년, '신 미일 방위협력의 지침'(신 가이드 라인)이 결정되어, 중동이나 한반도의 유사시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미일 안보체제의 두 번째의 역할은 전후 장기간 보수정권을 담당한 자유민주당에 의한 '55년체제'라 불리는 일당지배체제의 유지이다. 19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보수정당이 미국의 강한 요청을 받아 합당하고, 재계로부터도 풍부한 정치자금의 제공을 받아, 관료제의 정책 능력을 배경으로, 1993년 7월까지 일당지배를 지속하였다. 자유민주당은 '친미반공'을 정당의 조직 원리로 하고, 재계와 관료와의 삼각 동맹을 배경으로 경제성장 노선 위에 형성된 거대한 성장이익을 지역에 분배하는 이익유도정치를 정착시켰다. 거기에는 1960년의 안보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미일 안보의 시비나 정당성을 둘러싼 자민당, 즉 보수세력과, 일본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혁신세력간의 대립·항쟁이 계속되었지만, 안보개정 이후 고도경제성장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체제 선택의 문제가 후퇴하고, 동시에 보수대 혁신이라는 대립 구도도 붕괴하였다.

미일 안보체제의 군사적 측면이 희박해지고 대신에 그 경제적 측면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보수세력이 거듭 주장한 것은 '안보변영론', '안보효과론'이었다.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한 안정된 미일 경제관계가 일본의 경제 발전의 유력한 최대 요건이었다.

소련 붕괴 후 미국의 세계전략이 크게 변동하는 과정에서, 자민당도 포스트 냉전 시대의 보수체제의 존재 양식을 둘러싼 당내 항쟁으로, 1993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패하게 된다. 그것은 종래 형태의 보수체제가 냉전구조라는 종래의 세계정치체제를 전제로 성립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즉 1951년 이행에 있어 일본의 보수체제와 보수정치는 미일 안보체제라는 외교·군사 영역에 속하는 2국간 조약에 의해 그 틀이 규정되고, 또한 그러한 큰 틀 속에서 운영되어 온 정치체제였던 것이다. 일본의 정치구조는 안보체제하에서의 미국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에서 기인하는 여러 기지 피해와,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전쟁,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 개시된 미군기에 의한 아프칸 공습 등을 포함하여, 전후 일본이 여러 형태의 미국의 전쟁에 간접적으로 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로의 길은 그 표면적인 목표와는 달리 끊임없이 '반(半)전쟁국가'로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일본국 헌법의 하위법인 미일 안보조약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법인 일본국 헌법을 그 내부로부터 공동화시켜왔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상황을 용인해 온 전후 일본의 보수세력의 책임을 반복해서 되묻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후 일본사회의 4중 시스템과 '2중의 냉전 시스템'

가토 테츠로(히토즈바시 대학)는 전후 일본사회의 실태를 설명하면서 '4중 시스템의 상호관계'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성립한 순서로 이야기하자면, 첫째, 글로벌한 동서 냉전구조, 둘째, 지역적인 미일 안보체제, 셋째, 내셔널한 자민당 정권, 넷째, 사회적인 회사주의가 그것이다. 여기에서는 가토의 어프로치를 참고로 하면서, 필자 나름대로의 이해와 분석을 해 나가겠다.

가토에 의하면, 냉전구조의 시점에서 미일 안보조약과 자민당 일당 지배를 '국내 냉전 체제'로 보고 있다. 즉 미소 냉전 구조라고 하는 국제정치의 틀에서, 일본의 자민당 일당지배 체제가 실현되고, 보수 이데올로기의 민중에 대한 침투도, 자위대의 증강도 일본국 헌법 하에서 가능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나는 일본의 전후 정치는 국제적 냉전과 국내적 냉전이라는 '이중의 냉전 시스템' 속에서, 사실상 일본국 헌법이 주장하는 평화주의의 목표가 봉살(封殺)되고, 자위대라는 일본군사력의 증강이 강행되었으며, 재군비와 동시에 유사(有事)법제 정비에 대한 연구와 법제화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 '2중의 냉전 시스템'에서, 전후 일본이 착수해야 할 최대의 과제인 전쟁 책임문제의 해결 노력을 거의 포기해 버린 것이다. 독일이 전후에 독일의 유럽화를 표방하면서, 전전의 '유럽의 독일화' 정책을 철저히 반성하고, 유럽으로 돌아감으로서 평화국가 독일의 재건을 이루려고 한 것에 비해, 일본은 전전의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지 않고, 일본의 미국화에 분주했다.

일본은 아시아에 대한 침략 전쟁을 망각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몰두하면서, 미국의 어깨 너머로만 아시아와의 접점을 구하려는 자세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냉전 구조가 해체되자 냉전 체제에 의해 억제되어 온 전쟁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분출하게 되었다.

다음의 문제는 글로벌한 동서 냉전구조의 종언이 지역적인 미일 안보체제, 내셔널한 자민당 정권, 사회적인 회사주의의 존립조건을 근거에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일 안보체제와 자민당 정권, 그리고 회사주의, 즉 일본자본주의도 냉전구조에 의해 그 존립이 담보되어 왔다.

3) 지역적인 미일안보에서 글로벌한 미일안보로

주의해야 할 점은 글로벌한 동서 냉전 구조의 종언이 지역적인(2국간의) 미일 안보체제와 내셔널한 자민당 정권에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혁을 강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일 안보체제나 자민당 정권이 냉전구조라고 하는 하부구조에 올려진 상부구조였기 때문이다. 하부구조의 변동은 그대로 상부구조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미일 안보체제는 미일 신 가이드라인의 책정으로부터 1999년의 주변사태법, 더 나아가 2001년의 테러 대책 특별 조치법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재정적·재강화가 강행된 결과, 아시아 지역 뿐 만 아니라, 세계적 규모의 전개를 염두에 둔 미일안보의 세계화, 글로벌화가 추진되었다.

자민당 정권은 1993년, 1955년 이후 유지해 온 정권을 비자민 연립정권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보체제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은 안보재평가 시기에 등장한 비자민 연립정권의 성립을 미일 안보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은 1991년의 걸프전쟁 당시, 전비의 지출에는 응했지만, 평화헌법의 존재를 내세워 미국이 요청하는 '국제 공헌'에 충분하게 응하려고 하지 않은 카이후 자민당 정권을 불신하고, 그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냉전구조의 종언에 대응한 지역적인 미일 안보를 냉전후 시대에 적합한 질과 내용을 가지는 체제로 바꾸려고 시도하였다. 즉 일본을 아시아 군사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시아 최대의 동맹국으로서 하여, 새로운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를 서둘렀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시도가 미일 안보의 재규정이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의향을 받아들여 주변사태법(1999년) 등 일련의 유사법체제의 정비를 강행했다. 미일 안보의 글로벌화는 일본국내에서는 '국제 공헌'론으로 제기되었다.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국제 국가 일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군사력 사용을 존립 조건으로 하는 '보통 국가'론이 주장되고, 오늘날 테러 대책을 핑계로 자위함대의 인도양 파병으로 구체화된 것처럼, 파병국가, 즉 군사국가로서의 측면을 전면에 드러냈다.

글로벌한 동서 냉전구조의 붕괴는 지역적인 미일 안보체제를 근거로부터 흔들고, 동시에 구태의연하게 내셔널한 이익유도정치로 일관하면서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해 온 자민당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게 되었다. 현재 자민당을 주축으로 하는 3당 연립 정권이 끊임없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 등의 구호를 반복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민당 자체를 포함하여 일본의 보수구조 자체가 내셔널한 정당세력으로서의 존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인 회사주의에 관해 본다면, 이미 큰 기업은 다국적화 함으로써 존립을 보장받았고, 구조적 불황 하에서 세계경제는 다시 블록화가 진행되며, 동일 블록 안에서의 자본주의간의 연합형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의 흡수와 합병이 철저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동서 냉전구조에 의해 보호되어 온 기업 사회도 본격적인 국제 경쟁주의시대의 도래 앞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후 일본 사회의 총체 및 보수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토가 제기한 4중 시스템론은, 약간의 유보사항을 제외하면, 유효하며 중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의 전후 보수주의의 비자립성, 즉 종속성 때문에, 일본 국민은 항상 외부적 조건으로서의 미국의 세계전략에 의해 불안정한 변동을 강요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의 일본의 보수주의는 극히 취약하다. 문제는 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군사력에 의존할 위험성, 일련의 유사법제 정비에서 구현되듯이, 데모크라시의 존재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극히 내셔널한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정치사상이 뚜렷해질 위험성이 있다.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은 그 한 예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자가 현재 가장 관심을 가지는 있는 새로운 보수주의에 내재하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겠다.

3. 신보수주의에 내재하는 네오·군국주의와 네오·파시즘

1) 글로벌·군국주의에 대한 반항으로서의 테러리즘

미소 냉전 시대에 미소 양국은 제3세계에 대한 무기 수출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꾀하였다. 제3세계의 군비확장은 과잉 무기 수입으로 인한 경제의 압박, 경제적 고충의 심화를 낳았다. 통상적으로 무기 이전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군비확장은 무기 수입국 내부의 억압 정치의 온상이 되었다.

여기에서 최대의 문제는 항구적인 군비확장을 일상적 정책으로 만드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이다. 이것은 일종의 권력조직이다. 미국의 국내정치는 군산 복합체에 의한 병기 생산과 무기 이전을 불가피하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하여 전쟁 정책을 채용하도록 강요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군부와 산업의 상호의존 관계를 국내의 주요 정치구조로 정착시키려 한다. 독일의 정치학자 쾰프는 이러한 구조를 '이익구조'로 칭하며, 그것이야말로 국제정치의 군사화를 초래하는 원천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익구조'가 존재하는 한, 선진제국에서 발전도상국으로, 아니면 제3세계로부터 다른 제3세계로의 무기 이전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무기를 매개로 한 분쟁이 다발하는 구조가 정착해가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무기 이전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군사적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고,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도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조가 동맹관계라는 이름의 지배·종속의 관계를 잉태하고,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자립한 외교정책의 전개에 여러 제약을 가한다. 그 구체적인 예가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안보조약이다. 이를 배경으로 미국의 대중동정책과 대아시아정책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더블 스탠더드(이중 기준) 정책이 추진되었다. 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무기 이전을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행하여,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미국의 패권주의를 관철하려는 정책이 강행되어 왔다. 이번의 테러 사건의 배경에는 이와 같은 미국의 더블 스탠더드에 기인하는 억압과 빈곤이 본질적 문제로 가로 놓여 있다.

이번의 테러사건에 의해 일본의 보수세력이 오랜 기간 현안으로 삼았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돌입하게 되었다. 용서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것은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가 미국의 그러한 더블 스탠더드의 전략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해온 것의 연장이다.

미국의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권력 조직은, 국가의 형태와 발전단계 또는 그 경제시스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군사주의적인 가치의식과 사상을 육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군사주의로 기울어지게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군사화(Militarization)을 촉진하게 되었다. 일찍이 미일 개전의 해인 1941년에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해롤드·라스웰이 주장한 '병영국가'(garisson state)론은 독일 전체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전후의 미국도 '병영국가'화 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 트리스트램·코핀은 1946년 『무장사회』를 저술하여 말 그대로

미국 사회가 군국주의를 체질화한 국가인 점에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의 테러사건의 배경에는 전후 미국의 세계적 차원에서 군국주의의 전개에 대한 반항이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2) 글로벌한 전개가 불가피한 군국주의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에서 특히 뚜렷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조건반사적인 군사행동의 결정과 행사였다. 냉전체제 종언후의 미국의 군사전략은 관여와 확대를 기조로 하는데, 그 배경에는 군사적 존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군국주의 정신이 있다. 걸프전쟁에서 이번의 '보복전쟁'에 이르기까지, 군국주의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국가와 사회가 군국주의와 뿔레야 뿔 수 없는(抱合)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이 군국주의와의 이런 관계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에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 실태를 글로벌·군국주의라고 호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번의 '보복전쟁'에서 나타난 미국과 영국의 태도에는 글로벌·군국주의를 넘어서 글로벌·파시즘으로 나아갈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한다. 군국주의가 하나의 가치체계와 사회적 가치로서 군사가 특화된 사회와 사상을 나타내는 용어라면, 군국주의보다 광범한 개념과 사상으로서 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주의를 기조로 하는 정치시스템 전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현상에는 파시즘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몇가지 사항을 유보해 두고자 한다. 적어도 현대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은 기존의 자본주의를 기본적으로 수정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재구축하기 위하여 민중의 주체성 자발성을 최대한으로 말살한 후에, 미디어 선전을 동원하여 대중 조작을 철저히 행한다. 자유주의의 경우에도 그 자유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특별히 한정된 의미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조직·집단에 한정되며,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자유는 아니다.

전쟁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군국주의의 사상과 행동은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적 특색이기도 하지만, 파시즘은 군국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면서 동시에 자유·평등·공존을 거부하고, 통제 경쟁·패권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한, 전쟁 정책의 채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미국과 영국은 공동으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파시즘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하려고 한다. 이미 우리는 글로벌·군국주의의 세계화라는 수준을 넘어서 글로벌·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의 세계화라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리버럴·군국주의와 리버럴·파시즘

다른 각도에서 이상의 문제를 정리한다면, 현대의 민주주의와 전쟁의 상호관계이다. 일단 개인의 자유·평등·자율을 기본 원리로 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하고, 그것이 존중되고 보증되는 사회를 민주주의 사회라고 정의한다면, 민주주의와 전쟁은 공존 가능한 것이 된다. 일찍이 루이스·스미스가 『군사력과 민주주의』(1954년 간행)에서, 군국주의는 개인을 권위주의적으로 통제·동원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나 자치를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총력전 단계에서 특히 특징적이지만, 대량의 병사를 전장에 동원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시민의 병사화가 추진되었던 역사를 알고 있다. 즉 민주주의가 수 많은 개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작동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군사민주주의'(데모크라틱·군국주의)라고 부른다.

민주적·군국주의는 위로부터 강제된 민주주의로,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주주의와는 이질적인 것이다. 현재 우리들이 민주주의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은 실은 이 민주적·군국주의 그 자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영국에서 상징되는 민주주의는 실로 군국주의 아니면 파시즘에 의지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한 것 같은 내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을 쉽게 한다. 소말리아에의 '인도적 파병'이나 국제법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아프카니스탄에의 '보복'을 위한 전쟁 행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강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하나가 데이빗·에저튼(David Edgerton)의 '리버럴·군국주의론'이다. 에저튼은 「리버럴·군국주의와 영국국가」(『뉴·레프트·리뷰』 1991년 1, 2월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래 일관된 군사대국이었던 영국을 대상으로 삼아, '무장한 국민파'(nation in arms' lobby)를 중핵으로 하는 군국주의의 존재를 지적했다. 특히 그와 같은 군국주의를 자유주의와의 공존으로서 파악한다. 그는 영국과 미국에 공통되는 군국주의의 상징으로서,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와 전문가에 의존한다는 점, 공격대상을 적국의 군대 뿐만 아니라 그 민간인과 경제능력에도 설정한다는 점을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 공습이 전형적인 예로서, 전략 폭격의 개발자는 영국이었다.

중요한 점은 영국 전체의 정치문화가 분명 자유주의라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로 '국가문화'(state culture)가 존재하고,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 그 좋은 예가 리버럴·군국주의 및 그 확장으로서 과학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의 역사라고 말한다. 사실 영국의 국가 기구는 자유주의적인 일반 정책과는 별도로 근대적인 기술주의적인 군국주의를 끊임없이 육성해 왔다.

요약하자면 리버럴·군국주의는 고유의 보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세계질서관으로서의 팍스·브리타니카 아니면 팍스·아메리카나를 기치로 돌진하는 것을 최대의 특징으로 한다. 에저

튼의 논설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리버럴·군국주의 아니면 반동적 근대주의의 결정적인 지주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거대한 군산복합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버럴·군국주의 아니면 리버럴·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현상을 분석하려는 목적은 현대사회가 평화주의를 포함하여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개념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본질인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은폐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민주주의, 자유주의, 평화주의가 실은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에너지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사상과 운동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내가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그 본질에서는 항상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정치사상을 내재화시키고, 그것이 미일안보 체제에 의해 표출되지 못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냉전구조가 종언을 고하고, 미일 안보체제의 글로벌화가 선택되자, 내재하고 있었던 군국주의와 파시즘이 재등장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 일본의 보수주의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세련된 내용으로, 민주주의에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제 요소를 첨가하여, 그것을 전후 보수주의라고 칭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보수주의의 위험성은 이미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그리고 제2의 나카소네 내각이라 할 수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의 여러 정책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금은 부드러운 보수주의 안에서 미소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이 힘을 얻어 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현재의 위험한 보수주의를 시종 일관 유지시켜주고 미국형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으로 유도하는 매개체로서 미일 안보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미일 안보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은 이제 초미의 과제가 되었다.

참 고 문 헌

- 日本國際政治学会編 「冷戦」-その虚像と実像 (有斐閣, 1975)
- 秦郁彦編 「史録・日本再軍備」 (文芸春秋社, 1976)
- 竹前栄治 「日本歴史22 対日占領政策の形成と展開」 (岩波書店, 1977)
- 永井陽之助 「冷戦の起源」 (中央公論社, 1978)
- 日本政治学会編 「年報政治学 五五年体制の形成と崩壊」 (岩波書店, 1979)
- 森田栄之 「対日占領政策の形成」 (葦書房, 1982)
- 神田文人 「昭和の歴史8 占領と民主主義」 (小学館, 1983)
- 佐藤誠三郎他 「自民党政権」 (中央公論社, 1986)
- 五十嵐武士 「対日講話と冷戦」 (東京大学出版会, 1986)

安仁屋政昭他編『沖繩と天皇制』(あけぼの出版, 1987)
 坂本義和『軍縮の政治学』(岩波書店, 1988)
 加藤哲朗『ジャパメリカの時代に』(花伝社, 1988)
 原彬久『戦後日本と国際政治』(中央公論社, 1988)
 室山義正『日米安保体制(上・下)』(有斐閣, 1992)
 安保哲夫他『日米関係の構図』(ミネルバ書房, 1992)
 袖井林二郎・竹前栄治編『戦後日本の原点』(悠思社, 1992)
 中村政則『戦後史と象徴天皇』(岩波書店, 1992)
 藤瀬厚『現代政治の課題』(北樹出版, 1994)
 荒 敬『日本占領史研究序説』(柏書房, 1994)
 三浦陽一『吉田茂と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上・下)』(大月書店, 1996)
 豊下橋彦『安保条約の成立』(岩波書店, 1996)
 藤瀬厚『日本海軍の終戦工作』(中央公論新社, 1996)
 藤瀬厚『検証・新ガイドライン安保体制』(インパクト出版会, 1998)
 藤瀬厚『侵略戦争』(筑摩書房, 1999)
 豊下橋彦『安保条約の論理』(柏書房, 1999)
 藤瀬厚『周辺事態法』(社会評論社, 2000)
 藤瀬厚『有事法制とは何か』(インパクト出版会, 2002)

코케츠 아츠시(藤瀬 厚)

1951년 기후현 출생.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현재 야마구치대학
 독립대학원 동아시아연구과 교수, 인문학부 교수(현대정치사회의론·근대일본정치사 전공). 상술한
 「참고문헌」 이외에 주저로, 「総力戦体制研究」(三一書房, 1981), 「近代日本の政軍関係」(大
 学教育社, 1987), 「防諜政策と民衆」(昭和出版, 1991), 「PKO協力法体制」(梓書店, 1992),
 「日本陸軍の総力戦政策」(大学教育出版, 1999) 등이 있다.

韓國戰爭 休戰 直後 李承晩의 반일운동과 한·일 양국인의 연대

서중석 (성균관대·역사문제연구소장)

1. 머리말

한국인과 일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惡感情이나 反感, 蔑視하는 감정은 뿌리가 깊다. 2001년 12월에 발표된 동아일보 - 아사히신문 공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전체 응답자의 14%인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86%였다(일본인은 각각 38%, 46%).¹⁾ 이해 봄부터 再演된 후소사관 일본역사교과서 波動 때문에 더욱 악화된 것이겠지만,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1950년대에도 1960년대에도 크게 표출되었다. 1950년대의 반일시위는 李承晩정권이 배후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강렬히 지속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64-65년에 발생한 대규모의 한일회담 반대데모는 보수적인 종교인, 軍將星까지 참여하여 그야말로 學族的인 성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에는 朴正熙정권에 대한 반감도 작용하였다.

한국에서는 이승만정권 박정희정권을 모두 친일파정권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반일운동과 관련해서 두 정권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정희정권은 친일정책을 펴 表裏가 일치하였는데, 이승만정권은 노골적으로 반일정책을 폈다. 미국은 1950년대에도 6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일협력체제를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박정희정권과는 달리 이승만정권은 그것에 反旗를 든 것이다.

여당인 자유당 간부, 행정부 장·차관 및 관료에 친일파가 많고 이승만권력의 支柱인 경찰 간부가 대부분 친일파이어서 친일파정권으로 비판받은 이승만정권이, 더군다나 미국의 의사에

1) 동아일보 2001. 12. 25. 9쪽

반하여 맹렬히 반일운동을 편 것은, 1959년의 재일교포 북송반대시위를 제외하고는, 한국인한테 解明하기가 쉽지 않은 宿題다.

이승만과 한국인의 반일 감정을 격화시킨 한 요인으로 미국의 일본경제 부흥정책을 들 수 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한국과 패전을 맞은 일본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困境에 처하였다. 해방을 맞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데에는 상당 부분 일제의 침략에 책임이 있었다. 해방될 때까지 한국은 산업의 分布 상태나 자본, 시장, 기술 등에서 일본 경제에 종속된 식민지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예속된 경제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경제는 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경제는 또한 일제에도 책임이 있는 분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써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고, 남한은 경공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특히 전력은 연평균 발전력 기준으로 볼 때 남과 북이 8 : 92의 비율을 보여주었다.²⁾ 한국전쟁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에 決定打를 먹었다. 남과 북은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 공업 시설은 42%가 파괴되었다.³⁾ 한국은 1956년이 되어 서야 생산이 전쟁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있었다. 그 반면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이른바 特需景氣를 누렸다. 미군 주둔군 유지 등 간접 특수까지 보태면 1950-53년의 특수총액은 24억 달러에 이르렀다. 일본 경제는 1951년에 전전수준(1934-36년 평균)을 돌파하였다. 한국전쟁은 또한 일본 방위산업 재개의 기점이 되었다.⁴⁾

한국전쟁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대조적인 길을 걸었는데, 미국은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정책을 썼다. 한국에는 국방비와 연계된 소비품을 주로 원조한 반면 공산권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본의 경제 발전에 각별히 노력을 쏟았다. 심지어 유엔군사령부는 부산 부두 노동까지 일본인한테 맡겼고, 이승만대통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對韓 원조자금으로 일본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였다. 한국경제에 필수적인 생산 시설이 대한 원조자금에 의해 일본에 제공되기도 하였다.⁵⁾

그렇지만 경제문제는 이승만정권이 반일운동을 펴는데 주요 요인은 아니었다. 이승만정권에 의한 반일운동은 휴전이 성립된 1953년경부터 1950년대말까지 계속 되었지만, 특히 1954-56년 경의 반일운동, 1959년의 반일운동이 격렬하였다. 그런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1959년의 반일운동은 재일교포북송반대 시위이어서 비교적 이해하기가 쉽다. 필자는 이승만이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0년대 중반기에 대규모 반일운동을 전개한 주된 이유를 분석하고, 그러한 반일운동이 한국인의 반일감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2) 조선은행 조사부, 『朝鮮經濟年報』, 한국 서울, 1948, 1-101, 102쪽

3) 金大煥,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한국 서울 경남대학교국학연구원 연구소, 1991, 77-78쪽

4) 藤原彰 등, 『일본현대사』, 일본 東京 大月書店, 1995, 79-80쪽. 이와 함께 이숙중, 「한국전쟁과 일본의 경제적 성장」,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한국 서울 풀빛, 1992 참조

5) 울리버, 『이승만 秘録』, 朴日泳역, 한국 서울 한국문화출판사, 1982, 604-605쪽

그것은 냉전의 절정기에 한국인한테 일본이 무엇이었나를 해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와 함께 한국인과 일본인의 연대가 이 시기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적대 관계에 있지만은 않았다. 한국의 진보세력은 반일 성향이 강하지만, 일본인들의 평화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이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고 북한과 일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고마워하고 있다. 이 소론에서는 이 부분을 눈여겨볼 것이다.

2. 한국 침략,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일어나는데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요인은 한일회담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제공하였다. 한국정부나 한국인들은 일본측이 한일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인들은 일본측이 請求權 문제나 乙巳條約 등 한국침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조약의 무효 문제, 재일교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일본측의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정신적 심리적 자세에 대하여 더욱 불만을 가졌다. 일본인이 한국 침략에 대하여 사죄하기는커녕 1945년 이전에 한국인에 대하여 보여주었던 의식이 강고히 남아 있는 것에 한국인들은 한층 더 분격하였다.

이승만은 해방후 한국의 지도자로는 보기 드물게 친일파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았으며, 집권 초기에는 그다지 반일적이지 아니었다. 그는 정부 수립 직후인 10월 22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과거를 망각하려 할 것이며, 또한 망각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일본에 대하여 우호 관계를 가질 것을 호소하였다.⁶⁾ 그리고 1950년 1월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한일간의 防共 협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⁷⁾ 1951년 10월 20일 東京 점령군최고사령부(SCAP)에서 한일 예비회담이 열렸을 때, 한국측 수석대표 梁裕燦은 이대통령이 미리 작성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는데, 일본측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원한을 버리고 새 출발을 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원고는 “이제 우리는 화해하자”는 말로 끝맺었다.⁸⁾

그러나 한일회담이 순탄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양유찬대표가 원고를 읽은 직후에 나타났다. 치바(千葉浩) 일본측 교체 수석대표가 “화해하자”는 말에 “화해해야 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한 것이다. 일본측은 한국에 대하여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문이었다.⁹⁾ 예비회담은 별 성과없이 끝났다.

6) 공보처편,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한국 서울, 1953, 267-268쪽

7) 오오타 오사무(太田修), 「한일 청구권 교섭 연구」, 한국 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84쪽

8) 金東祚, 『回想 30년 한일회담』, 한국 중앙일보사, 1986, 22쪽

9) 李元德,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한국 서울대 출판부, 1996, 45쪽

한일 본회담(제1차회담)은 1952년 2월에 東京에서 열렸다. 그런데 일본측은 1952년 3월 6일 열린 5차 회담에서 在韓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 일본에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逆請求權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주장은 한국측의 청구권주장에 대한 맞불작전이자 한국에서 귀환한 일본인의 '사유재산 보상운동'을 고려한 것이었다. 한국정부가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 곧 평화선을 선포한 데 대한 불만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이 비준되기 이전에 한일 문제를 타결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일본은 한국측의 반발에 의한 현안 해결의 지연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기본 요인이었다.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에 한국측이 반발하면서 제1차 회담은 결렬되었다.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에는 한국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쟁으로 일본은 특수경기를 누리고 있는데 역청구권까지 제기할 수 있는냐는 감정이 잠재적으로 깔려 있었다.

제2차 한일회담은 미국의 중재 등에 의하여 제1차 회담이 결렬된 지 1년만인 1953년 4월 다시 열렸다. 주목할 것은 이 회담이 열릴 때만 하여도 이승만이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아이젠하워정부의 회담 재개 중재의 일환으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는 이승만을 東京에 초청하여 1953년 1월 요시다(吉田茂)수상과 회담을 갖게 하였다. 이때 이승만은 東京도착 성명에서 2년전의 일본 방문때 한 말을 상기시키면서 지난일을 용서하고 잊어버림으로써 양국을 위협하는 공산세력에 대항하여 결속하자고 역설하였다.¹⁰⁾ 한일회담에 대한 기대는 與野를 초월하여 있었다. 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이었던 申翼熙는 민주국가로서 한일 양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편견이나 감정에 구애되지 말고 대국적으로 明日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측 대표단이 신중하게 교섭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¹¹⁾

제2차 회담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는데, 한일회담은 제3차 회담에서 파국을 맞이하였다. 일본측 수석 대표 구보타(久保田貫一郎)의 발언 때문이었다. 1953년 10월 15일 구보타는 한국측의 역청구권 철회 요청에, 한국을 36년간 발전시켰기 때문에 일본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韓末에 일본이 '진출'하지 않았으면 한국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점령되어 더 비참한 상태에 놓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합국이 카이로선언에서 한국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한 것은 전쟁중의 흥분상태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구보타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이로써 제3차 회담은 10월 21일 결렬되었다. 일본정부는 한국측의 강한 반발에 대하여 구보타 발언이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나왔다. 오카자키(岡崎)외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구보타 발언에 대하여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구보타 발언으로 한일회담은 4년이나 표류하게

10) 공보처편, 앞의 책, 158쪽

11) 申翼熙, 『申翼熙先生演說集』, 한국 서울 국민대학동창회, 1961, 257-258쪽

12) 구보타발언은 한국측과 일본측에 여러 기록이 있다. 이 기록들은 기본 취지는 같지만 표현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구보타 발언에 대해서는 김동조, 앞의 책, 53-63쪽, 다카사키 소오지(高橋宗司), 『일본 망언의 계보』, 崔惠珠역, 한국 서울 한울, 192-196쪽, 이원덕, 앞의 책, 65-72쪽 참조

되었다.

구보타 발언은 일본 지배층의 한국과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수상 요시다의 후에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더욱이 1929년의 세계적 대공황은 우리의 지위에 대한 위협을 절감케 했고, 동시에 우리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게 한 우리 국민의 활력은 부단히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였으며, 따라서 중국 만주 태평양지역을 찾아나선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¹³⁾

요시다의 뒤를 이어 수상이 된 하토야마(鳩山一郎, 1954. 12.-1956. 12.), 이시바시(石橋湛山, 1956. 12.-1957. 2.)는 연합군최고사령부에 의해 군국주의자 등으로 분류되어 공직에서 추방된 바 있었다. 이시바시를 이어 1960년까지 집권한 기시(岸信介)는 A급 전범 용의자였으나 1948년 12월 도조(東條) 등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된 다음날 석방되어 1952년까지 정치 활동이 금지된 자였다.¹⁴⁾

3. 반공운동 일환으로 전개된 이승만의 반일운동

1950년의 재일교포복송반대시위는 반공·반북운동이자 반일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1950년대 중반 일본 하토야마수상 집권기에 거세게 일어났던 반일운동은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1953년 10월 구보타 망언이 나왔을 때 언론계 등 민간인들도 격렬한 반일 감정을 토로 하였으나, 정부에 의하여 부추겨진 반일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일본이 이승만과 함께 반공진영의 한 堡壘로 반소·반중·반북한의 기치를 선명히 내세웠더라면, 한국에서 전국적인 대규모 반일캠페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자로 철저히 冷戰시대의 陣營논리를 고수하였던 이승만의 냉전적 사고에는 반일보다 반공이 우선하였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반일운동이었던 3·1운동에 대한 이승만의 기념사나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기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쟁중에 있었던 1951-53년의 두 기념사가 반공 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954년에 발표된 이승만의 두 기념사에도 일제의 침략에 대한 비판이나 일제 잔재 청산, 한일 회담에서의 일본에 대한 태도 등에 별로 언급이 없이 여전히 반공과 북진통일을 역설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 뒤에 나온 기념사에서도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언급은 있으나 중요한 관심은 여전히 반공·반북에 두어져 있다.

13) 李庭植, 『한국과 일본』, 한국 서울 教保文庫, 1986, 47쪽에서 재인용

14) 朝日新聞東京裁判記者団, 『東京裁判』 하, 盧秉湜역, 한국 서울 太宗출판사, 1983, 204-205쪽 참조

반공운동과 반일운동의 결합과 관련하여 이승만이 1950년 1월 東京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1953년 1월 東京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한일 양국을 위협하는 공산세력에 대하여 결속하자고 호소하였던 바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3차 회담에서도 한국측은 반공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이 공산화하면 일본에도 위기가 닥치므로 한일 양국은 친선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⁵⁾

일본이 공산국가와 접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1954년에 일본에 대한 경계로 나타났다. 이승만은 한국 대만 등이 아시아반공연맹을 결성하려고 할 때, 미국의 의도에 반하여 일본은 반공국가로서 확실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초청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¹⁶⁾ 이승만은 이 시기에 일본의 侵略史가 共產徒輩들의 그것처럼 야수적이었다고 어느 때보다도 신랄히 일본을 비판하였다.¹⁷⁾ 이승만은 이 담화에서 일본을 공산당과 똑같이 반대해야 할 대상으로 놓았다.

이승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54년 하반기에 들어와 중국 소련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다. 일본은 불경기에 대한 타개책이나 한단계 더 높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무한한 잠재시장으로 평가되었던 중국과 소련 등을 주목하였다. 중국 소련과의 국교 정상화, 무역 개개를 대자본이던 중소자본이던 요구하였고, 그 점은 보수세력이나 혁신세력도 비슷하였다. 1954년 10월 日中·日소국교회북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12월에 등장한 하토야마내각은 대미협조라는 기조는 바뀌지 않았지만, 국민이나 경제계, 정계의 희망을 반영하여 일소 국교회복, 무역 개선 등의 자주외교를 주창하였다.¹⁸⁾

일본과 북한의 접근은 이승만정권이 대규모 반일시위를 일으킨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1955년 2월 북한 외상 南日은 일본과 경제 문화 교류를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달 후 하토야마수상은 “모든 국가와 민족과 가능한 한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5월에는 평양을 방문한 일본 민간인이 北日민간기업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설이 유포되었다. 일본국제통상촉진협의회에서는 북한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⁹⁾

4월 12일 이승만은 일본정부가 북한괴뢰와 문화 경제 등을 교류하면 한국정부는 일본을 적성국가로 규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반일시위는 1955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거세게 일어났다. 각지에서 일본의 용공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5월 30일 전국애국단체연합회(愛聯)에서는 일제용공정책 분쇄 국민대회를 열고, “우리는 적색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아세아에 제기되

15) 오오타 오사무, 앞의 글, 84쪽

16) 이승만, 「미국은 대일편중하면 자유국가 지지를 상실, 아세아집단방위문제에 대하여」(1954. 4. 28.), 「日대표 참가 거부관 낭설-아세아민족반공연맹문제에 관하여」(1954. 10. 17.),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1956, 22-24, 51쪽

17) 이승만, 「침략주의 일본은 憎惡의 対象」,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47-49쪽

18) 遠山茂樹 등, 『昭和史』, 일본 東京 岩波書店, 1959, 287쪽

19) 김동조, 앞의 책, 82-83쪽

는 일본제국주의자 재기를 철저히 분쇄하자”고 결의하였다.²⁰⁾ 6월 8일 京電勞組員 3천여명이 시위를 벌여 서울은 전차가 5시간이나 멈췄다. 이날까지 일본의 용공정책을 규탄하고 미국은 일본의 용공정책을 묵인하지 말라는 시위에 전국 각지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하였다고 보도되었다.²¹⁾ 1953년의 휴전협정반대시위나 1955년 하반기의 중립국감시위원단 축출시위, 1959년의 재일교포복송반대시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으나, 상당히 규모가 큰 시위였다.

4. 이승만권력의 강화

앞에서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많은 부분이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음을 고찰하였는데, 반공은 이승만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것이었다. 경찰을 앞장 세운 이승만의 폭압적인 권력은 냉전에 입각한 극우적인 반공통치에서만 가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극우반공통치가 없었더라면 이승만의 권력은 존립하기가 어려웠다. 이승만이 현실적으로 실현성이 불가능한 滅共·북진통일운동을 학생·대중을 동원하여 1950년대 내내 남한 각지에서 대규모로 전개한 것은 북진통일운동을 통하여 평화통일 논의나 통일운동을 분쇄하고 분단과 냉전을 강화하는 극우반공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²²⁾ 반일운동도 반공운동처럼 이승만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반일운동은 무엇보다도 이승만정권이 친일파 정권이라는 비판을 糊塗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에서 친일파는 일제의 지배와 군국주의침략에 복무한 자로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운동을 탄압하며 동족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민족반역자 또는 반민족행위자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국내에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은 친일파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미군정에 협조하여 해방직후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주장한 친일파 처단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후에는 한국인의 聲援을 바탕으로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무력하게 하여 친일파 처단을 有耶無耶하게 만들었다.

친일파정권으로 불린 이승만정권 아래서 독립운동자들과 그 가족 또는 유족들은 탄압과 감시를 받으며, 친일파들과는 대조적으로 몹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남한에서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던 한독당원들은 투옥되거나 탄압을 받았으며, 이승만정권에 의하여 암살당한 金九와 김구가 직접 만든 李奉昌 尹奉吉 白貞基 李東寧 등의 墓所가 있는 孝昌공원은 1956년에 工兵隊가 출동하여 운동장공사를 벌여 세인의 빈축을 샀다.

이승만은 친일파 처단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등용하였으며, 독립운동자를 탄압하여, 권력의

20) 한국일보 1955. 5. 31.

21) 한국일보 1955. 6. 9.

22)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역사비평』 1995 여름

도덕성이나 정통성에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반일운동은 이승만정권을 반일정권으로 만들어주었고, 친일파정권이라는 비판을 약화시켰다. 이승만은 또한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일본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이승만식의 반일운동을 비판하거나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세력을 친일파로 몰아세웠다.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은 구보타발언이 말해주듯 일본정부나 일본인이 과거의 침략과 억압, 만행에 대하여 죄의식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에 대한 비판이 쉽지 않았던 것도 일본측 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1954년 4월 7일 '5·20선거에 際하여'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근래에 와서 친일파 문제로 하여 누가 친일파며 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민간에서 혼동된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정시대에 무엇을 하던 것을 가지고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한 史蹟이 있을지라도 지금 와서는 그 일을 탕척(蕩擻)받을 만한 일이 있어 증명받을 만하면 전에 일은 다 불문하고 애국하는 국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줄 것이다”²³⁾

아무리 약질적인 친일파라도 지금 충성을 다하면 애국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재해석이었다. 이승만이 5·20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이 친일파를 적극 두둔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이승만은 1951년 12월에 친위정당으로 자유당을 만들게 했다. 그러나 소수당으로 국회에서는 힘이 없었는데, 1953년 휴전반대-북진통일을 외치는 거대한 시위운동을 벌이면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5·20총선 이후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헌 定足數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에 경찰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개헌은 자유당 국회의원이 많다고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뒤에 4사5입 개헌으로 알려진 개헌 과정이 말해주듯 자유당 의원 일부는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이승만한테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세력이 필요하였다. 일제와 미군정에 복무한 친일파는 그것에 적합하였다. 친일파로 5·20선거에서 당선된 李在鶴 韓熙錫 張璟根 등은 선거후 자유당 요직을 맡거나와, 이들은 결국 이승만정권을 붕괴시킨 1960년 3·15부정선거때에도 李起鵬과 함께 자유당 고위직에 있었다.

이승만은 5·20선거를 맞아 친일파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해주었거니와, 명백히 선거를 의식하여 반일적인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위의 특별담화를 포함하여 이들 담화에서 이승만은 누가 친일파인가를 밝혔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자거나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반이승만 활동을 하던 인사들이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²⁴⁾ 5·20선거후 이승만은 국회에

23) 동아일보 1954. 6. 8.

24) 이승만, 「국회의원 선거에 대하여」(1954. 3. 21.), 「개헌조건부로 입후보케 하라」(1954. 4. 6.), 「재일교포의 입후보에 대하여」(1954. 4. 28.), 「친일 친공분자를 嚴戒하라 일의 침략적 근성은 可惜」(1954. 5. 13.), 『대통령

서 개헌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소련 중국 일본에 의한 침략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빨리 민중의 뜻에 따라 개헌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였다.²⁵⁾

이승만은 1956년 正副統領선거에서도 반일문제를 심분 활용하였다. 흑색선전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그는 이 선거에서 유력한 라이벌인 민주당의 신익회후보와 진보당(假稱)의 曹奉岩후보를 전자는 친일파로, 후자는 용공분자로 몰아세웠다. “일본과 和同하여 국가의 독립과 자유를 발전케 하겠다든가 또는 공산당과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든가 하는 것은 다시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도 좋다는 것이나 또 소련을 조국이라고 하는 類의 언동”이라는 것이었다.²⁶⁾

이승만이 반일운동을 전개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정부가 그 소재를 제공한 점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대단히 강렬한 반일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한국인들은 이승만이 반공운동과 결합하여 반일운동을 편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이다. 비록 이승만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반일운동에 동원되었다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은 반일감정으로 그 운동에 참여하였다.

5. 한일 양국인의 연대

1950년대에 한국인과 일본인은 연대하여 활동하기가 어려웠다. 반일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던 시기에도 한국의 주요 야당 지도자들은 이승만의 반일운동을 비판적으로 보았고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希求하였다. 1956년 5·15정부통령선거를 앞둔 4월 1일 민주당의 신익회후보는 UP통신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일본지도자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 야당은 한일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할 때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한일 양국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부당한 감정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²⁷⁾ 진보당 지도자인 조봉암도 1956년 신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호전될 것이라고 믿으며 또 기대한다고 말했다.²⁸⁾ 조봉암은 진보당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에도 “원칙적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겠다고 믿으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진영 강화를 위한 정상적인 외교정책”이라고 믿고 있음을 밝혔다.²⁹⁾

1950년대에는 일제의 침략,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이가 심

이승만박사담화집』 2

25) 이승만, 「국민 公議를 존중하라-개헌문제에 관하여」(1954. 10. 19.),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2, 49-51쪽

26) 동아일보 1956. 4. 13. 한국일보 1956. 4. 29. 조선일보 1956. 5. 4(조건) 등 참조

27) 김동조, 앞의 책, 89쪽

28) 한국일보 1956. 1. 4.

29) 『현대 한국정치가 91인집』, 한국 서울 新潮社, 1957, 42-43쪽

했다. 구보타발언은 일본정부의 지지를 받은 것만이 아니었다. 좌파 사회당의 기관지인 ‘黨生活者’나 일본공산당의 기관지 ‘아카하타(赤旗)’ 어디에도 구보타발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그 점은 일본 언론의 논조에서도 비슷하였다. ‘週刊 産經’에 실린 익명필자의 글이나 ‘毎日新聞’에 실린 글을 제외하면, ‘朝日新聞’ 등 주요 언론은 구보타발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讀賣新聞’에서 기획한 紙上討論에서 구보타발언을 정당하고 서로 양보하라는 내용의 주장은 총 460통중 17통뿐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한국정부의 횡포를 지적하면서 맹반성을 촉구한 것은 당시 일본인의 의식을 읽게 한다.³⁰⁾ 일본인들은 전쟁에 대하여 피해자의식은 있었어도 침략당한 이웃 민족들에 대한 가해의식이 미약하였고, 오히려 침략을 ‘進出’ 등으로 묘사하면서 혜택을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 남한의 진보세력과 재일교포 사이에는 주장하는 바가 비슷하여 연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 1954년 12월 5일 일본에서 金三奎 南浩榮 李北滿 權逸 등은 한민족의 대동단결과 남북자유선거 등을 주장하며 남북통일운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民團(남한 지지)계, 民戰계(북한지지), 중립계(김삼규 이북만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위원회는 뒤에 조국평화통일촉진협의회(統協)로 개칭하였고, 민전이 總連(조총련)으로 바뀌면서 통협에 비협조적이지, 권일 등은 1956년 1월 ‘우리민주사회주의동맹’을 조직하였던바, 모두다 평화통일 또는 중립화통일을 지향하였다.³¹⁾ 이러한 주장은 조봉암·진보당의 평화통일,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한국의 진보세력과 재일교포가 연대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앞에서 시사한 바대로 이승만은 1954년 5·20총선을 앞두고 “모든 친일분자들을 일본에 모아다 보호해놓고 이 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권 搖亂을 선동하기를 마치 이전 李朝말년에 망명객들을 모아다놓고 남의 국모를 암살하며 침략하던 악습을 행하고 있다”고 선동하였다.³²⁾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재일교포를 매국노로 몰아부치는 데마고그였다. 이승만의 영구 집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밖에서는 反共血戰隊사령부 등의 명의로 반공캠페인을 벌였고, 국회에서는 잇달아 중립화통일안 배격 등을 결의하여 긴장상태를 고조시켰다. 실제로 1954년 12월 김삼규 등이 남북통일운동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을 때 국내신문은 이것을 일제 走狗들의 妄動으로 배격하였다.³³⁾ 이와 같이 살벌한 분위기여서 조봉암은 내심으로는 중립화통일방안을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끝내 말도 꺼낼 수 없었고, 평화통일이라는 말조차도 1956년 5·15정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서야 비로소 제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봉암이 재일교포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뿐만 아니

라 1956년 선거에서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로 浮上한 조봉암은 평화통일 주장이 주요 요인이자 빌미가 되어 1957년 1월 구속되었고, 결국 1959년 7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6. 맺음말

프랑스와 영국, 프랑스와 독일, 독일과 폴란드 등의 예가 말해주듯 국경을 맞댄 민족간에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처럼 두 지역의 주민간에 사이가 나쁜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한국과 중국 주민들간의 관계와 비교해보더라도 그렇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들은 전근대시기에도 상대방을 나쁘게 보거나 열등시하였지만, 특히 근대 사회에 들어와 그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1945년 해방 또는 패전을 맞은 이후에는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와의 관계처럼 두 지역 주민들간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많아야 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였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그러한 두 지역 주민들간의 불편한 관계를 한층 악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이 한일 양국인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그중에서도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켰지만,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한국인의 반일감정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인의 반일감정에 불을 붙인 것이 한일회담에서 보인 일본측 태도였다. 한국인들은 식민지형 경제에 분단과 전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웠는데 비해 일본측은 전쟁을 통하여 불끈 일어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측이 한국인의 배상 또는 청구권 주장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한국에 있는 일본인 재산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다는 ‘역청구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에도 불만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해방 이전 한국인에 대하여 입힌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사죄하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구보타 발언에서처럼 오히려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에 훨씬 큰 분노를 느꼈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냉전의식을 강화하고 극우반공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였고, 이승만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십분 활용되었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이승만이 한일문제에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는가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일본에 대한 보복정책으로 정작 일본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데 힘없는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두 차례에 걸친 대일 경제단교조치에 대하여 언론은 비판적이었다.³⁴⁾在日本대한국거류민단에서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재일교포를 지원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이승만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기도 하여 재일교포복송 반대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난 1959년 6월 민단에서는 자유당정권 불신을 결의하는 사태가 발생

30) 김동조, 앞의 책, 61, 67쪽; 다카사키, 앞의 책, 197-202쪽

31) 김삼규, 『조선의 진실』, 일본 東京 至誠堂, 1960, 24-25쪽 등; 권일, 『권일회고록』, 한국 서울 한민족, 1989, 156-196쪽; 朴慶植, 『해방후 재일조선인운동사』, 일본 東京 三一書房, 1989, 370-378쪽

32) 이승만, 「국회의원선거에 대하여」(1954. 3. 21.), 「친일·친공분자를 엄격하라」(1954. 5. 13.) 등 참조

33) 한국일보 1954. 12. 22.

34) 한국일보 1955. 8. 20, 사설, 「대일경제단교는 효과적인가」; 조선일보 1959. 6. 16. 석간사설 「대일경제 단교의 목적과 그 결과에 주의하라」, 6. 21. 석간사설, 「일본 왕래 금지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보라」 등 참조

하였다.³⁵⁾ 이승만이 일본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관심도 없었던 양유찬을 한일회담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도,³⁶⁾ 주일대표부 대사(제1대 鄭翰經, 2대 鄭桓範, 3대 申興雨, 5대 申性模) 또는 공사(4대 金龍周)에 역시 문제가 있는 자들을 임명하여 불명예스럽게 단명으로 끝난 것이나 부패 무능한 柳泰夏를 대사로 임명한 것도³⁷⁾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愚民觀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승만이나 그의 추종자에 불과한 외무장관 曹正煥, 공보실장 葛弘基 등이 일본이 북한 중국 등과 합하여 침략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우민관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이승만은 “만일 노동자들이 동맹파업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지금 이북과 일본의 공산당들이 혼란을 만들려는 이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절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⁸⁾ 문제는 이승만의 억지 주장이 한국인들한테 먹혀들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승만은 1956년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지금도 한국을 저회 영지로 보고 있으며, 세계 제2차대전 때 잃어버린 땅을 다시 수복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오랜 기간 일본의 침략을 당해온 데다가 한일회담에서도 침략을 당연시하는 일본의 태도에 한국인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가 한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이전에 독립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나,³⁹⁾ 구보타발언 직후 해안경비대 제1함대사령관이 해전을 벌인다면 한국해군을 격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⁴⁰⁾ 한국인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었다.

이승만의 반일운동에 의하여 냉전의식이 강화되고 극우반공체제가 공고해진 것은 아시아에서 평화를 構築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는데 어려움을 조성하였다. 그렇지만 1950년대에는 한일 양국인 사이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대할 수 있는 주체적 객관적 조건이 너무나 狹隘하였다.

1960년대에 남한과 일본에서 일어난 한일회담 반대운동은 한일 양국의 연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한일회담 반대 이유와 일본에서의 반대 이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의 한일회담 반대는 조총련계와 일본공산당 사회당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總評) 등의 한일회담 반대 이유가 약간씩 달랐고, 일본인 민간인들의 반대, 민단계의 반대운동 이유도 차이가 있었다.⁴¹⁾ 남한의 한일회담 반대운동 세력과 일본의 민단계 반대운동단체인 한

35) 민단50년사편찬위원회편, 『民團50年史』, 在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1959, 83쪽

36) 이원덕, 앞의 책, 44쪽

37) 姜鸞郷, 『駐日代表部』, 한국 서울 東亜PR연구소출판부, 1966, 권일, 앞의 책, 민단50년사편찬위원회편, 앞의 책 등 참조

38) 한국일보 1955. 7. 16.

39) 이 부분에 대하여 구보타는 한국이 강화조약 체결 이전에 독립한 것은 종래의 국제관례에 비추어볼 때 異例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이원덕, 앞의 책, 70쪽) 어느 경우는 한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40) 김동조, 앞의 책, 65쪽

41) 조총련계와 민단계의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관해서는 박경식, 앞의 책, 406-416쪽 참조, 일본 사회당 공산당 총평과 역사학자들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오오타, 앞의 글, 208-210쪽 참조

국학생동맹(韓學同) 한국청년동맹(韓靑), 한일회담에 반대한 일본의 역사학자들간에는 연대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반일감정, 반공국가주의의 제약과 함께 극우반공권력의 존재로 일본측한테 연대를 제의할 수 없었다. 한국의 진보적 학생운동세력도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은 냉전이데올로기, 반공국가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또한 일본의 진보세력은 이 시기에 한국의 진보세력을 경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시기에 하타다(旗田) 교수 등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일제의 조선지배를 반성하고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한 것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⁴²⁾

일본인들이 한국의 인권, 민주주의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60년대에도 있었지만, 1970년대, 특히 維新체제기에 두드러졌다. 유신체제를 강력히 지지해준 외국인 집단으로는 일본의 친한파들이 대표적이었는데, 일본의 친한파인 기시, 고다마(兒玉譽志夫)는 A급 전범 용의자였고, 야쓰기(矢次一夫)는 1933년에 국책연구회를 창설한 ‘昭和 최대의 괴물’이었다.⁴³⁾ 아시아침략의 원흉들이 박정희의 유신정권을 떠받쳐줄 때, 일본의 양심세력이 金芝河구속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등에서 열렬히 지원을 했다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한국에서의 엄혹한 냉전의식, 반공국가주의로 인하여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연대에는 제약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1970년대부터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 폈다.⁴⁴⁾ 성노예(중군위안부)문제는 1990년대에 한일 양국인의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21세기에 들어와(2001년)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은 일본 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해 규모가 큰 연대 활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한국인들 다수가 반일감정이 강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일제침략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인권,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한일 양국인의 유대의 폭은 넓어지고 있다.

42) 오오타, 앞의 글, 209-211쪽 참조

43) 서중석, 「박정희의 대일자세와 파행적 한일관계」, 역사비평 1996 여름, 50-51쪽

44) 이치바 준코(市場淳子), 「三重苦를 겪어온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 역사비평 1999 겨울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와 중국 양안 문제의 역사와 현실

쥬지엔민(曾健民, 대만 사회과학연구회)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일방적 주도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52개국이 참가하는 대 일본 강화조약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을 포함한 49개국이 다자간 <대일 강화조약>을 조인하였다. 조인 5시간 후, 미국과 일본은 <대일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인 1952년 미일간에는 또다시 <미일 안보조약>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미일 행정협정>이 조인되었다. 1952년 4월 28일 대일 강화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7시간 전에 폐퇴한 대만 국민당 중앙정부와 일본은 또한 쌍무적 <화일(華日)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모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파생되어 나온 일련의 조약들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 구절구절 얽혀있다. 이 일련의 조약에 따라 구축된 동아시아의 각종 군사동맹, 정치경제체제 및 문화체제가 전후 동아시아 역사에 근본적인 작용과 심원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 미국은 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조약에 의거하여 아시아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의 건립에 착수하면서,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와 민족해방세력의 확대를 봉쇄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는 전전 동맹국이 알타 협정과 포츠담 선언에서 제기한 '평화, 민주, 공의(公義)'정신과 이 정신에 의거하여 조성된 전후 세계를 전면적으로 뒤집었을 뿐 아니라, 아태 각국의 사회역사적인 전진을 왜곡하였고, 미국의 전략의지에 입각하여 '미일안보', '남북조선' 및 '중국양안'의 역사와 현실적 문제를 만들어냈다.

50년 동안 동아시아 세계는 수많은 변화를 겪었고, 동아시아 냉전 또한 역사적 용어가 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만들어 낸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체제가 여전히 우리들의 현실생활을 좌우하고 있고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재인식하는 것은 동아시아 민중이 '평화, 민주,

공의'의 공동사업을 추구하는 커다란 과제가 된다.

이 글은 우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본질을 분석한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구성부분인 <화일 강화조약>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고 대만을 분리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해부하고자 한다. 또한 <화일 평화조약>, <화미 공동방위조약>, <대만 관계법>을 50년 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아태 집단안보체제 속에 위치시키고,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대만 정책 속에 위치시켜, 그 연속성과 특수성을 지적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대만의 대만 독립 신청권이 50년 동안 미국의 반중국, 대만 분리 전략의 역사적 산물임을 보여주며, 이 정권의 분명한 '미국가치 수호' 속성, 즉 오늘날의 대만 정권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의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집행자임을 밝힐 것이다.

1. 거짓 '평화 조약' --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본질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2차 대전 종결 후 최초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의 중심을 한 마디로 개괄하자면, '장지에스 지원과 일본 점령'이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친미적인 장지에스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여 육성하고, 동시에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1948년 국공내전 형세가 역전되어 장지에스군이 계속 패배하자, 미국의 '장지에스 지원'은 심각하게 좌절되면서, 적극적인 '일본 지원'으로 전환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신중국이 성립하고 장지에스가 패퇴하여 대만으로 옮겨가자,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아시아를 석권할 것을 두려워하여 1949년 12월 미국안보회의의 NSC48-1 문건에서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발전을 억지하고 도미노효과를 방지하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인구나 공업능력 어떤 점에서 보거나 일본이 미국의 전략목표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중심이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어서 10월에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쟁에 참여하였으며, 1950년 1월 14일에는 호치민을 대표로 하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성립하였고, 말레이시아 공산당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동아시아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 세력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서태평양 도서를 포괄하는 집단방어체제 수립에 착수하기 시작하여, 도도하게 진행되던 역사의 전진을 봉쇄하고 억제하였는데, 일본을 이런 체제의 중심에 어떻게 편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당시 미국 전략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런 전략 목표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었다.

1951년 8월 15일 신중국 외교부장 저우언라이가 <미영의 대일 강화조약 초안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 관한 성명>에서 핵심을 찌르며 "사실 이것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조약이지, 결코 진정한 강화조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은 왜 <결코 진정한 평화조약이 아닌>가?

1) 이는 국제 협정을 파괴하는 '강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비록 이름이 '강화조약'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이 대일 작전기간에 서명한 일련의 협정을 완전히 전복시켰으며, 이런 국제협정의 정신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이들 국제협정이란 연합국선언(1941년), 카이로선언, 알타협정, 포츠담선언 및 전후 성립한 극동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일 정책의 기본원칙 등이다. 예를 들어, 1945년 8월 2일 서명한 포츠담 협정에 따르면, 강화조약 준비 작업은 마땅히 일본 항복문서에 서명한 중, 영, 미, 소의 4국 외상이 공동 책임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항복 후, 비록 소련이 여러 차례 대일 강화조약 구상안을 제출하였지만,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여러 이유를 들어 이를 지체시켰고, 중, 소의 참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대일 강화조약을 추진하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에서 미국은 의사규정을 바꾸어, 참여국은 단지 의견만 발표할 수 있을 뿐 미국이 마련한 초안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만들어, 평화회의는 완전히 서명대회가 되어버렸다.

또한 이들 국제협정은 일찍이,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방지하는 일본의 비군사화, 일본민중의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평화정부의 수립을 기다려 동맹군대는 반드시 완전히 일본에서 철수하고, 일본을 하나의 '평화와 민주'의 국가로 만들 것, 중국에서 절취한 영토인 대만, 평후(澎湖) 및 시사군도(西沙群島)를 반드시 반환할 것 등등, 전후 대일 처리의 기본정신을 규정하였는데, 전후에 미국은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하여, 대일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며, 사실상 1947년 이후 전후세계의 급변 속에서 미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 있는 규정에서 이탈하여, 일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 기지로 만들었고, 또한 전범을 석방하고 일본의 재군비를 추진하였으며, 일본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과 중국해방군의 참전 이후에 미국은 더욱 급속히 국제협정의 속박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일본을 지배하기를 기도하였으며, 바로 '대일 강화조약'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다.

2) 일본을 '반독립'국으로 회복시킨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미국으로 하여금 완전히 연합국 '극동위원회'의 감독을 벗어나서, 합법적 형식으로 계속 일본에서의 이익을 독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일본은 비록 명목상이지만, 연합국의 군사점령을 끝내고 주권독립을 회복하였고, 미국의 동맹국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맺어진 〈미일 안보조약〉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무조건적인 극동 군사기지가 되었고, 미국의 '점령군'은 '주일 미군'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일본에 주둔하게 되었다. 〈미일 안보조약〉에 따르면, 주일 미군의 임무는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일본의 안전을 방어하는 것 뿐 아니라 '일본정부의 긴급한 요구에 따라 일본 국내의 대규모 폭동과 소요를 평정'하는 것인데, 이는 곧 주일 미군이 일본 국내의 내란 진압에 이용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 외에 주일 미군은 '극동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유용'한데, 당시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의 발언에 따르면 이른바 '극동'의 범위에는 '대체로 필리핀 이북, 일본 및 그 주변 지구, 한국과 중화민국 통치지구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일 미군은 극동의 '안전'을 방어할 임무도 지고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일본 기지에서 출발하여 '극동' 어떤 지구에서도 군사행동을 추진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미국의 극동 각 지역의 지배를 위한 군사기지가 되었다. 그 외에도 미일 〈행정협정〉에 따라 주일 미군은 일본에서 수많은 초법적 특권을 지녔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공공설비와 노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치외법권, 소득세면제, 출입국 관리법의 예외적용, 일본정부의 주일 미군 비용 부담 등등이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기껏해야 일본을 '반독립' 국가로 회복시킨 조약에 불과하다.

3) '반(半)화친'에 불과한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비록 49개 국가가 조인하였지만, 여기에서 정작 1931년부터 15년간 일본의 침략을 받아 강고하게 저항하면서 참혹한 희생을 겪은 중국은 미국과 영국의 방해 때문에 배제되었다. 게다가 소련, 미얀마, 유고슬라비아 등은 회의 참여를 거부하였고, 조약 체결에 참여한 대다수의 국가는 일본에게 총 한번 쏜 적 없는 국가들이었다. 이 때문에 이 조약은 단지 '반(半)화친'에 지나지 않는 강화조약이다. 강화조약의 내용에서도 상상외로 각국이 '대일 배상'을 포기한다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비징벌성' 강화조약이며, 완전히 상식을 위배한 조약이다.

4)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강화조약이라는 미명하에 실상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조약이다. 평화를 통해 미국은 대대적으로 서태평양의 전략적 이익을 획득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강화조약을 통해 미국은 이전에 국제연맹이 일본에 위탁하여 통치하던 태평양 여러 섬과 류큐군도 및 오가사와라군도에 대한 신탁통치권을 정식으로 획득하였고, 이들을 계속 점령할 권리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군사전선은 서태평양 연안으로 뻗어나가 전체 태평양에 대한 군사지배권을 마련하였으며, 태평양은 미국의 내해처럼 되었다. 그 외에 강화조약은 주로 일본이 대만, 평후, 시사군도, 남위도 및 쿠릴열도, 남 사할린의 일체 권리를 버리도록 규정하였을 뿐, '대만, 평후, 시사, 남위도를 중국에 반환하고, 쿠릴열도, 남 사할린

을 소련에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로 상정하지 않았다. 후자는 소련과의 긴장관계와 격렬한 대립을 낳았다. 전자는 '대만 지위 미정론'을 만들어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켜, 미군이 대만에 출병하여 주둔하고, 대만의 법률체정 근거를 통제하였으며, 대만을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전선에 편입시켰다. 또한 강화조약 초안의 추진과정 중에서 미국은 강화조약이 장차 일본의 대외침략을 다시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필리핀(1951. 8. 30),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1951. 9. 1)와 각각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대일 강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서태평양 연안도시의 전략적 지배권을 얻었고, 중국을 봉쇄하는 공동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5) 동아시아를 '제2의 미국으로 만든'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은 일방적으로 서태평양 집단방어체제를 구축하였는데, 그 장기적 전략 목표는 서태평양 지구의 군사동맹을 설립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지역이 미국이나 서방에 종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 지역 사회를 '자유세계'로 만드는 것이었다.

서태평양 집단방어체제의 핵심인 미국의 대일 전략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의 이런 특징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52년 2월 21일,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대일 정책의 기본원칙 비망록인 NSC125호 문건의 제2조에서는, "미국의 정책의 영향하에 비준·통과된 일련의 일본 관련 조약 및 협정은 모두 일본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미국 및 자유세계와 일체화하고 연합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이 전면적으로 자유세계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미국과 기타 자유국가와 정치·경제와 군사상의 긴밀한 협력을 전개해야만 극동에서 미국의 장기적 전략목표를 진정으로 그리고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수많은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문건은 대일 행동계획과 방안이 모두 일본의 정치·경제·군사상의 '자유세계'화를 촉진하는 것 이외에 일본이 '아시아 비공산주의 국가와 안보체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미국이 주도하는 서태평양 집단안보체제에 공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서태평양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참여하여 공산주의 확장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증가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계냉전의 장기화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서태평양 집단방어체제 또한 장기화·고정화되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정치경제 구조를 미국에 종속적인 지위로 변경시켰을 뿐 아니라, 문화와 이데올로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50년의 역사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의 국익을 위주로 하는 서태평양 안보체제가 정당화되어 이것이 '동아시아 질서'와 동의어가 되었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목표 또한 자연스럽게 내재화되어 각국의 발전목표가 되었으며, 미국의 가치는 더욱더 각국의 사회의 주류적 가치 혹은 '보편적' 가치가 되었다. 대만의 전 총통 리덩후이가 과장한 것처럼, "대만은 미국 가치의 수호자이다." 이 말은 대만이 미국의 장기적 지배하에 영혼까지도 미국의 신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서태평양 제국의 '제2의 미국화'라는 공동의 위기를 설명해준다.

2. <화일 평화조약>과 '대만 지위 미정론'

1) <화일 평화조약> 체결의 배후

대일 강화조약 준비 과정에서 미영 양국은 신중국과 대만 국민당정부 어느 쪽을 평화회의에 참가시킬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지만, 결국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어느 한쪽도 참가시키지 않고,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이후로 미루어, 일본정부로 하여금 어느 한 쪽을 선택해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도록 만들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독점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회의에 대해 당시 신중국의 외교부장 저우언라이는 엄정한 성명을 발표하여, "대일 강화조약 준비와 조인에 만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과 결과가 어떠한 관계없이 중국 인민정부는 이를 모두 비합법적인 것으로 여기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상문제에 대해 주장하기를 "일본에 점령당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스스로 복구에 어려움을 입고 있는 국가는 마땅히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공내전 중 대만으로 패퇴한 국민당정부는 생사존망의 위기 속에 있었고, 급히 미국의 군사원조와 보호를 획득하여야 했으며, 서태평양의 반공군사연맹에 가입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정통 중국을 대표하는 지위를 쟁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려는 행동을 취했다. 한편에서는 '중국유세단'을 이용해 미국 국회에 압력을 넣어 일본과 국민당 정부가 조약을 맺도록 요구했고, 다른 한편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는 미명아래 주동적으로 대일 배상청구를 포기한다고 선포하여, 일본과의 조약 체결을 쟁취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공산진영으로 기울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급히 서둘러 일본으로 하여금 단호한 반공·반공산 중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문에 일본과 국민당 정부가 강화조약을 맺는 것이 촉진되었다. 일본은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7시간 전(1952. 4. 28.)에 대만 국민당 정부와 〈화일 평화조약〉을 맺었다. 강화조약의 내용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대체로 동일한데, 단지 국민당 정부는 일본의 노무 배상조차 포기하였다. 따라서 강화조약에는 배상은 글자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화일 평화조약〉은 완전히 미국이 배후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 산물이다. 그것은 한편에서 일본이 공산중국에 쏠리지 않도록 압력을 넣어 대만의 반공 국민당 정부를 지지하도록 표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당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만 국민당 정부가 국제적으로 정통 중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획득하여 서태평양의 반공군사연맹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을 봉쇄·견제하도록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이 〈화일 평화조약〉을 통과시킴으로써 장지예스 정부로 하여금 ‘대만 지위 미정론’을 받아들일도록 하여, 미국전략에 따라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분임을 부정하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시켜 미국의 대만 개입을 합법화하고, 이로써 대만을 조종하려 기도한 것이다.

2) 〈화일 평화조약〉 중의 ‘대만지위 미정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마찬가지로, 〈화일 평화조약〉의 제2장(영토) 제2조 율항에서는 단지 일본이 대만과 펑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만 명기되어 있지, 대만, 펑호의 주권귀속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만 지위 미정론’이다. 만일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협정에서 명기된 대만, 펑호의 주권이 중국에 재귀속된다는 조항을 따른다면, 국제법상 미군의 대만 주둔은 중국주권을 간섭하는 침략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대만 주권귀속이 미정임을 보여주고, 미국은 공공연히 대만에 ‘진출하여 대만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강화조약 중 대만 지위 귀속에 대해 분명히 말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정통중국을 대표한다고 자칭한 대만으로 패퇴한 국민당 정부 또한 격렬히 반대하였지만, 미국이 ‘대만에 군사보호를 제공한다’는 협박과 유혹 하에서, 국공내전 중에 있던 국민당 정부는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미국의 뜻에 굴복하여, ‘대만 지위 미정론’에 대해 침묵하였고, 그 대가로 미국의 군사보호를 얻었다.

3) ‘대만 지위 미정론’이 숨기고 있던 음모

강화조약 중의 ‘대만 지위 미정론’은 미국의 깊은 음모를 숨기고 있었다. 미국은 표면상 강화조약의 형식을 이용해 실제로는 대만에 대한 (대륙의 신중국과 대만의 국민당 중국 모두를 포함하여) 중국의 주권을 강점하고, 이로써 대만을 중국으로 분리시켜 미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기도하였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이 미국의 대 중국정책의 전략적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한편에서는 대만을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 반공전선으로 이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만을 ‘인질’ 삼아 중국을 협박하여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는 것이다.

〈화일 평화조약〉 조인 후 2년이 지난 1954년 12월 2일 국민당 정부는 또다시 미국과 〈화미 공동방어 조약〉을 체결한 후, 미국 국무차관 벤자민 케언은 의회에 비망록을 제출하였는데,

비망록의 내용은 강화조약의 ‘대만 지위 미정론’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음모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미국은 줄곧 이들 도서(대만, 펑호)가 이미 중국에 돌아갔다는 것을 정식 승인하는 것을 신중히 회피해왔고, 이들 도서의 미래의 지위에 대해 태도를 유보하고, 결론을 맺지 않았다.... 미국의 이익에서 보면, 대만과 펑호를 대륙에서 분리하는데 찬성하고 이에 노력하여야 한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들 도서가 대륙의 불가분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어떤 조약도 모두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에 손상이 된다.”

이 비망록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대만, 펑호를 우호적 국가 수중에 두는 것이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②이들 도서를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한다.” 여기서 이른바 ‘우호적 국가’란 ‘친미정부’를 말한다. 달리 말하자면, 대만에 대한 미국의 최고 전략목표는 대만을 ‘친미’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인데, 이 친미정부는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이 구성된 정부라도 좋고 대만 본성인이 구성된 정부라도 좋으며, 독재부패의 국민당 정부여도 좋고, 다른 민주정부여도 좋은데, 단지 대만을 미국 지배하에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미’ 정부이기만 하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미국의 지지를 얻게 된다. 이로 부터 알 수 있듯이, 대중국 정책의 중요한 한 고리인 미국의 대 대만 전략의 핵심은, 어떻게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미국 지배하의 ‘친미’ 정부 수중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 중의 허구적인 ‘대만 지위 미정론’을 강권적으로 이용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부정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전쟁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의 수단에 불과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50년 동안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 중에, 여러 시기에 미국이 암중모색하여 추진한 일련의 대대만 정책, 예를 들어 ‘대만 문제 국제화’, ‘대만 문제 위탁관리론’,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두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정부’, ‘독립 대만론’ 및 ‘대만 독립론’ 등등 다양한 논리들은 모두 이러한 대대만 전략의 핵심을 벗어날 수 없고, 모두 ‘대만 지위 미정론’을 그 법적 구실로 삼고 있다.

4)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이다

그러나 대만의 지위(주권귀속)는 미국인이 허구적으로 만들었듯이 과연 ‘미정’인가? 역사에서 보거나 사실에서 보거나, 50년간의 일본식민시기를 제외하면 대만은 400년 동안 분명히 중국에 귀속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662년 명의 鄭成功이 네덜란드인을 대만에서 몰아내고 중국 정권을 수립한 이후, 1683년에는 대만이 정식으로 청 정부의 판도 속에 들어왔다. 1895년 중일 갑오전쟁에서 청정부가 패배하여 대만을 할양하기까지 200여 년 동안 정치·경제·문화를 불문하고 대만은 완전히 중국사회의 일부였다. 중국 행정 구역상, 대만은 원래 푸젠성의 ‘대만부’였다가 중불전쟁 후 ‘대만 성’으로 승격되었던 완전히 중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였다. 대만은 중국의 영

토이기 때문에 청 정부는 갑오전쟁 패배 후, 대만을 일본에 할양하는 <시모노세키조약(馬關조약)>에 서명하였다.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의 조인과 대만 할양 자체가 대만이 100% 중국의 영토임을 설명해주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대만이 일본식민지로 떨어진 후, 수십년간 중국 또한 제국주의의 모멸을 받았고, 군벌 할거의 국면 하에서 자구자강의 시대에 스스로도 들불 겨를이 없었다. 잃어버린 땅인 대만의 회복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1931년 일본은 중국 동북에서 9.18 사변을 일으켜, 중국 침략의 전화의 불을 당겼다. 1941년 12월 9일 중국은 정식으로 대일 선전포고를 하였고, 동시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일체의 조약의 폐지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모노세키조약>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대만은 이미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중국의 '잃어버린 땅'이 되었다. 일본으로부터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대만을 '광복'시키는 것이 정식으로 중국 항일전쟁의 목표의 하나가 되었다.

1943년 중, 미, 영 대일 작전에서 연합국 3국의 영수는 공동으로 협의하여 <카이로선언>을 발표하여, "3국의 중지는... 일본이 탈취한 중국의 영토, 예를 들어 동북 4성, 대만, 팽호군도 등을 '중국'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였다. 이어 1945년의 <포츠담 선언> 제8조에서도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무조건 항복 이후, 이 상에서 서술한 역사적 사실과 동맹국간의 협정에 근거하여, 1945년 12월 25일 타이베이에서 중국전구 대만성 항복의식이 거행되어, 연합군 대표와 대만 민중대표 수백명이 이 의식을 참관하였으며, 대만성 행정장관 천의(陳儀)는 대만을 중국에 반환시킨다는 항복문서를 대만 총독부 총독 안도 리기치(安藤利吉)에게 받았으며, "오늘부터 대만과 팽호군도는 정식으로 중국의 관도에 다시 들어갔다. 모든 토지, 인민, 政事는 모두 중국 국민정부의 주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고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대만은 정식으로 중국의 한 성으로 복귀하였고 대만 민중 또한 중국 국적을 회복하였다. 대만 성 행정장관실은 일본의 대만 총독부로부터 정권, 기관, 재산 및 군사적 접수를 진행하였고, 1년내에 50여만 일본인을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1946년 1월 대만성 행정장관실은 대만 '광복' 후 3개월에 걸쳐 전성의 공민선서를 거행하였고, 각급 인민대표의 선거를 진행시켜, 대만 민중은 중국공민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였고, 1946년 6월 5일에 이르러 대만 성 각급 민중대표기구는 전부 성립되었다. 여기에는 각 향진민 대표회, 각현시 참의회 및 성 참의회가 포함되었다. 같은 해 대만은 또한 '참정원' 및 '국민대회대표'를 선출하여, 각각 국민당 중앙정부 수도인 남경에서 개최된 '전국 국민 참정회' 및 '제헌국민대회'에 참석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광복' 1년 내에 대만은 형식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중국의 한 성으로 복귀하였고, 건설의 길을 향해 매진하였다.

그 후 1950년까지, 그 사이에 비록 국민당정부의 부패 및 국공내전의 격화, '2.28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이 모두 중국 민족국가 내부의 문제이지 대만 주권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 5년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어떤 국가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트루먼도 1950년 1월 5일

성명을 발표하여 다시금 <카이로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 대만은 이미 중국에 반환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항복하였을 때 이미 이 선언의 규정을 받아들였으며... 4년 동안 미국과 기타 동맹국 또한 이 섬에 대한 중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다고 그는 더욱 엄숙히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성의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영토통합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또다시 대만의 중국귀속에 관한 전전 연합국의 합의를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대만이 중국의 한 성으로 복귀된다는 사실을 승인하였고, 세계 각국이 대만을 포함한 중국 영토의 통합을 존중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역사적 근거, 객관적 사실, 국제조약, 심지어 그 시기의 미국의 '국익'에서 나온 성명으로 보더라도 대만이 중국의 불가분의 영토라는 것은 확고한 사실이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커다란 역전이 발생하였다. 전쟁발발 3일 후 미국은 후안무치하게도 반년전 스스로 "미국 정부는 앞으로 국제관계에서 성의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중국의 영토통합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 것을 짓밟고, 힘을 내세워 제7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하여, 대만해의 중립화를 선언하였고, 중국 양안 내전을 고착화하였으며, 또한 "대만의 미래 지위의 결정은 반드시 태평양 안보의 회복, 대일 강화조약 조인 혹은 연합국의 고려를 거쳐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강권으로 '대만 지위 미정론'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임의로 이전의 승인을 거부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며, 강권으로 타국의 역사를 뒤집고 현실을 왜곡하며 세계질서의 진면목을 날조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승인, 협의, 국제조약은 원래 단지 그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대일 강화조약은 하나의 좋은 예이며, 강화조약 중의 이른바 '대만 지위 미정론'은 바로 그런 산물이다.

3. <화미 공동방위조약>과 국공내전 고착화

한국전쟁 정전 후 미국은 남한과 1953년 10월 1일 <미한 공동방위조약>을 조인하였고, 이어서 1954년 9월 8일에는 마닐라에서 <동남아 집단방위조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12월 2일에는 대만의 국민당정부와 <화미 공동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정식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집단방어체계의 전략적 배치를 완성하여, 북에서 일본, 한국, 류큐군도, 대만, 팽호군도를 거쳐 남으로 필리핀, 동남아시아 각국, 계속해서 오스트레리아,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서태평양 도서와 공동으로 도서연쇄 방어선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냉전 중에 미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공산주의의 확장을 봉쇄하고 억제하는 방어선이었으며, 대만은 그 중간위치에 놓여 있었다. 마치 당시의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가 국민당 정부와 조약을 체결한 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한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조약은 서태평양 지구 집단방어조치 연쇄상의 또 다른 환절을 대표한다. 이 선은 공동으로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저항하는 자유세계를 함께 단결시킨다.”

<화미 공동방위조약>은 국민당 정부로 하여금 서태평양의 반공군사연맹에 가입해 자신의 보호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고, 더 많은 미국 군사원조와 보호를 획득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 외교상에서 미국의 강력한 지지로 정통중국을 대표하는 지위를 얻었다. 이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정식으로 대만, 펑호가 ‘중화민국’의 영토임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마치 미국이 ‘대만 지위 미정론’을 포기하는 선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약 체결과 동시에 미국은 국민당정부가 “미국의 허락 없이 대륙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비밀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은 국민당정부가 군사행동을 통해 ‘대륙에 반격’하여 주권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미국이 견제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대만의 주권을 단지 대만, 펑호, 금문도, 마조도에 한정하는 것으로, 미군은 대만만 방위하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국공 내전의 ‘고착화’를 조성하여, 대륙과 ‘해협을 나누어 통치’하는 상태를 형성하였다. 이것이 중국 양안의 장기 격리대치의 발단이고, 대만문제의 근원이다. 또한 이 조약의 적용 범위 또한 대만과 펑호에 한정되고, 금문, 마조는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국공내전을 고착화하고, ‘대륙에 반격’할 능력을 상실하여 대만, 펑호지구만 통치하는 반공친미 국민당정부를 지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만을 분리시켜 미국이 지배하는 친미정부의 수중에 둔다’는 대대만 전략에 완전히 부합한다.

이 때문에 1970년대까지 계속해서 미국에 의해 지지되고 유지된 국민당 ‘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정통중국을 대표한다고 공언하고, 대내적으로는 독재정치를 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만은 ‘대륙을 반격’할 힘이 없었고, 국공내전은 고정화되었다. 게다가 장기간의 반공계몽통치는 대만과 대륙의 장기적 분단, 대치의 국면이 지속되었으며, 대만은 미국의 서태평양 집단방위체제 안에서 반공 반대륙의 전선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였다.

4. <대만관계법>과 대만의 ‘보호지’화

대만과 대륙이 장기간 격리되어 대치하는 조건하에서 미국은 큰 힘을 기울여 경제원조를 하고, 경제정책을 지도하고, 미·일·대만 사이의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여 대만의 사회경제를 변화시켰고, 대만으로 하여금 미일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의존해 나아가도록 만들었다. 또한 문화, 교육정책을 통해 일군의 친미 엘리트층을 육성하였다. 이런 국면은 1979년의 미국과 중국대륙의 외교관계의 수립, 대만의 국민당 정부와의 단교, <화미 공동방위조약>의 폐지와 대만 주둔미군의 철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30년 동안 대만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에 따라 미국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친미친일·반공·공공(恐共)·반대륙이 사회의 주도적 의식으로 자리잡았다. ‘제2의 미국화’가 진행된 대만 사회는 <화미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대만

주둔미군을 철수시켰다 하더라도, 의연히 ‘미국적 가치의 수호자’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중미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국은 비록 입으로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승인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제정한 국내법칙, <대만 관계법>에 의거하여, 계속 양안의 분리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대만을 그 지배와 보호아래 두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대륙에 대해, “비평화적 방식으로 대만의 전도를 결정하는 것은 태평양 지구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미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협하고, 대만에 대해 계속해서 무기와 군사안전 보장을 제공하였다. <대만 관계법>은 ‘공동 방위조약’이 없는 ‘방위조약’을 형성하였다.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 관계법>에 고도로 의존하는 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미국의 신 ‘보호지’로 전락하였다. 미국은 한편에서는 <중미 외교관계 수립 공보>에 따라 중국대륙과 교류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을 독점하고, 결국 중국 양안을 ‘분할 통치’하고, 앞서서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와 대만의 신정권

(1) ‘반중국’과 ‘미국종속’의 이중성

50년동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를 필두로, 미국이 주도하는 서태평양 공동방위체제 하에서 대만은 이미 미, 일에 종속된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다. 이런 정치경제사회체제 속에서 성장한 대만의 신주인인 토착 신흥 자산계급은 1990년대 이후 리덩후이를 대표로 하여 대만의 권력을 장악하였고, 40년간 주장해온 대만이 정통중국을 대표하고 그 주권이 대륙에 미친다는 입장을 점차 포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협을 나누어 통치한다’는 국민당 통치체제의 틀 내에서 ‘대만은 이미 주권독립 국가’라고 주장하고 ‘대만과 중국은 별개의 국가이다’라는 독립 대만의 ‘2국론’ 노선을 견고 있다. 이 정권은 비록 감히 ‘대만 독립’을 선포하지는 못하지만, 10년 동안 부단히 헌법, 정부조직, 법률내용, 역사교과서, 문화, 언어 내지 휘장도안 등 각 방면을 수정하면서 대만의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대만 의식’, ‘본토의식’을 활용하여 국민의식을 근원에서 ‘탈중국화’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대만 의식’은 실제로는 ‘대만에서의 미국의 냉전의식’이고, ‘본토의식’은 단지 ‘반중국 의식’의 수식어에 불과하다. 이른바 대만의 ‘주권독립’이란 단지 중국대륙에 대한 상대적인 ‘주권독립’이며, 미국에 대해서는 단지 더한층 ‘종속’에 빠져드는 것이다.

2) 중국을 억제하는 새로운 준전략동맹

2001년, 중국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당 강령으로 삼는 민진당이 대만 정권을 차지하였고, 게다가 강경한 부시 정권이 집권하였다. 여기에 최근 일본군사력이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은연 중에 중국대륙을 억제하는 새로운 '준 군사전략동맹'이 형성되고 있다.

미일 안보의 유사 범위에 대만이 포함됨에 따라 대만과 일본자위대 사이의 비공개 교류는 급속히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자위대 국립국방연구소 소장인 니시하라(西原正日)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계속해서 미국에 해군과 공군기지를 제공해 중공의 역량에 대항하는 것은 일본의 이익에 부합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의 미국의 군사역량과 협조해야만 대만은 비로소 중국대륙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중국시보』 2001년 8월 21일에서 인용). 그는 대만을 미일안보의 반중국 동맹 속에 끌어들이 것을 적극 주장한다. 독립파 천췌이엔 총통은 이런 경향에 대해서 "아태 군사합작, 동맹은 미·일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아시아 기타 국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국교가 없는 대만도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미, 일, 대만은 반드시 미사일 방어체제를 합작하여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미일안보의 반중국 군사동맹에 가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작년 6월 이후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합작, 교류 또한 긴밀하게 진행되었다. 어떤 평론가에 따르면 "이는 대만과 미국의 단교 20년 이래 최초의 긴밀한 군사교류"이며, 교류의 내용은 지휘, 관제, 통신, 정보 방면에서 일, 미군과 연계선을 형성하고, 점차 대만에서 TMD를 추진하고, 미 대만 군사전일체화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방어대상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듯이 중국대륙이다.

이런 적극적인 대만의 '탈중국화'는 '대만 의식'을 이용해 '중국의식'에 대항하는 것을 고취하고, 국민당 정권의 '반대륙' 구호를 '반중국' 구호로 전환하였다. 열심히 미일 안보체제에 참여하여 미국이라는 말 앞의 줄이 되고자 하는 민진당 정권은 미국이 50년 전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가 대만에 만들어 낸 역사산물이고, 그것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장기전략의 수확이다. 그것은 반공, 반대륙일 뿐 아니라, 더욱 더 단호한 반중국이다. 그것은 대만을 정치·경제·문화·언어사회 전체에서 철저히 '탈중국화'하는 것이고,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제2의 미국화'하는 것이다. 그 결과 1954년 미국 국무차관 케언이 <화미 공동방위조약>의 비망록에서 말한 바 있는 "미국의 이익에서 보자면, 대만과 펑호를 대륙에서 분리시키는데 찬성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전략목표를 실현한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때는 미국의 전략목표를 초월하여 대만 독립 정권의 '반중국'이 오히려 양안의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아시아 전략 배치에서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는 50년대 장지예스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 '대륙반격'이 미국의 '골칫거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극히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 자주권을 가지고 있던 것과 완전히 '주체'를 상실하고 스스로 '주체'를 해소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의 계승자들

2001년 9월 8일 각각 도쿄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양국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일본의 수상은 "냉전종결 10년이 지난 지금, 미일 동맹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양국 뿐 아니라 전체 아시아 태평양지역 및 세계전체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의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냉전이 종결되면서 미일은 공동의 가상 적을 상실하였다. 동서냉전에서 생겨난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는 해소될 상황에 놓이는 듯 했으나 실은 그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해소되기는 커녕 고이즈미 수상이 말했듯이 오히려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10만 미군체제를 유지한다고 공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일본도 이웃 나라에 빈번히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일국 초강대국 미국은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이용하여 그 핵심인 미일안보 동맹을 기초로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가상 적은 누구인가. 일본 외무성 및 방위청 고위 관리들은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50년간 반드시 중공(중국?)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미일 안보조약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일 안보동맹을 유지할 수 없다"(중국시보 2001.9.9)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가상 적은 분명히 지난 5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급속히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이다. 2001년 9월, 과거의 바로 그 장소,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만 독립파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0주년 기념집회를 열어 50년 전의 조약에 있던 '대만 지위 미정론'이 중국의 대만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것을 축하했다. 9월 8일 민진당의 류쇼우리엔 부총통도 이렇게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하면, 대만은 중국 대륙이 주장하는 '중국 영토의 신성함과 분할 불가분성'이 적용되는 일부분이 아니다."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대만 독립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 모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나 현실, 법리적 관점에서 '대만 지위 미정론'이 얼마나 영터리인지는 앞에서 충분히 논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독립파가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날조한 '대만 지위 미정론'을 스스로의 '독립-건국'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기본 신앙으로 하고 있다. 대만 독립파는 미국의 '국익'을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삼고 있으며 미국적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아 그것을 방위하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1954년 화미 공동방위조약에서 미국은 대만-펑호가 '중화민국'의 영토임을 승인하고, 그 이후 다시는 '대만 지위 미정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더구나 1979년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대만 독립파의 집권이야말로 현재의 미국의 서태평양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다. 민진당 정부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역사적 산물이며, 또한 대만에서의 이 체제의 역사적 계승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중국을 억제하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체제

속에서 민진당 정부는 이전의 국민당 정부보다 더욱 더 순종적이고 충실하며, 적극적 주동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얻은 아시아 민중들의 저항과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한 승리라는 귀중한 전과를 독점하여 전후 순리적인 아시아의 역사적 발전을 뒤집어 엮은 조건하에서 전개된 것이다. 그것은 초대국 미국이 홀로 주도한 아시아 태평양 집단안보체제의 기초이며,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하는 미일 안보조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치경제에서 문화나 의식형태에 이르기까지, 아태 각국의 사회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밑에서부터 '제2의 미국화'가 이루어진 사회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가 냉전 후에도 새로운 형식으로 여전히 아태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다.

50년 동안 미국은 끊임없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전쟁공포를 유지하였으며, 독재정부의 인권 유린을 지지하고, 민족분열을 확대 이용하여 민족간 증오를 부추기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제도를 촉진하여 동아시아 민중의 '평화와 인권'에 대한 회구를 저해해 왔다. 오늘날 미국 주도아래 일본은 이미 '전수방위'의 탈을 벗어 던지고 발 빠르게 군국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반중국, 미국 추종의 대만 독립파 정권의 등장은 중국을 억제하는 새로운 미-일-대 준 군사동맹이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체제의 본질을 재인식하는 것은 오늘날 동아시아 민중의 공통의 길을 알기 위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何迪 編, 美國對臺政機密檔案 資中(竹均), 海峽評論社, 1992.
 張九 編, 美國無(一分)在臺灣問題上指東道西, 中圖出版社, 1997.
 林利民, 渴制中國, 時事出版社, 2000.
 林金0, 戰後中日關係之實證研究, 中日關係研究會.
 于群, 美國大日政策研究, 東北師範大學出版, 1996.
 蘇格, 美國對華政策與臺灣問題, 世界知識出版社, 1998.
 米慶余-王曉德 編, 近現代亞太地區國際關係研究, 天津人民出版社, 2001.
 鮑紹霖 編, '臺獨'幕後, 海峽評論社, 1993.
 林忠, 臺灣光復前後史料概述, 皇極出版社, 1983
 王振鏞, 日本戰後50年, 世界知識出版社, 1996.

武藤一羊, '戰後日本國家'という問題, れんが書房, 1999.
 資中(竹均), 追根溯源, 上海人民出版社, 2000.
 肖偉, 戰後日本國家安全戰略, 新華出版社, 2000.
 Michael Schaller (郭俊 譯), 亞洲冷戰與日本復興, 金禾出版社, 199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오키나와

- 제3조가 의미하는 것 -

미야사토 세이젠 (宮里政玄, 류큐대학)

1. 들어가면서

이제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된 지 30년이 지나고 있으나, 복귀 후에도 오키나와 문제의 본질은 거의 변함이 없다. 오키나와 기지는 여전히 미일 양 정부의 상호협력 하에 유지되고, 이들에 의해 임의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 일본 정부의 양해와 지지 하에 오키나와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대일 평화조약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방식은 현재까지도 본질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제3조는 오키나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국은 미 합중국이 국제연합에 제안한, 북위 29도 이남의 남서제도(략)를 미 합중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하에 둔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러한 제안이 가결되기까지 미 합중국은 영해를 포함하는 이들 제도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모든 권력 및 일부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한다.

이 제3조의 작성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지만, 최근에 이 과정에서의 일본 정부의 '자립적 외교운영'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잠재주권'을 인정한 주 요인은 요시다의 강한 요청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일본측의 요청을 증시하는 해석에 대해 필자는, '잠재주권'은 '일본을 용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조건이었다'는 결

1)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서는 가와노 야스코 『오키나와 반환을 둘러싼 정치와 외교-미일관계사의 문맥』 도쿄대학출판회, 1994를 참조.

론을 도출해 내었다.²⁾

NSC13/3(1949년)의 결정으로 대일 평화조약 '교섭'은 연기되어 있었다. 그후 조기 평화를 주장하는 국무성과 평화조약은 시기상조라는 군부(군부는 일본의 재군비를 추구하고 있었다)가 참여하게 대립했다. 1950년 6월의 존슨(Louis Jonson) 국방장관, 합동참모본부, 딜레스 특사 등이 맥아더 연합군총사령관과 논의하고, 같은 달 한국전쟁 발발을 거치면서 처음으로 미국정부 내에 대일 평화조약 '교섭'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합의가 성립하게 되었다.

1950년 4월에 평화교섭을 위한 담당자로 임명된 딜레스는 존슨 국방장관과 합동 참모본부의 일행과 같은 시기에 방일했다. 그것은 딜레스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차원으로까지 악화되어 있었던 국방성과 군부의 대립을 해소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딜레스는 맥아더를 움직여 조기평화를 군부가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6·23' 메모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메모는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 전 국토에 대한 미 주둔군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인정하고, 나아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한 고유의 자위권을 가짐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메모는 특별히 일본의 재군비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그것을 행사하기 위한 재군비까지도 승인하는 것이 된다. 그로부터 이틀 후 한국전쟁은 양자의 합의를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오키나와에 대한 '잠재주권'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8월 18일의 조약 초안에서부터이다. 그 때까지의 초안은, 일본은 '신탁통치체제를 시행하는 국제연합의 어떠한 결정도 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8·18초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던 것이다.

미 합중국은 또한 북위 29도 이남의 류큐열도(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합중국을 지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하에 둘을, 미 합중국의 결정에 의해 국제연합에 제안할 것이다. 이 제안이 승인되기까지 일본은 이들 제 섬의 영토에 대한 행정·입법·사법의 완전한 권한을 미 합중국에 지니는 것에 동의한다.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연합에 류큐열도의 신탁통치를 제안하더라도 그것이 인정될 것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한국전쟁이 발발한 상황에서 소련이나 중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확실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이 제안을 무기한 연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주권을 명목적으로 일본에 남겨둔 채 오키나와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계속적으로 행사해 나갈 수가 있었다.

전쟁과정에서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미국에 의한 완전한 통치의 필요성은 고조되었다. 오키나와 기지에서 발진한 B-29폭격기는 북한을 폭격하고 있었으며, 그뿐 아니라 오키

2) 줄저 『일미관계와 오키나와 1945-72』 이와나미서점, 2000년의 제2장 「평화조약 제3조와 잠재주권」 참조.

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의 출동과, 이른바 “Operation Roll Up”(본토 침공을 위해 축적해 두었던 군사물자를 수리하여 한반도로 수송하는 작전)에 의해 오키나와는 발전기지 및 보급기지의 역할까지 하였던 것이다. 이는 NSC 60/1(9.18)에서 확인되었다.

에치슨(Dean Acheson) 국무장관은 6·23메모를 토대로 문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었다. 이 NSC 60/1은 세가지 결정을 지니는 것이었다. 즉 평화교섭을 진행할 것, 일본 본토에서 무제한적인 기지권을 확보할 것, 일본의 재군비를 진행할 것 등이었다. 평화 ‘교섭’에 대해서는 모든 관계국이 참가하는 평화조약이 아니라 극동위원회가 각 국과 행하는 2국간 ‘교섭’에 의할 것, 평화조약은 한국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될 때 까지 발효하지 않을 것, 평화조약은 류큐와 오가사와라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인 관리를 보충할 것 등이 결정되었다. 일본 본토에서의 미군의 기지권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미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미군을 유지하는 권리로 확정되었으며, 그것은 미일 2국간 조약에서 규정되었다.

2. 중국의 개입과 오키나와 조항의 수정

한국전쟁은 이 문제의 새로운 전개를 가져다주었다. 1950년 11월 24일 맥아더는 북한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가하였는데, 그 이틀 후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던 중국군의 개입으로 UN군은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정보국(CIA)은, 중국이 소련의 지원 하에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한국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만약에 이 판단이 정확하였다면 한국전쟁은 제3차 대전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12월 15일, 트루먼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듬해 1951년의 최초 2주간은 ‘냉전 중, 가장 위험에 가득 찬 시기’였다. 국무성과 군부는 조기 평화와 오키나와문제를 둘러싸고 다시금 대립했다. 후에 에치슨이 회고한 바와 같이, 조기평화의 최대 장애는 존슨 국방장관 등에 의한 ‘의사 방해’였던 것이다.

존슨을 대신한 마셜(George C. Marshall)이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것이 조기평화에 일조했다. 국방성의 제안대로 델라스를 일본에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델라스는 대사 자격을 가지는 대통령 특사로서 대일 ‘교섭’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요시다 시게루 수상도 측근의 시라스 지로(白州次郎)를 워싱턴에 파견하여, 국무성에 요청하고 있었다. 즉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의 주권을 일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며, 장래에 분쟁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 되므로 그것은 불가하고 대신 일본은 미국과 필요로 하는 모든 군사적인 권리를 필요한 시기만큼 제공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는 맥아더에 대하여 오키나와인에게 일본 국적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요시다는 1951년 1월 3일, 델라스에게도 ‘우리측의 견해’를 제출하고 오키나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주권을 일본에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은 미국의 군사상의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응하며, 버뮤다 방식에 의한 조차까지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지만(중략) 미일양국간의 영원한 우호관계를 위하여 이 ‘신탁통치’안을 재고해줄 것을 절대로 요망한다.

다음날 미일교섭에서 델라스는 일본측에 대하여 동정적이기는 하였으나 영토문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일본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델라스는 한편으로는 영토문제로 요시다 정권이 궁지에 처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 요구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워싱턴에서의 보도를 걱정하고 있었다. 델라스는 2월 2일의 참모회의에서 이러한 보도는 류큐에 대하여 델라스 사절단이 취한 입장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하면서, 속히 워싱턴으로 해명을 위한 타전을 보내도록 부하에게 명령하였다. 그리고 일본측의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2월 3일의 ‘잠정각서’에서 오키나와의 범위를 종래의 북위 30도에서 29도로 변경하였다.³⁾

3월 19일, 델라스는 상원의교위원회의 극동소위원회에서 평화조약 초안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 증언에서 델라스는 평화조약 초안은 미국이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의 신탁통치를 국제연합에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신탁통치 신청에 미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미스(H. Alexander Smith) 의원은 조약 초안에 의하면, 신탁통치가 국제연합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오키나와를 항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 미국이 제국주의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었다. 나아가 스파크만(Joan J. Sparkman) 의원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은 오키나와를 일본에 남겨두고 본토에서와 같은 군사적 권리를 오키나와에서 취득하는 것이라 발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델라스는 타국의 태도를 확인하기까지는 초안을 그대로 두었으면 한다고 답변하였다.

극동소위원회에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일본의 잠재주권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델라스를 움직인 듯 하다. 이 증언의 사흘 후 델라스를 보좌하며 평화조약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리슨은 영국의 외무차관과의 회합에서 미국은 오키나와를 합병하고 싶지 않으며,⁴⁾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도 골칫거리이므로 오키나와의 주권은 언젠가 일본에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를 위해 조약 초안의 문장도 신탁통치를 신청할 지도 모른다(may propose)는 식으로 표현했지 신청할 것이다(shall propose)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외무차관은 그것은 일본과의 사이에 분쟁의 씨앗을 남기는 것이 되므로 일본을 너무 신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앞의 조문은 같은 날 국무성의 차관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영국과 그 밖의 연합제국으로 송부된 ‘대일 평화조약 합중국 잠정 초안’(3월23일)에는, 신탁

3) 미국 측의 조약초안에서는 이미 북위 29도로 되어 있었다.

4) 영국은 장래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키나와 합병이 최선임을 주장하고 있었다.

통치를 '신청할 지도 모른다'고 하는 자구에 대한 수정뿐 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변경이 가해졌다. 앞에서 아리슨은 '오키나와의 주권은 언젠가 일본에게 돌려줄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3·23초안의 말미에 표현되었다. 즉 '이러한 「국제연합의 신탁통치」가 제안되어, 그것이 승인되기까지 합중국은, 領水를 포함한 영토와 이들 諸島의 주민에 대한 행정·입법·사법의 전부 및 일부의 권리(all and any powers)를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후에 국무성은 이 추가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즉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조약은 미국의 권리의 행사가 전체적인 것일 필요는 없으며, 한정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나머지 권리는 일본정부가 행사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만약에 미국이 일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이 규정으로 미국은 유연한 선택권을 가지고자 했던 것이다. 이 문서는 군사적 요청을 충족시켜주는 미일협정을 맺은 후에 오키나와의 시정권을 일본에게 반환하는 것을 제한한 국무성의 1952년의 각서에 첨부된 것이다.

3. 군부의 반대와 델레스의 이론

당연히 군부는 이러한 수정에 반대하였다. 4월 11일 국무성과의 회합에서 합동참모본부의 장은 이렇게 주장했다.

- 1) 오키나와에서는 '프리 핸드'가 필요하다. 국무성은 일본정부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 2) 한국전쟁이 계속되는 한 작전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쟁이 종결될 때까지 조약을 연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델레스는, 오키나와에 관해서는 통합참모본부의 의견이 100% 충족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델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처럼 유연한 권한은 미국 정부의 것이며, 아무런 권한도 일본 정부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이었다. 분명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관한 주권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무늬만 주권'이었으며,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인 요청을 충족시켜 줄 것을 표명하고 있었다. 평화조약 후 일본은 그 안전보장을 미국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지극히 허약한 입장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앞의 상원 외교위 극동소위원회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3·23초안이 상원에서 지지될 것은

분명하였으나, 문제는 군부였다. 에치슨 국방장관에게 송부된 합동참모본부의 각서(4.17)는 평화교섭에 임하는 미국의 정책이 NCS 60/1일 것, 동 본부의 검증 없이는 미국정부를 최종적으로 구속하는 협정은 체결하지 않을 것, 오키나와에 대해서는 미국에 의한 배타적인 전략적 관리를 보증하는 것이어야만 할 것 등을 강조했다.

더욱이 6월 20일 군부는 3·23초안을 그대로 답습한 6·14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즉,

일본은 북위 29도 이남의 류큐열도에 대한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초안의 제2조(g)항으로 추가할 것. 미국의 전략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나라라 하더라도 이를 공유하거나 또는 그것에 합법적으로 간섭하거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도록 보증할 것. 이상의 선에 따라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본국은 류큐열도(략)를, 합중국을 유일한 시정권자로 하는 국제연합의 신탁통치하에 둔다고 하는 합중국의 어떠한 제안에도 동의한다. 이러한 제안이 행해지고 또한 승인될 때까지 합중국은 제2조 (g)항에 따라서 이들 제 섬의 영해를 포함하여 영토, 주민에 대한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 모두 및 일부의 권리를 행사할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함.'

그러나 육군 참모총장은 델레스의 설득을 받아들여 상기 문서의 재수정을 요구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국무성안에서도 충분히 보증되고 있다는 점, 및 미국은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기지권을 오키나와에서도 취득한 위에 주민의 통치권은 장래에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점등을 이유로, 제2조 (g)항의 삭제를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했다. 결국 동 본부는 이를 용인하고 앞에서 밑줄 친 '유일한'이라는 문구만 추가할 것을 국무성에 요구하게 된 것이다.

아마 델레스는 오키나와의 잠재주권 용인에 관한 명확한 논거를 합동참모본부에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6월 27일의 델레스 각서는, 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한 뛰어난 논거를 명쾌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일본의 잠재주권이 일본에 대한 양보 혹은 저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델레스의 6·27 각서는 우선, 미국은 영토 불확대 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오키나와에 대한 주권 취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만약에 일본이 어느 나라에 대하여 주권을 포기할 것인가를 명시하지 않고서 그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국제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혼란은 국제연합이 미국에 의한 신탁통치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것이다. 즉,

- 1) 오키나와 주민은 주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분명 국제연합의 지지를 얻어 미국을 오키나와에서 추방할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 2) 소련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은 오키나와의 주권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국제연합의 독자의 방법으로 오키나와의 주민을 다루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 4) 그에 대하여 미국은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실제상의 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만약 미국이 명목적으로든 간에 일본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주권보호국인 일본과의 합의하에 미국은 배타적인 전략적 관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만약 주권국에 부여한다면 배타적인 전략적 관리는 다른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주권과 완전히 합치한다.”⁵⁾ 역으로 일본이 주권을 포기한다면 잠재주권은 있을 수 없으며, 배타적 전략 관리도 있을 수 없다. 잠재주권은 배타적 전략관리에 불가결한 것이라는 델레스의 주장은 일단 합동참모본부를 납득시켰다. 6월 28일의 마샬 국방장관이 에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은 합동참모본부와 델레스와의 회의 결과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에게 있어서 일본의 잠재주권은 문자대로 명목적인 것이어야만 했다. 델레스에게 있어서 잠재주권은 군부의 배타적인 통치 요구는 물론, 국무성의 대일 정책상 요구되는 유연성 등 쌍방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4. 극동군사령부의 ‘부분적 반환론’과 제3조

그런데 문제는 평화조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마 델레스도 예기하지 못했을 오키나와의 ‘부분적 반환론’이 도쿄의 극동군사령부로부터 제안된 것이다. 맥아더의 뒤를 이은 리지웨이(Matthew Ridgway) 극동군사령관 겸 류큐 민정장관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약 1개월 후인 1951년 10월 17일에 오키나와 반환을 권고하는 보고서 ‘류큐 열도에 관한 미국의 장기목표’를 합동참모본부로 송부했다. 이 보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오키나와의 시정권 반환을 권고하였다. 1) 미국에게 있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서 태평양의 연안제도 방위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키나와에 대하여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와 그 밖의 방법으로 미국이 항구적인 정치적 통치권을 보유할 필요는 없다. 2) 합동참모본부가 안정보장상 불가결하다는 오키나와의 군사시설을 미국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결정을 미일양국간이 교섭할 수 없다고 생각할 이유는 아무 데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제안은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의 기지권을 오키나와에서 취득한 위에, 시정권은 장래에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6월말의 육군참모총장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장래’의 일로 ‘바람직하다고도 생각되는’ 것이었다. 극동군은 이를 단기적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그것은 델레스의 한 수 높은 대일

5) ‘잠재주권’이 문서에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이것이 처음이다.

정책상의 유연성 확보와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1952년 1월 14일,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전략조사위원회는 리지웨이 보고서에 반대했다. 그것은 종래 대로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지역을 관리하는 경제적인 비용은 이들 제도를 일본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지불했던 피와 재화의 비용, 미국의 안정보장상의 중요성, 그리고 이들 제도를 포기하고 장래에 군사적인 필요에서 다시 탈환할 필요가 생겨날 경우에 필요하게 될 인적, 물적 비용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육군참모장에게 대사 및 극동군사령관 앞으로 ‘현재는 물론 예측되는 장래에 그 권고에 대하여 행동을 취해서는 안될 것으로 (합동참모본부) 믿고 있다는 점을 통고할’ 것을 명령했다.

육군참모총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불과 반년 전인 1951년 6월에, 일본이 오키나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문을 초안에 삽입하는 것을 부인한 것을 지적하며, 더욱 극동전체에 대한 전략과 오키나와의 시정권 반환으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합동참모본부가 반년만에 태도를 굳히게 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진행중이었던 미일행정협정을 둘러싼 국무성·군부의 대립, 및 대일 교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일교섭의 쟁점은 형사재판권, 미일 통일사령부(Unified Command), 시설·구역(기지)이었다. 합동참모본부에게 있어서 행정협정 교섭의 교훈은 명백하였다. 국무성과의 회의에서 동 본부는 국무성안을 받아들이면 오키나와에 있어서 미군병사의 재판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군용지 점수에 대하여 오키나와 주민이 일본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인의 반대가 예상되는 핵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미국은 행동의 자유가 필요한데 일본은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만약에 군사행동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기지의 가치는 90% 상실되게 된다는 것 등을 물었다. 국무성 측은 그러한 문제는 일본 본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일합동위원회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는 ‘일본이 언제나 미국의 우방이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하며 국무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육군참모총장도 미일간에는 무역상의 문제도 있으며, 일본이 미군의 주둔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육군성에는 오키나와의 반환 문제에 대하여 함구령이 내려져 있었다. 국무성과 통합참모본부의 의견 대립은 군사적인 가치가 낮으며 일본복귀운동이 강했던 아마미제도 반환(1953)에 의해 일단 낙착되었다. 아마미 반환으로 일본을 다독거리는 대신 오키나와의 ‘무기한 통치’가 합의된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4년의 연두교서에서 오키나와 기지를 ‘무기한 유지한다’는 것을 선언했다.

아마미 반환에 있어서 국무장관이 된 델레스는 일본의 재군비가 오키나와 반환의 조건임을 일본측에 통고했다. 이후 일본정부는 오키나와 문제를 미국의 ‘내정문제’로 간주하며 오키나와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였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기지반환운동이 고양되면서 일본 본토의 정치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자 오키나와 통치에 대한 참가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이 오키나와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맺은 것이다.

오키나와에서 복귀운동이 고양되면서 '70년 문제'가 미일간에 긴급한 문제가 되었다. 다나카 수상은 오키나와 기지의 자유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권 반환을 미국에 요청하였다. 1972년의 복귀 후는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일본정부가 오키나와 통치의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이 새로운 미일협력은 그야말로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후텐마 비행장 이설문제를 보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보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급하지 않겠다.

5. 나오면서

본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델레스의 입장에 대하여 약간 강조해두었으면 한다. 1950년 5월중간 즈음에 국무성에서 대일 평화조약의 담당자로 델레스가 임명된 것은 그가 야당인 공화당의 거물이며, 외교교섭에도 경험이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화당 우파와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이 대일 평화조약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데서였다. 그래서 델레스에게 있어서 공화당 우파의 지지가 강한 맥아더와 상원 외교위원회, 그리고 군부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극히 중요하였다.

그러나 델레스는 당초(1950.5)부터 오키나와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박탈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뜻을 국무성의 담당자에게 전하고 있었다. 영토문제를 요시다 수상과 토의한 1951년 1월말의 회의에서 델레스는 오키나와 문제는 순수히 군사적인 측면 이외에도 고려되는 사항이 있다며, "미국은 수 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백만에 가까운 외국인에 대한 책임을 가버리 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델레스의 이 발언을 중단시키는 형태로 육군성 대표는 미국은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키나와 주민을 통치해야만 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에 델레스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영토문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해야만 할 사항이며, 일본이 간여할 문제가 아님을 못 박았다.

말하자면 델레스는 일본과 영토문제(그리고 평화조약)를 '교섭'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우리측의 견해'에 나타난 일본측의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한때 바이마르처럼 평화조약에 대한 반대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그래서 델레스는 일본의 야당 지도자와 정력적으로 회담하였다. 그러나 오키나와에 관한 일본측의 요청이 완전히 효과를 거두지 못

6)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맞이하는 1970년에 1960년과 같은 반안보투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7) 트루먼 정권은 중국을 공산주의에게 '상실'했다는 점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 있었다.

했다는 것은 아니다. 1951년 3월 23일의 초안에 'all and any power'를 추가함으로써 미국의 정책에 유연성을 가져다 준 것도 독립 후의 일본의 정치상황의 변화를 예상하였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일본의 잠재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에게 남겨진 현실적인 유일한 선택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회의에 관한 일본측의 공문서가 해금되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공문서에 대한 언급을 해 두고자 한다. 우선 오키나와를 다룬 부분은 극히 적다. 델레스와의 회담(1951.1.31)에 대하여, 영토문제는 '국민감정은 잘 알지만 항복조항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불행이다'며 미국 측이 피력한 것만 기록되어 있다.

맥아더와 요시다의 회담(1951.2.6)의 기록은 매우 흥미롭다. "(요시다) 총리로부터 '델레스 대사와의 회담에서 영토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본 국민의 영토문제에 대한 강한 관심을 고려하여 정부의 책임자로서 한마디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한 것이다. 영토사항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맥아더는 '그랬구나'며 총리의 뜻을 양해했다." 더욱이 일본측은 3·23 메모의 all and any power를 '일체의' 권한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일본측이 미국 측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문서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일본측은, 오키나와의 처리는 '항복조항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며 포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요시다·맥아더회담의 기록에서도 명백하다. 3·23 메모 중에 all and any power의 번역도 '영토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는 체념의 선입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 자료는 일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종래의 연구와는 반대로, 역으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둘째, 해금된 일본측의 주장은 지극히 한정된 것이며, 그밖에도 미공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셋째, 또는 일본측의 회의의사록 등의 기록 방법이 원래 간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일본측의 자료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상세한 미국측의 자료와 대조하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8) 그러나 '정부 책임자로서'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한 것뿐이며, '다른 뜻은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점령하의 미군기지 매매촌과 지역

히라이 카즈코 (平井和子, 시즈오카대학)

1. 히가시후지(東富士) 연습장의 개략

히가시후지 연습장은 일본 고텐바시(御殿場市)·스소노시(裾野市)·고야마정(小山町)에 걸친 약 9,000 헥타르의 광대한 군사기지이다. 그 출발은 노일전쟁 후의 군비확대와 함께 설치된 일본육군의 후지스노(富士裾野)연습장이었다. 이 연습장은 1945년 패전으로 일단 지역에 반환되었지만, 미군점령 하에서 다시 미군에게 접수되었다. 냉전의 진전과 함께 1948년 이 시설은 조달시설에서 군사점령시설로 바뀌었고, 연습장에는 이른바 '맥아더 라인' 이 그어져 지역주민들이 연습장에 드나드는 것이 금지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면적1,3000ha의 훈련장으로 확충되어, 다키가하라(瀧ヶ原)에 북 캠프, 이타즈마(板妻)에 중 캠프, 駒門에 남 캠프가 설치되었으며, 이 곳에 한국군 병사도 파견되어 왔다.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이후에도 미일안보·행정협정에 따라 미 육군이 계속 주둔하다가 1958년에 철수하기까지 사실상 점령체제가 계속되었다. 이 연습장은 1968년 반환되었지만, 현재도 자위대 후지학교(富士學校)의 관리하에서 자위대와 오키나와를 본거지로 하는 미군 제3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다.

접수지에는 공유지·민유지의 비율이 약 60%로 높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경작지나 뽕나무밭, 입회지(入會地)¹⁾의 대부분을 잃었다. 특히 총면적의 8할을 접수당한 印野村에서는 약 350호 중에서 280호가 이농을 하게 되고, 남은 주민들은 일용 노무자나 캠프 노동자가 되는 등, 이 지역의 산업 구조는 크게 변화하였다.

2. 한국전쟁과 '매매촌'

1) 마을, 공동체가 전통적으로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토지(편집자주)

1) 전쟁발발과 기지의 확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히가시후지는 실전 훈련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 시설이 확대되었다. 신제 중학교로 구육군의 이타즈마 병사(兵舎)에 개교한 原里 중학교는, 미군의 인도 명령에 따라 1951년 5월에 학교의 일부인 소학교를 빌려주게 되었다. 또한 남 캠프에 인접한 후지오카(富士岡)중학교는 운동장이나 교사(校舍)의 일부가 미군에게 접수되어, 교사 주위가 환락가로 둘러싸인 '기지 속의 중학교'가 되고 말았다.

군사훈련이 격화되는 가운데, 예광탄이 주민지구로 떨어지거나 여성농민이 유탄을 맞고 절명하거나 총탄이 폐탄(廢彈)을 줍던 주민의 손을 꿰뚫고 지나가는 등,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주민들이 출입금지를 어겨가며 폐탄을 줍기 위해 훈련장에 자주 들어가면서, 불발탄의 폭발에 의해 1949년부터 1958년까지 이 지역의 신문이 보도한 것만도, 아이를 포함해서 30명의 사망자와 80명의 부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매매촌'의 격화

전쟁 격화에 따라 주둔하는 부대병력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판판(バンバン)²⁾이라는 이름의 미군병사를 상대하는 매매촌여성들이 캠프 주위로 모여들어, 농촌·산촌에 영어로 된 간판을 내건 특수음식점이나 하숙이 '하룻밤 사이에' 우후죽순처럼 늘어섰다. 그것도 부족해서, 농업만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게 된 농가들도 여성들을 하숙하게 되었다. 판판을 하숙시킨 민가를 포함하여 매매업자는 절정기인 1953년 시점에서 네 곳의 집창(集娼)지구 (고텐바정과 3캠프 주위)에 371곳이었고, 여기에 약 900명의 판판들이 상주했다. 주말에는 수도권의 여성들도 이 곳에 모여들어, 2000~3000명으로 불어났다. 특수음식점경영자는 미군병사가 일박하는 요금 (2000~3000엔)의 4~5할을 자기 것으로 했으며, 게다가 방 이용대금이나 음식비를 여성들에게 부담시켰다. 민가에 하숙하는 경우, 6첩(疊) 크기의 방 값이 한 달에 5000~6000엔으로, 지역전체가 여성의 몸을 이용하여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3) 미군의 매매대책 변화

1951년 5월, 캠프 후지의 헌병대장은 고텐바 경찰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 ① 일본인 부녀자는 진주군 장병을 호객하기 위해서 도로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손님을 끌어서는 안 된다.

2) 판판이란 연합군병사를 상대로 한 매매여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연합군에 의해 생겨난 말이지만, 매매여성을 가리키는 일반적 통칭으로 1946년경부터 유포되었다.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 있지만,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군 점령지에서 행해진 매매행위에서 유래한 듯 하다. 이에 따르면 그 루트는 일본군의 행위에 있으며, 그것이 부메랑처럼 미군을 매개로 하여 전후 일본으로 되돌아왔다고도 말할 수 있다.

- ② 직업으로 도로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진주군 장병을 상대로 손님끌기(ポン引)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③ 일본인 부녀가 손님을 끌어들이 목적으로 미군 후지 캠프 부근을 배회하는 것은 연습장 사령관이 발한 지령 위반이다. (「섭외관계철」, 玉穂村관청 1951)

이는 매춘 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나 캠프 주위에서 공공연하게 행하는 매춘을 금지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전인 1949년 8월 캠프 후지 사령관으로부터 「매음행위를 하는 자(판관)는 곧바로 고덴바 지구에서 쫓아낼 것을 명함」(「자치협력단 印野 분단실시요강」, 印野村役場 1949)이라는 지침이 나와, 인노무라(印野村)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연습장 주위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추방할 것'이라는 합의의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군의 매춘부대책이 한국전쟁 개시 이전(1949)과 개시 이후(1951)가 다르다는 점이다. 즉 '판관 추방'에서 관리매춘을 전제로 한 '공공연한 매춘의 금지'로 방침이 변화되었다. 여기서 전쟁과 '매춘'의 밀접한 관계를 읽어 낼 수 있다.

3. '판관(バンバン)'들의 상황

전후매춘의 시작은 패전직후 국책에 따라 RAA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³⁾에 모여든 여성들이, GHQ의 출입금지령(1946.3)에 따라 가두에 축출된 것이 직접적인 계기이다. GHQ는 미리 빌린 빚으로 묶여 있는 창기들을 '백색 노예(white slave)로 간주하여, 1946년 1월 공창제도의 금지를 명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창기 단속규칙을 폐지하여, 오랫동안 계속된 공창제도가 소멸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행하는 매춘'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창기를 접객부, 매춘하던 곳(座敷)을 접대소로 개칭하여 영업을 계속하도록 했다. 1946년 11월에는 집창지구를 특수음식점가로 지정하여, '적선(赤線)지역(홍등가)'으로 경찰의 단속하에 두었다. 사실상 공창을 존속시킨 것이다.

패전후 사회의 혼란이나 생활난 속에서 매춘산업으로 흡수된 여성들은, 국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적선(赤線)적 존재와 그 이외의 사창(街娼)으로 크게 구별되었다. 고덴바 주변에서도 두 집단 모두 존재했지만,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병검진을 받은 자료가 남아 있는 등록여성들이다.

1) 고덴바 주변의 '판관'들

고덴바 주변 판관들의 상황은 성병관리와 부수적으로 행해진 신상조사에서 그 일단을 읽을 수

3) RAA=특수위안시설협회, 패전 사후 뒤인 1945년 8월 18일, 정부의 요청으로 업자들(貸座敷業者)이 설립한 점령군을 대상으로 한 '공창'시설. '일반 부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내무성이 지령을 내려 경시청·오쿠라쇼(大蔵省)가 편의를 봐주어 생활이 어려운 많은 여성들을 모았다.

있다.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고덴바 보건소의 세 가지 조사와 고덴바정사무소에서 작성한 대장(台帳) 하나로, 시기적으로 1952년과 1953년에 집중해 있다. 그것은 성병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1951년 7월에 고덴바정에 보건소가 개설되어, 1952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나서부터라고 생각된다.

그 여성들의 연령, 출신지에 대해서는 별첨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단 여기서 잠시 출신지에 대한 고찰을 해보자. 자료에 따르면, 출신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도쿄도(都)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온 여성들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현내 출신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표<2>의 5위에 히로시마(廣島), 7위에 나가사키(長崎)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 서일본에서는 이 두 지역뿐이다. 이 지역의 『향토 뉴스』가 '다치가하라(瀧ヶ原)에 히로시마 원폭으로 집이나 의지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40여명이나 있고'(1955. 6. 2)라고 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폭피해에 따라 여성들이 매춘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판관들은 업자가 조직한 '백설회(白雪會)'라는 조직에 가입했지만, 이는 성병검진을 위한 편의적 조직으로, 다른 병에 걸린 경우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었다. 이 지역 신문에는, 결핵에 걸려 홀로 죽어간 여성이나 내버려진 아이들의 정황이 자주 전해지고 있다. 또한 미군병사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듣고 출산했지만, 소식불통이 된 채 버려져, 출산한 '혼혈아'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 혹은 귀환한 미군병사들이 날뛰어, 1950년대초의 고덴바 주변에서는 싸움이나 범죄가 급증하였다. 그들을 일 대 일로 상대하는 판관들이 심한 성폭력에 놓여졌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필자가 1997년에 청취한 고덴바 시내에 거주하던 70대의 남성들에 따르면, 전에 판관 여성이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기에 비닐로 된 병을 집어넣는 등의 폭력을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체험을 들었다. 또한 다치카와(立川) 부근의 미군병사들은 판관들을 '엘로우 스톨'(노란 변기)로 보고 있었다고 말한다. 기지 주변에서 행해진 매춘행위는, 본질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행한 강간'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4. 성병관리정책 - 미군·업자·행정의 연대 -

1) 성병 예방법 제정과 강제검진의 개시

패전 직후, 일본정부가 준비한 RAA를 이용하는데 있어, GHQ는 도쿄도(都) 위생국에 매춘여성에 대한 검진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병에 걸린 자는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명령했다. 도쿄도는 이

4) 간자키 기요시(神崎清)는 「전후일본의 매춘문제」(1954.43) 중에서, 다치카와(立川) 등의 기지에서는 미군병사들 사이에 판관을 가리켜 '엘로우 스톨'이라 부르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매춘(買春)하는 것을 「노란 변기에 배설하러 간다」, 전용매춘부를 데리고 있는 것을 가리켜, 「노란 원숭이를 우리에게 가둬두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한다.

를 받아들여 1945년 10월 매춘여성에 대해 강제검진실시를 위한 성병예방규칙을 제정했다. 그 해 10월, GHQ는 일본정부에 '성병을 전파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자'에 대한 검사·치료를 포함한 '화류병 대책에 관한 각서'를 발령했다. 정부는 이를 받아서 11월, 화류병 예방법 특례를 후생성령으로 공포하고, '성병을 전파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지방장관이 행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으면 손님을 접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병사의 매춘을 전제로 하여, 성병 감염원을 여성에게서 찾고 여성에 대한 성적 관리를 피한다는 발상은, 구 일본군이나 미군이나 공통적이다. 이는 성병 예방법으로 전국적으로 실현된다.

시즈오카현(靜岡縣)의 성병대책에 대한 점령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가장 빠른 자료는 1946년 12월의 「시즈오카신문(靜岡新聞)」이다. 이 신문기사에 따르면, 현민 중에 성병 환자가 증가되자, 시즈오카 군정부(軍政部)는 '위생부의 예방대책이 미지근하다'고 해서, '환자에 대한 정기적 치료법을 지급으로 보고' 하도록 명하고 있다. 시즈오카현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우선 매춘여성 중에서 성병에 걸린 자 43명을 국립병원에 수용했다. 그 때 '치료약품은 전부 미군 것을 사용할 것'이란 지시를 받았다. 1947년, 현은 "연합군의 엄중한 지령에 근거하여, 화류계에 대해서 주 1회 임상 및 세균검사를, 매월 1회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화류병 치료소'로써 새로 병원을 지정했다. 이처럼 각지에서 점령군으로부터 성병 예방책을 세울 것을 요구받아, 그 '근본 치료대책을 강구할 필요'에서 성병 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동법 제정의 배경에는 미군병사에게 성병을 감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점령군 (PHW)의 강력한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1948년 7월에 시행한 성병 예방법은, 전년부터 성병환자가 주요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거의 두 배나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격증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다. 이 법은 그 이전의 창기와 가창(街娼)을 대상으로 한 화류병 예방법을 넘어서서 우생(優生)사상에 근거하여 국민전체를 정책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성병검진이나 치료의 의무, 결혼에 즈음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교환하도록 힘쓸 것 등이 명기되었다. 이에 앞서 1947년, GHQ의 지도에 따라 보건소법이 개정되어, 경찰서 소관이던 위생행정이 보건소로 이관되었다. 1948년에는 각 도도부현에 위생부가 설치되고, 성병예방은 위생부의 지도 아래 각 보건소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 법률에 따라 성병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매춘상습자'에 대한 강제검진이 가능해지고, 성병환자가 매춘을 했을 경우의 처벌이나, 알선·권유·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었다. 그러나 공창제도를 폐지시킨 상태에서 '매춘상습자'에는 표면상 적선 종업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을 중시한 자주적 검진제를 채택할 생각을 하기에 이른다. 즉 업자나 종업부의 '자주적인 조합 결성을 꾀해'5), 언뜻 보기에는 자발적인 검진을 행하도록 하여, 이 검진을 받지 않은 가창(街娼)은 철저하게 단속했던 것이다.

고덴바 주변에서의 일제검진은, 이 보건소의 문서에 따르면 1951년 3월(네 지구에서 461 명, 감

5) 「사창의 단속이나 발생방지 및 보호대책(私娼の取締ならびに發生の防止及び保護対策)」에 대한 사무차관회의 등의 결정(1946.11)

염을 29.0%)에 이루어졌고, 1952년 9월부터는 매주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문서나 보건부의 증언으로 보면, 요일을 정해서 보건소원과 의사가 각 집창지구의 업자가 '○○촌 자치협력회'와 같은 명칭으로 설치한 검진소를 순회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양자의 제휴에 관해서, 현 위생부에서 보건소장 앞으로 보낸 「고덴바 지구의 성병예방에 대해서」(1951.12) 라는 문서에 따르면, "업무상의 연락 및 지도를 위해 이들(업자)이 조직한 단체를 이용하는 일은 상관없지만, 본질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으로 협력하고 행동하는 단체로서 취급 지도하도록 특히 주의하기 바란다" 라는 배려를 하고 있다. 현 위생부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있다.

- ① 법에 입각한 검진을 실시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과로 연락함과 함께, 성적은 그 때마다 보고할 것.
- ② 본 건은 국경(國警)본부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실시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과 세세한 부분을 의논할 것.

이상으로 볼 때, 검진은 미군의 요청을 받아서, 보건소와 현 위생부, 그리고 경찰서의 관리·지도 아래, 업자 (고덴바에서는 백설회) 가 이에 '자주적으로' 협력한다는 형태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검진실태

검진방법에는 미군의 요청도 반영되었다. 1952년 9월에 발표된 고덴바 지구 성병예방대책의 대강에는, 미국측과 절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 ① 카바레, 유흥장에는 백색카드 (접객부에게)
- ② 음식점에 대해서는 승인한 별지 영문으로 된 인가증을 점두에 붙인다
- ③ 온리, 버터플라이 (청색카드)

여기서 '카드'란, 요강 중에서 '건강 입문'이라 부른 매춘 패스포트이다. 이는 정기검진을 받은 자에게 발행되어, 이것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몰래 숨어서 매춘하는 자로 경찰의 단속대상이 되었다. 즉 '자주적 검진'이라 말하면서도, 검진카드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검진이라 말할 수 있다. 당시 보건부(保健婦)에 따르면, '검진하러 올 때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 이 같은 검진의 본질에 대해서 시즈오카 2구에서 선출된 참의원 의원 후지와라 미치코(藤原道子)는, 제15 국회(1953)에서 다음과 같은 긴급질문을 하였다.

"접객부와 매춘상습자에 대해서는 백색과 청색 두 색깔의 사진이 붙은 '건강입문'이라고 하는 매춘 패스포트가 발행되어 (중략), 그것도 그 업자 집의 처마 밑에 두고서는, 이와 같은 영문과 일문으

로 된 '건강의 집'과 같은 표시가 붙여지고, 게다가 거기에는 성병검진이 끝났다는 내용, A여성, B 여성등, 여성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분명 인권유린이며 국내법 무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진방법에 관하여 살펴보자. 고덴바 보건소 개설 당시부터 근무했던 보건부(保健婦)에 따르면, 검진에는 내진과 혈액검사의 두 종류가 있고, '현의 예방과에서 현미경을 실은 차도 와서, 내진시의 질분비물 검사, 즉 임병 검사를 행했다'고 한다. 내진용 진찰대는 목제로 된 것이 3대 있었다. 보건부는 주로 혈액검사를 하고, 그 결과 양성, 즉 매독 감염자이면, 여성들을 침대에 눕히고, "다음!"하고 말하듯이 엉덩이에 페니실린주사를 놓았다. 1997년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또 혈관주사를 놓으려고 해도 필로폰을 맞은 흔적이 마치 화상 흔적처럼 굳어져 있는 '필로폰 중독자'가 많아서, 좀처럼 혈관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후지와라(藤原)는 '기지-御殿場-의 경우'(『법학신서 I』, 1956)라는 글에서, 이들을 검진할 때 미군병사가 입회한 점에 대해서, "미군의 일본인 의사를 신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그들의 손으로 검진을 행한다. 때로는 맥주 등을 마시고 외설스런 이야기를 하며 이 검진을 강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소 총무과장은 당시를 돌이켜보고, '미군의 협력기관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하고 있다(『고덴바 보건소 20년사』 1972).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강화조약 발효 뒤에도 미일안보·행정협정 아래에서 계속해서 점령기와 변함없는 우위가 미군에게 보장되어, 매춘여성을 포함한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었다. 후지와라가 말하는 것처럼, 점령·주둔군은 미군병사의 성병 예방을 위해서라면 일본의 법률도, 일본인 여성의 인권도 문제가 아니었다. 점령이 끝나고서도 기지주변에서는 점령상태가 계속되고, 그 지배-피지배 관계는 비대칭적인 젠더 관계 아래서 미군병사를 위한 '더 안전한 매춘'의 보증이 미국과 일본 남성들, 즉 미군-일본의 행정기관-업자의 제휴로 행해졌던 것이다. 이 같은 여성에 대한 억압은 군대가 존재하는 곳에서 재생산되고, 그것이 진시에 현재화(顯在化)하는 것이다.

※ 이 글에 관한 참고로 필자의 다음 논문을 참고해 주시오

「米軍基地と「買賣春」-御殿場の場合-」(日本女性學會「女性學」Vol. 51997)

「米軍基地買賣春と反「賣春」運動-御殿場の場合-」(女性史總合研究會「女性史學」第11号 2002)

참고문헌

藤目ゆき, 「性の歴史學」, 不二出版 1997

藤野豊, 「性の國家管理」, 不二出版 2001

<표>

한국전쟁과 여성

-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를 중심으로 -

김귀옥 (경남대)

1. 들어가며

1996년 6개월을 상정하고, 이산가족 중에서 월남이산가족들이 주로 모여살고 있는 강원도 속초, 소위 '아바이마을'에서 수행한 현지조사는 나에게 있어서 판도라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전까지 피상적으로 알고 느꼈던 은폐되거나 왜곡되거나 잊혀졌던 현대사의 잃어버린 조각들이 판도라상자 속에서 여전히 은폐되거나 왜곡되었거나 낮은 목소리로 남아 있었다. 물론 그 판도라상자는 사람들의 '기억'이다. 기억 속에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된 이산가족의 기억과 망각, 아픔은 말할 것도 없고 북파공작원, 민간인 학살 및 납치, 성폭행, 강제동원, 한국전쟁에서의 혐의 짙은 세균전, 고질적인 군정경유착의 구조, 반공이데올로기의 연고망과 같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은 '반공', 즉 '냉전'이라는 하나의 씨앗에서 싹튼 문제들이었다.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것의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 내에 위안부와 군위안소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후 몇 년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발표하였고, '분단과 통일의 사회학'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면서 간간히 한국전쟁 시기의 군위안부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 왔다. 그 과정에서 군인과 군위안부와의 기가 막힌 인연이 일제와 분단과 전쟁 위에서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악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내가 찾아낸 군위안부 문제는 퍼즐의 몇 조각에 불과하다. 퍼즐의 모든 조각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찾아내어 질지는 알 수 없지만 몇몇 조각들이나마 꿰맞추듯 연결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 글은 육군본부가 1966년에 발간한 『후방전사(인사편)』에 기록된 군위안대에 대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미군, 북파공작원들, 민간인들, 피해 여성들의 증언, 예비역 장성의 회고록과 증언 등의 1차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아직 군관계 자료가 보충되

어야 하고 피해 여성들의 증언과 책임 있는 군인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미국 내 보관되어 있을지도 모를 관계 자료들을 발굴하여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야 한다.

아래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군위안부를 문제 제기하고 군위안부와 군위안소 실태를 대략적이거나 밝히고 쟁점과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 과정

군위안부와의 만남 1 : 알 수 없는 위안부의 존재

위안부 문제와 처음 부딪치게 된 것은 1996년 11월, 속초의 월남인, 김씨와 인터뷰하던 도중이었다.

(1950년 10월 중순인지, 하순인지 확실치 않는데) 내가 유엔군놈들한테 잡혀서 손짓 발짓으로 내가 인민군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국군통역에게 호소를 해도, 나와 고향친구를 포로라고 해. 그게 평안북도 개천 무렵이었던가 싶어. 거기서부터 나와 고향친구는 포로가 되어 아군이 시키는 대로 했지. 아군들한테 밥도 하고 빨래같은 일도 해주며 밥을 얻어 먹었어. 그란디 이상한거야 군위안대 여자들이 있었던거야. 군위안대 여자들은 주로 이남사람인거 가타. 이북말씨를 안했던 건 분명해. 이남에서 군대 따라 온 것 같아. 그들은 군인들을 위문하는 일을 했어. 그들은 부근에 있던 민간인집에 묵었지만 군인들은 우리한테 그 여자들 밥도 해먹이라 시켰어. 그래도 내외하느라 얼굴은 잘 못봤지. 당시 그들은 읍내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듯했어. 군인들하고는 친했고..

민간인으로 미군에 잡혀서 결국 포로로 취급당해 몇 년을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결국 반공포로서 1953년 6·18 불법포로 석방시 나와서 이북의 가족들과는 영영 생이별을 하게된 김씨와의 인터뷰에서, 귀가 번쩍 열리는 예상치 못한 얘기를 접하게 되자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했다. 남성 노인들과의 면담에서 간혹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섹슈얼리티 관련 문제가 나오면 함축적인 웃음으로 상황을 외면하려고 한다. 그 여성들이 '공연'하는 일 외에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거 있잖아...' '상상에 맡기겠어' 하는 식으로 상황을 얼버무렸다.

김씨가 목격한 '군위안대'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와의 면담 이후 한국전쟁과 '군위안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 밝혀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군위안부와의 만남 2 : 미군참전용사와 속초의 군위안소

1999년, 강원도 속초에서는 국제관광EXPO가 개최된다고 홍보에 열을 띠고 있었다. 속초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속초파일을 계속 쌓아 오고 있다. 어느 날 속초 시청으로부터

터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속초에서 위관급으로 군생활을 했던 미국인 폴 팬처(Paul Fancher)씨가 속초에 관광차 와서 누군가를 찾겠다고 하니 그를 도와줄 수 없겠냐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1953년 속초에 있던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는데, 같은 부대에 있던 한국인 노무자들 몇 명과 'mamasan'이라고 불렀던 여성을 찾았다. 그가 제시한 50년전 사진의 인물들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속초지역신문에 공고했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다.¹⁾

1999년 9월, 그를 만나 1953년 속초 미군부대에 근무했던 당시 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기회를 가졌고 그 후 몇 차례 이메일을 통한 질의문답의 글을 주고 받았다. 마마상이라는 별칭은 일본에 주둔했던 경험이 있던 미군들이 여성 노무자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지만, 이 여성이 위안부라는 증거는 없었다. 팬처씨를 통해 한국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²⁾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 가운데 하나는 속초 시내에 군대가 경영한 군위안소가 있었던 사실이다. 팬처 자신은 위안소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위안소 앞에는 대개 군인들이 줄을 지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속초 원주민인 박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속초시 중앙동 시청 부근에 1군단 홀병부(恤兵部)에서 운영했다고 알려진 '호라스³⁾'라고 불리는 군위안소가 있었다. 위안소에는 대략 15명 정도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 사창과는 달리 민간인의 출입은 금지되었다고 한다. 속초 군위안소는 1951년 8월 군정⁴⁾이 실시되면서 생겨서 1954년 11월 민정 이양 전에 없어졌다고 한다.

군위안부와 만남 3 : 북파공작원과 위안부의 악연

한국전쟁 당시 많은 월남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북파공작원⁵⁾이 되었던 것 같다. 그들이 남하 피난(displaced to the south)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와 관계가 있다.⁶⁾ 북파공작원이 된

- 1) 2001년 7월, 속초 현지조사에서 그 마마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과거 속초 척산리 미군통신부대 근처에서 미군과 같이 살던 양공주들을 하숙시켰던 한 부인의 증언에 따르면, 마마상은 그 딸과 함께 미군부대에서 일을 해주어 먹고 살았는데, 1956년경인가 미군부대가 이동할 때 이사를 해서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 2) 팬처씨는 1953년 휴전 직전부터 1954년 8월까지 전화교환수로 속초에서 복무했다. 그가 속한 부대의 활동목표 중 하나는 대북첩보활동에 대한 지원 및 연락이었다. 그는 부대들간에 통신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속초 앞바다나 남한 전역에 걸쳐 15군데 정도에 대만에서 온 첩보부대인 소위 '대만부대'가 이미 주둔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당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 3) 홀하우스의 잘못된 발음인지 분명하지 않다.
- 4) 강원도 속초와 양양에 실시된 미군정은 한반도에 실시된 세 번째 미군정이다. 만 3년간의 군정 기간 동안 그 지역은 유엔군의 관할이 되었으며 1954년 11월 비로소 대한민국 관할로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귀옥의 「잃어버린 또 하나의 역사-한국전쟁시기 강원도 양양군 미군정 통치와 반성」(「경제와사회」 2000 여름호, 통권46호)을 참조바람.
- 5) 한국전쟁 당시 북파공작원을 둘러싼 명칭이 분분하다. 회고록이나 군 관계 자료, 여러 자료들을 보면 무명용사, 군번없는 군인, 유격대, 공작원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당시 국방부에서는 그들은 '장용자'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김귀옥, "납치 북한인을 공작원, 위안부로 이용했다: 북파공작원의 현대사 증언" 「월간말」 2000. 12월호 참조.
- 6)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귀옥의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대출판부, 1999)를 참조바람.

이유로는 우선 반공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북파공작원이 되어 복수하고 적을 타도하겠다는 이유가 '정답'에 가깝다면 내가 만난 월남인 출신의 많은 공작원들은 그 정답으로부터 멀었다. 그 정답은 공작원들이 대북첩보활동을 하는 동안 덧붙인 '명분'이고 처음에 공작원이 되었던 것은 고향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또는 납치되어 어쩔 수 없이 공작원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강했다. 공작원이 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던 가를 물으면 그들은 냉소를 띠면서 '총, 칼로 무장하고 있는 그들'이 죽으려면 죽는 시늉이라도 내야 했다'고 대답하곤 한다.

북파공작원 출신의 월남인들을 몇 명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들의 활동 속에서 '위안부'라는 존재가 놓여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북파공작원 18)은 비교적 큰 부대에서 공작원으로 활동으로 했고 대북 공작이 한 번 끝나면 대개 본부가 있던 속초에 들어가 보고하고 나면, 속초 시내에 있던 위안부가 있던 술집으로 직행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폴 팬처나 박씨의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북파공작원 29)와 북파공작원 30)은 북한으로부터 납치한 여성 위안부와 관계를 맺고 있다. 북파공작원 2는 자신이 북한 여성을 납치해왔고, 북한공작원 3은 그 여성과 사촌관계였다. 공작원 2의 활동에 대해서는 「월간 말」 2000년 12월호에 밝혔지만 다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1951년 5월경, 최씨가 원산 앞바다에 있을 때 어느 섬에서 여맹원들이 회의를 하기 위해 한 집에 모두 모여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대장의 지휘에 따라 그를 포함한 5명은 야음을 틈타 그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자신의 옆 동네이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 훤히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신을 신은 채 동네처녀들이 있다는 방에 들어닥쳤다. 그 방에는 집주인인 듯한 남자가 있어서 저항하기에 그의 목을 따 죽여버렸다. 동이 틀 무렵 여성들 4명을 끌고 해안가로 나와 타고 온 배로 섬으로 돌아왔다. 도중에 오만한 미 전투기의 공습을 받고 어이없게도 여성 한 명이 죽었다. 3명의 여성들은 두려움에 완전히 기가 질려 울지도 못했다.

그들은 여성들을 여도 본부로 넘겨주었다. 그 중 최씨의 소학교 동창이었던 문씨(69세)는 이 아무 하사관에게 겁탈 당했다. 결국 문씨는 이 하사관과 정전이 될 때까지 여도에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살았다고 한다. 다른 여성들은 낮에는 군인들의 밥과 빨래를 해주었고 밤에는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그러다 정전이 되자 문씨는 원래 본처가 있었던 이 하사관에게 버림을 받았다. 결국 재혼한 문씨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다.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문씨를 필자가 접했을 때 그는 "나는 아이 둘 낳고 고생하며 산 것밖에 아무 것도 한 게 없어"라고 말하며 과거를 가슴에 묻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은 양도에서도 있었다. 당시 대원들은 성진 부근에 살고 있는 여성 2명을 납치해왔다. 그들은 유사시를 대비해 늘 유격과 첩보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밥과 빨래하는 것

- 7) 납치하는 정규, 비정규 군인들을 의미함.
- 8) 그는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11시간 이상 소요된 면접에 참여해준 용감한 1세대 HID 용사이다.
- 9) 공작원29)는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활동의 의미와 전쟁 당시 북파공작원이란 존재에 대해 깨달아가고 있다.
- 10) 속초에 거주하는 공작원 3은 1996년 이래 현재까지 연락을 취하고 있는 분이다.

을 싫어해 여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다 맡겼다. 물론 밤에는 간부들의 성노리개가 되어야 했다. 누구 한 사람,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공작원 2(인용문의 최씨)는 부대 내에 위안부를 데리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우리'가 '일본군'과는 다르지 않느냐, 우리와는 정이 통하지 않느냐며 납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설명을 흐렸다.

문씨는 몇 번의 전화 통화에서 전혀 위안부 얘기를 꺼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언짢음을 표현했다. 그와 친척인 공작원3으로부터 그의 처지에 대한 해명을 들으며 그의 불운한 처지를 이해하라는 충고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문씨는 당시 지역에서 여맹원으로 활동할 만큼 활발하고 똑똑한 청년으로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가진 듯했다.

군위안부가 될 뻔한 여성의 증언

한국전쟁 당시 공식, 비공식적 위안부의 규모는 얼마나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전쟁 직전 사창의 규모를 능가할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 1947년 미군정 당시 공창을 폐지하기 직전 공창의 규모는 2,124명¹¹⁾으로 알려져 있다. 1948년 2월 미군정청의 공창폐지령이 발효된 후, 1948년 10월말경이 되면 사창이 5만여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 또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30여만명으로 늘어났다.¹³⁾ 성매매 여성이 늘어난 데에는 생활고뿐만 아니라 '일제 말기(……) 수천 명의 위안부들이 해방 이후 고국에 들어와 생계를 잇지 못해 창기로 전락'¹⁴⁾했던 데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위의 경우처럼 민간 여성들이 납치와 강제의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던 여성들도 있었다.

나는 납치 또는 강요에 의해 군위안부가 될 뻔했던 또 다른 여성과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대단히 어려웠는데, 두려움과 귀찮음이 혼합된 복잡한 감정의 문제로 인해 그는 계속 망설이다가 한 달여 만에 인터뷰를 허용하였다. 2001년 3월, 삼일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그는 연실 긴장했고, 끝내는 50년전의 일로 인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수 십년 동안 의사활동을 하고 있는 유명인사였던지라 극구 익명을 요구했다. 그를 이씨라고 하자.

1950년 당시 의과대학생이었던 이씨(73세)는 6.25 발발 당시 피난하지 못했는데, 서울에 들

어온 인민군들에 의해 군의관으로 일을 했다. 당시 서울에 남아 있었던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도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트럭에 올라타라고 하여 이화여자대학생들과 동명여자중학교 학생들과 섞여 이씨는 군용트럭을 타고 대전을 거쳐 왜관에 가서 낙동강전선에서 부상당한 인민군인들을 치료하게 되었다. 맥아더가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문이 들고 얼마 안 있어서 후퇴 명령이 떨어져 그는 인민군대들과 후퇴의 길에 올랐다. 이씨는 수 십일에 달하는 인민군과의 생활에서 신기하게 기억되는 것은 인민군 누구도 자신이나 다른 여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군과는 대조를 이루는 이러한 사실이 자신의 신념을 혼돈시키는 것 같았다. 대전부근의 어느 산에서 후퇴하는 사람들이 운집하였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좌충우돌하던 무렵, 그는 인민군 장교에서 "우리는 서울에서 온 의과대학생들인데 전쟁이 끝나 여러분들은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우리도 부모가 계신 서울로 가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요청하였다고 한다. 장교는 이씨를 포함하여 함께 있던 여성 3명을 선뜻 놓이주어 산을 내려왔으나 곧 인민군을 추격하던 국군들에게 잡혔다.

국군들이 민간인 포로들을 줄줄이 묶어 끌고 가고 있었다. 국군이 우리에게 뭐냐고 하길래 우리는 "00의과대생들이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00여대다, 00여중생이다 하면 모두 빨갱이로 몰려 총살을 당하던 때였어. 그 부대의 대장은 우리에게 "차에 타"라고 해서 우리 4명은 꼬차에 탔어. 그 꼬차를 타고 길을 떠났지 뭐. 밤이 되어 어떤 초가집에 일시 정박을 했고 대장과 우리는 한 방에 있게 되었어. 그런데 글썽, 그 놈은 내게 눈독을 들였던지 한 밤이 되어 내게 다가와 더듬었어. 그는 내게 덤벼. 나는 결사적으로 반항을 하며 빌었지. "서울에 가서 결혼을 해도 좋다. 하지만 여기는 아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때만 해도 내가 수줍음 많이 타는 처자였거든요. 암튼 국군들은 우리를 인민군에게 버림받은 찌꺼기로 여겼어. 욕설을 퍼부며 '쳐녀'냐고 묻길래 나는 "진짜 쳐녀다"고 대답했어. 그는 안 믿는, 못 믿겠다는 눈치였고, 한참을 실갱이 하다가 결국 그는 포기하고 다음 날 아침에 그는 우리 4명을 대대부대에 인계를 했어. 그 부대에게 "서울로 가는 편에 데려다 주라"고 말하며 포로수용소가 있는 곳으로 떠난 것 같았어.

우리를 인계받은 그 부대 대대장은 우리를 어느 초가집 은둔방으로 데려갔어. 그 방에 가니 여러 명의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 속으로 '개만 못한 새끼들...' 욕하면서, 우리는 숨죽였어. 우리가 될 할 수 있겠어. 마당에는 총소리가 계속 들렸어. 빨갱이로 잡혀온 민간인들이 계속 즉결처분을 당하고 있는거야. 밤이 되자 우리 4명은 그 부대 장교 각 4명에게 배정되었고, 나는 대대장에게 배정되었어. 그런데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한참 쳐다보면서 그 대대장에게 부탁했어. "나는 아직 총각이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했으니 저 처녀를 내게 달라." 대대장은 그에게 순순히 나를 맡겼지. 나는 그 남자에게 이끌려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는 숫총각으로 여자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 나중에 그는 "여자의 가슴은 돌덩어리"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었어. 그는 내가 불쌍히 보여 도와주고 싶었다고 했던 거야.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하며 다시 서울의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간청했지. 그는 서울로 가는 내내 나를 보호하여 주었어. 별자리 장성에게 그가 나를 서울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 말했어. 심지어 밤에는

11) 「새살림」(1948년 2월호)에 따르면 1947년 10월 20일 현재 공창의 34%인 732명은 서울에 모여있다고 했다. 황정미,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43쪽.

12) 김점숙, "공창은 폐지되었는데 사창은 급증",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9, 173쪽.

13) 「경향신문」 1958년 8월 11일자.

14) 김점숙, 위의 글, 170쪽; 최유리, "또하나의 군수품, 일본군 위안부",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162쪽.

다른 장교들이 겁탈하지 못하도록 방공호에 감춰주기까지 해서 내가 살았지. 낮에 행군하여 그의 짐차를 타고 갈 때는 군복을 입혀 눈에 띄지 않도록 해주었어. 얼마간 같이 길을 하면서도 그는 나의 손끝도 건드리지 않은 채 서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 집에 갔더니 부모님은 나를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는 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며 치성을 올리고 있어서... 그때 헤어진 친구 3명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 또 학교 다시 돌아갔을 때 전쟁 전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없어진 사람들도 많았어. 어디가서 뵈는지 몰라...

이씨와 헤어진 친구 3명은 그날 그리고 그후 어떻게 되었냐고 몇 번 물어도 '상상에 맡긴다'고 대답할 뿐 그는 얘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씨는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고 결혼 후 당시 경험은 남편과 이씨 사이의 불문율로 남았으며 이씨는 못다한 얘기는 가슴에 묻은 채 관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3. 한국전쟁시기 군위안부와 군위안소

정말 한국전쟁 당시 군위안부와 군위안소는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있을까? 아직은 몇 가지 자료만을 발굴했을 뿐인데, 육군본부가 1956년에 편찬한 『후방전사(인사편)』가 지금까지는 유일한 문서 자료이다. 자료와 증언, 회고록 등에 따르면 군위안소는 대개 군인들이 찾아가는 고정식 위안소와 군인들을 찾아다니는 이동식 위안소의 이중 체계로 운영되었던 듯하다. 이 책의 '제3장 1절 3항 특수위안활동 사항'의 기록을 통해 군위안소의 실태에 근접해보기로 한다.

(1) 고정식 위안소 : 특수위안대

군위안소를 육군은 '특수위안대'라고 불렀다. 그 자료에 따라 특수위안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⁵⁾

1) 설치 목적

“표면화한 이유만을 가지고 간단히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모순된 활동이라고 단안하면 별문 제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기양양은 물론 전쟁사실에 따르는 피할 수 없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가 없는 전투로 인하여 후방 레왕이 없으니만치 이성에 대한

15) 육군본부, 『후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 1956, 148-150쪽.

동경에서 야기되는 생리작용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 등으로 우울증 및 기타 지장을 초래함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 특수위안대를 설치하게 되었다.”

2) 설치 운영 시기

설치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1951년 이후로 추정된다. 폐쇄된 것은 1954년 3월경이다. “휴전에 따라 이러한 시설의 설치목적이 해소됨에 이르러 공창 폐지의 조류에 순명하여 단기 4287(서기 1954)년 3월 이를 일제히 폐쇄하였다.”

3) 위안대 설치 장소

① 서울지구

제1소대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4가 148번지

제2소대 서울특별시 중구 초동 105번지

제3소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36번지

② 강릉지구

제1소대 강릉군 성덕면 노암리

③ 기타-춘천, 원주, 속초 등지

일부 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출동위안을 행하며¹⁶⁾, 소재지 내에서도 출입하는 장병에 한하여 위안행위를 당하였다.

4) 위안대 규모(통계가 나온 곳 중심)

위안대는 소대형식으로 편제되었다. 군위안부는 “서울지구 제1소대에 19명, 강릉 제2소대에 31명, 제8소대에 8명, 강릉 제1소대에 21명으로 계 79명”으로 운영¹⁷⁾

※ 예비역 장군, 채명신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우리 육군은 사기 진작을 위해 60여명을 1

16) 이동식 위안소 운영의 증거임.

17) 특수위안대 실적 이용표를 보면 서울 제2소대 27명, 서울 3소대 13명, 강릉 1소대 30명으로 밝히고 있어서 위안부의 수가 120명 가량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통계는 전혀 알 수 없다.

개 중대로 하는 위안부대를 서너개 운용하고 있었다”¹⁸⁾고 하였으니, 60명 1개 중대가 3, 4개가 있었다면 대략 군위안부의 수는 180~240명 전후였다고 할 수 있다.

5) 특수위안대 실적 통계표

1952년 한 해 동안 부대별 특수위안대에 종사한 위안부수와 피위안 군인의 수의 다음 표와 같다. 다른 해의 실적도 52년과 비슷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만 이 실적은 상기 4개 위안대에 출입한 군인들만의 통계인지, 위안대가 전선 부대에 이동하여 이용된 군인들의 통계까지 포함하는 지는 불명확하다.

1952년 특수 위안대 실적 통계표

| 부대 별 | 위안 부수 | 월별 피위안자 수 | | | | | | | | | | | | 1인당 평균 *4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계 |
| 서울 제1 | 19 | 3,500 | 4,110 | 3,360 | 2,760 | 2,900 | 3,780 | 3,780 | 4,000 | 4,350 | 3,850 | 4,100 | 3,650 | 44,240 | 6.4 |
| 서울 제2 | 27 | 4,580 | 4,900 | 5,600 | 4,400 | 6,800 | 5,680 | 6,000 | 7,280 | 4,850 | 2,160 | 4,950 | 4,150 | 61,350 | 6.2 |
| 서울 제3 | 13 | 2,180 | 1,920 | 2,280 | 1,700 | 2,180 | 2,400 | 2,170 | 2,800 | 1,680 | 1,850 | 1,990 | 2,140 | 25,310 | 5.3 |
| 강릉 제1 | 30 | 6,000 | 6,500 | 7,800 | 8,000 | 5,950 | 4,760 | 7,970 | 8,000 | 4,880 | 3,900 | 4,200 | 5,700 | 73,660 | 6.7 |
| 계 | 89 | 16,260 | 17,480 *1) | 19,010 *2) | 16,860 | 17,830 | 16,620 | 19,920 | 22,080 | 15,760 | 11,760 | 15,240 | 15,640 | 204,560 *3) | 6.15 |

※ 비교--틀린 계산으로서 실재는 다음과 같다.

*1)=17,430 *2)=19,040 *3)=204,440 *4)1인당하루평균은 필자 자신의 계산임

위의 실적표에 따르면 한 위안부가 하루에 6회 이상의 '위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생검사

위안부는 일주에 2회, 군무원의 협조로 군의관의 엄격한 검진을 받고 성병에 대하여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였다고 한다.

(2) 이동식 위안소

18) 채명신, 「사선을 넘고넘어」, 매일경제신문사, 1994, 267쪽.

고정식 위안소와 위안부 관련 자료는 희소하나마 이상과 같은 분명한 근거 자료가 있음으로 하여 한국전쟁 당시 위안소와 위안부의 실체를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순한 사람들이 한국전쟁 당시 미군과 국군 부대내 여성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증언했고 장교를 상대하는 여성과 병사를 상대하는 여성이 따로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이동해 다니던 위안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이동식 위안소와 관련된 공식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동식 위안소에 대한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극소수 군인출신의 회고록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채명신의 회고록 「사선을 넘고넘어」 중에서¹⁹⁾

당시 우리 육군은 사기 진작을 위해 60여명을 1개 중대로 하는 위안부대를 서너개 운용하고 있었다. 때문에 예비부대로 빠지기만 하면 사단 요청에 의해 모든 부대는 위안부대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연대도 예외는 아니었고, 예비대로 빠지기도 전부터 장병들의 화제는 모두 위안부대 건이었다.

차규현의 회고록 「전투」 중에서²⁰⁾

(1952년) 3월 중순의 기후는 봄을 시샘하듯 쌀쌀했다. (……) 잔적을 완전히 소탕한 후 예비대가 되어 부대정비를 실시하고 있을 때 사단 홀병부(恤兵部)로부터 장병을 위문하러 여자위안대가 부대숙영지 부근에 도착하였다는 통보가 있었다. 중대 인사계 보고에 의하면 이들은 24인용 야전침막에 합판과 우의로 칸막이를 한 야전침실에 수용되었다고 하며 다른 중대병사들은 열을 서면서까지 많이 이용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중대병사들간에는 전장에서 여자와 가까이하면 불길한 액운이 따른다는 소문이 퍼져 대부분의 병사들은 선뜻 나서지 않아 위안목적 달성에 큰 도움을 준 것 같지는 않았다.

김희오의 회고록, 「인간의 향기: 자유민주/대공투쟁과 함께한 인생역정」 중에서²¹⁾

(강원도)수도고지 전투도 잊혀지고 도망병 발생도 진정되어 갔다. 이제 FTX에 본격 돌입하기 위해 소화기 및 장비 점검, 보급품 정비 등이 한창 진행되는 어느 날 아침이었다. 연대1파에서 중대별 제5종 보급품(군 보급품은 1~4종밖에 없었음)수령지시가 있어 가 보았더니 우리중대에도 주간 8시간 제한으로 6명의 위안부가 배정되어 왔다. 이는 과거 일본군대 중군경험이 있는 일부 연대 간부들이 부하 사기양양을 위한 발상으로 일부러 거금의 후생비를 들여 서울에서 조련하여 온 것이다.

19) 채명신, 앞의 책, 267쪽.

20) 차규현, 「전투」, 병학사, 1985, 234-235쪽.

21) 김희오, 「인간의 향기: 자유민주/대공투쟁과 함께한 인생역정」, 원민, 2000, 70-80쪽.

그러나 나는 백주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줄을 서서 분대천막을 이용하는 것이라던가 또 도덕적으로나 양심상 어정쩡하기도 해서 썩 내키지가 않았다. 먼저 소대에 2명이 할당되고 그 중 1명이 먼저 소대장 천막으로 배정되어 왔다. 나는 출신환경 등 몇 마디 대화만 나누고 별로 도와줄 방법이 없어 그 동안 모아놓았던 건빵 한 보따리를 써서 선임하사관에게 인계하였다.

위의 예비역 장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 부대에 소위 '제5종 보급품'이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들이 배정되어왔고 이동식 천막이 위안소로서 가설(차규현 회고록)되거나 분대 막사를 대용하였다. 이용하는 시간은 최전선에서 교전과 대치 후, 후방으로 휴식하러 왔을 때 군위안대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일정한 이용시간을 정해놓고 운영되었던 듯이 보인다. 운영 방식은 증언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체명신의 회고록에 따르면 전선에서 위안부대 출입은 '티켓제'로 운용토록 하였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티켓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 공을 세운 순서대로 나눠준다. 물론 훈장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선권이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다. 공훈의 정도에 따라 티켓의 숫자는 달라진다고 한다.

그 가운데 어떤 예비역 장군의 증언²²⁾은 이와 다르다. 일선에 군위안부의 등장은 일회적인 사건이었는데, 1952년 전쟁이 소강에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연대장의 명령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여성 30명 정도가 군용트럭을 타고 연대에 들어왔고 한 개 중대에 5, 6명 정도 배정이 되어 주어진 약 8시간 동안 중대원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티켓 같은 것은 없었고, 희망하는 군인들이 무료 이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사관급 하급장교들이 많이 이용했다. 여성들은 대개 서울의 사창가에서 사들여 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부분 가난한 여성들이었다. 여성들에 대한 대가는 연대 인사처나 사단 홀병부에서 지출했다. 예비역 장군의 증언에서 분명한 것은 전시하에 특별위안대를 이용하는 것 외에도 전방의 부대들은 필요시 군위안부를 채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아직 이동식 군위안소를 누가 최종 기획하여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여성들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4. 한국전쟁 시기 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

이상의 글을 통해 한국전쟁 시기 군위안부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보다는 실체의 작은 한 부분을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

이제 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2) 2002년 1월 면접.

첫째, 한국전쟁 당시 군위안소를 설치한 주체는 누구인가?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군위안소, 즉 '특수위안대'는 육군에 의해 설치되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 군대의 작전 체계상 군위안대의 설치 및 관리문제에 대해 위로는 유엔군의 최종승인하에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아래로는 특수위안대 부대장의 책임하에 총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이 제일의 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군위안소를 기획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는 우문(愚問)일지도 모르겠다. 1948년 창설된 대한민국 창군 인맥의 원조는 일본군, 관동군 출신자들²³⁾이라는 점을 조금만 고려한다면 그 기획자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희오의 증언에서 그 대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일본군대 종군경험이 있는 일부 연대 간부들이 부하 사기양양을 위한 발상'에서 군위안부 창설의 기획자가 분명 일본군출신자이거나 그에 영향을 받은 자로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그는 누구인가?

둘째, 특수위안대의 성격은 무엇인가? 군이 운영한 위안소는 다름아닌 사실상의 '공창'이었다. 위의 특수위안대 내용 중에서 해체 시기를 언급하던 중 '공창 폐지의 조류'라는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이라는 비상시기에 군부 스스로 이미 1947년 11월 11일 공포된 '공창폐지령'(법률 제7호)을 위배하고 공창을 창설하였던 것이다. 앞으로 심화된 연구에서 특수위안대가 어떤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는가 규명되어야 한다.

셋째, 군위안부는 누구인가? 기존의 자료 어디에도 위안부의 정체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앞에서 인용했던 몇몇 문헌에서는 적지 않은 귀환 일제 군위안부들이 한국전쟁 당시 성매매업으로 흘러들어갔으리라는 경험적 진술에 따른 추정만 있을 뿐, 일제 군위안부 중 한국전쟁 당시의 그러한 경험을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 북파공작원 1은 군위안부들은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들이었다고 일축했다. 북파공작원 2도 이에 동의했다. 그런데 북파공작원 1이나 2가 있던 원산 앞 섬에 위안부로 온 여성은 '그 섬에 와 군인들 밥하고 빨래 해주면 한 밀천 장만할 수 있다'는 얘기에 속아 왔다고 공작원 2는 엇갈리는 증언을 했다. 전쟁 미망인으로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일종의 '군노무자'가 된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위안부가 된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더욱이 납치된 여성들에게 선택권이나 거절권은 주어지지 않았다.²⁴⁾

만일 한 발 양보하여 군위안부가 과거 공, 사창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 전전 5만 여명의 공, 사창이 전후 30여만명으로 늘어난 문제와 관련지어 볼 때 설명되지 않는다. 군위안

23)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7; 한용원,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1993.

24) 특히 필자가 2001년 속초에서 증언을 받은 어떤 여성의 얘기처럼 미군에게 강간을 당했던 여성이 마을공동체에게 소외당하게 되면서 선택할 수 있었던 삶(김귀옥, "속초 세 할머니가 겪은 6·25전쟁", 『민족21』 2001년 9월호)이나 안정호의 소설, 『은마는 오지 않는다』(고려원, 1990)에서 연례의 미군에 의한 강간 이후의 삶처럼 그런 여성들이 택할 수 없는 길은 결코 열려 있지 않았다.

부가 어떻게 동원되었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 확실히 규명할 수는 없더라도 아직도 한국전쟁 당시 군부 책임을 맡았던 자들이 생존해 있으므로 정부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할 책임이 있다.

넷째, 군위안부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졌는가?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되었듯이 군인들은 공훈이나 전투에 대한 포상처럼 '보급품'으로 '배당'되어졌다. 군인은 티켓을 갖고 이용했다. 그렇다면 그 티켓은 일본군이 사용하였던 군표와 같은 것으로서 대용화폐로서 기능했는가? 김희오의 언급에서는 '후생비를 들인다'는 말에서 후생비가 군위안부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가? 사실상의 군위안부를 했던 문씨의 불행한 삶을 보건대, 전후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가난과 (남성으로부터의) 버려짐뿐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와 당시 군 통수권을 갖고 있던 미국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다섯째, 군위안대는 언제 설립되어 언제 해소되었는가? 육군본부의 『후방전사(인사편)』에는 해소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4년 3월로 명명하고 있지만, 설립일은 밝혀두고 있지 않다. 군위안대 창설 시기는 전선이 교착되기 시작한 1951년 여름경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앞의 이씨의 경험이나 국군출신으로 인민군 '해방전사'가 된, 비전향장기수 양정호씨나 다른 국군출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엔군이나 국군의 민간 여성 겁탈 문제는 1950년에도 엄청났던 것으로 보인다.²⁵⁾ 특히 좌익의 부역혐의가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강간은 (실제 및 가상) 적에 대한 통제 및 순치 방식의 하나였다. 앞의 김씨의 증언에서처럼 비공식적으로 1950년에도 군위안부나 군위안대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군의 풍기문란을 우려하여 1951년 이후 군위안대를 공식 창설했고 일선 군부대에서도 비정기적으로 군위안부를 동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군위안대의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군부대가 공식 운영했던 공창으로서의 위안대는 1954년 3월에 소멸했는지 모르지만, 북파공작원의 증언에서는 사실상의 위안대가 존재하고 있다. 그 위안대는 사창의 형식으로 존재하지만 군부대가 공식적인 '후생비'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북파공작원에 대한 포상의 형태로 존재해 왔던 것 같다. 그래서 군인과 군위안부의 긴 인연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종선의 소설, 『북파공작원 HID』²⁶⁾에서도 북파공작원과 위안부의 공식적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섯째, 8.15 해방과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우리 사회의 지속적 과제의 하나는 친일파 청산 문제였다. 친일파 문제는 초기 국가 및 군부 형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²⁷⁾ 특히 합참의장은

25) 195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지역 점령기간동안 미군이 북한의 민간 여성들에게 자행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후지메유키(藤目ゆき)의 『國聯軍の犯罪: 民衆・女性から見た朝鮮戦争』을 참조바람.

26) 이것은 소설이지만 모든 에피소드는 취재를 통해 이루어졌고 사실에 바탕에 두고 있다고 작자는 고백하고 있다.

27) 강만길 외, 「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 중심, 2001;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현대사」, 역사비평사, 1996, 서중석,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1989.

1대 이형근에서 14대 노재현까지, 육군참모총장은 1대 이응준으로부터 21대 이세호에 이르기까지 일제 군경력자들이 독식했다²⁸⁾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한국전쟁 당시 군위안부의 문제는 미청산된 친일파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또한 친일파의 문제가 친미 국가 형성의 문제로 이어짐으로써 친일파 문제가 해결될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SOFA에 의해 1차적인 회생 집단 중의 하나가 미군기지촌 여성이 되는 비극적 운명을 만들었다.

또한 이 문제는 1980년대말 90년대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확산 및 심화되어 온 일본군위안부 문제와도 깊은 상관을 맺고 있다. 초기에 일본군위안부, 즉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나올 때만 해도 여성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혼신을 바친 활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집'의 꾸준한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힘입어 2000년 12월에는 도쿄에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열릴 만큼 큰 성과²⁹⁾를 얻었고 관련 자료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불행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쟁 군위안부 문제도 피해여성과 사회단체, 학계가 연대하여 풀어나갈 우리의 과거 청산 문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일곱째, 한국의 뿌리 깊은 가부장제도와 가부장적 이중 성문화로 인해 한국전쟁으로 파생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군위안부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공·사창 문제가 여성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문제로서 전혀 주목받지 못했다. 앞의 문씨나 이씨와 같은 여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철저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현재에도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적잖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일제 군위안부들 중 김학순과 같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용감하게 나와 역사의 진실을 밝혔듯이 한국전쟁 당시 군위안부들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와 왜곡된 한국의 현대 사회의 구조에 의해 억압된 기억, 한국전쟁 당시의 군위안부와 군위안소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또하나의 시대적 과제를 제출하고자 한다. (김귀옥, freeox8@orgio.net)

참 고 문 헌

강만길 외, 2001. 「이제 문제는 냉전세력이다」. 중심.

강정구, 2001. "주한미군의 反 평화성과 反 통일성", 『진보평론』 9호(가을호).

강정구, 1996.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역사비평사.

28) 「한겨레신문」 1995년 2월 25일자.

29) 그 성과에 힘입어 법정 준비를 위해 기울인 몇 년의 노력을 집대성하여 2001년말, 정대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풀빛, 2001)을 출간하였다.

권인숙,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위음, 「여성과평화」, 당대, 2000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출판부.

김귀옥. 2000. “남치 북한인을 공작원, 위안부로 이용했다: 북파공작원의 현대사 증언” 「월간 말」 12월호.

김귀옥. 2001. “속초 세 할머니가 겪은 6·25전쟁”. 「민족21」 9월호.

김성남, 「군축운동과 여성복지」, 이우정선생 고회기념논문집편집위원회 위음, 「여성 평화 생명」, 경제원, 1993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제주 43을 중심으로」,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1999

김점숙. 1999. “공창은 폐지되었는데 사창은 급증”.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김희오. 2000. 「인간의 향기: 자유민주/대공투쟁과 함께한 인생역정」. 원민.

서중석. 1989.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연구」. 지식산업사.

안 진. 1987. 「미군정기 국가기구의 형성과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육군본부편찬. 1956. 「후방전사(인사편)」. 육군본부.

이김현숙. 2001. “남북화해 증진과 여성”.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2002 국제정세 변화, 한반도 운명, 여성」 발표문.

이병천·조현연 편. 2001. 「20세기 한국의 야만」. 일빛.

이정은, 「과거청산과 여성인권-한국전쟁과 잊혀진 여성들의 삶」, 한국인권재단 주최,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 인권학술회의 2001」, 2001

이종선. 2001. 「북파공작원 HID」. 창작시대.

정현백. 2001. “테러, 전쟁 그리고 여성”.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 주최 「전쟁반대평화실현 공개토론회」. 발표문.

조옥라, 「전쟁과 여성역할」,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위음, 「여성·평화」 4집, 1992

차규현. 1985. 「전투」. 병학사.

蔡命新. 1994. 「사선을 넘고넘어」. 매일경제신문사.

최유리. 1999. “또 하나의 군수품, 일본군 위안부”.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청년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위음. 2001.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 풀빛.

한용원. 1993. 「한국의 군부정치」. 대왕사.

황정미. 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도즈카 에츠로(戸塚悦郎). 박홍규 위음. 2001. 「위안부가 '성노예'이다」. 소나무.

朴慶植. 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東京: 未來社.

시마다 스게히고 이정호 옮김. 1987. 「관동군」. 맥남.

후지메유기(藤目ゆき). 2000. 「國聯軍の犯罪: 民衆・女性から見た朝鮮戦争」. 東京: 不二出版.

성폭력 용인 체제인 안보

- 침묵을 깨고 -

우라사키 시게코 (浦崎成子, 오키나와 여성사 연구자)

1. 글머리에

이번 냉전 심포지엄의 큰 성과의 하나는, 국가 테러의 희생자 중 여성의 모습을 발굴하여, '여성의 인권과 국가 폭력'이라는 테마를 냉전 체제에 관한 주된 테마로 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이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가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여성은 존재하지 않은 듯이 취급해온 것을, 제주도 '4·3'을 소설의 테마로 한 한림화는 “그 사건 이래 40여년을 지난 지금까지도, 마치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게 보자기에 쓴 채로 땅에 묻어버린 듯한 제주도 근현대사의 핵심 부분”『동아시아의 냉전과 제주도 4·3 사건』) 이라고 표현했다.

제주도 심포지엄에서 그녀는 피해 여성의 시증을 들며 증언을 도왔다. 그리고 제주도 심포에서 김성례는 사회구조와 국가 자체에 얽혀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 성차별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고통을 받은 신체에 대한 예의로서 여성이 말하도록 하라' (『제주도 심포지엄 보고집』) 이라고 보고했다.

세계의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을 따라 자신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 1995년의 사건에서¹⁾ 오키나와의 12살의 소녀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또다시 미군은 오키나와 여성에게 성폭력을 휘둘렀다. 이 2001년 6월 29일 사건²⁾의 오키나와 여성은 법정에서 의연하게 미군 병사에

1) 1995년 9월 4일 오키나와에서 세명의 미해병대병사에 의한 12세 소녀 강간 사건이 일어나, 당파, 신조, 종교를 초월한 오키나와현민 8만 5천명이 항의집회에 결집했다. 범인은 각각 징역 7년, 6년반의 형벌을 받았다. 다시 한번 '지위협정' 「17조 5항 C」가 문제시 되었으며, 매스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여성들이 자숙하도록 요청함.

2) 2001년 6월 29일,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미공군병사에 의한 여성강간 사건. 95년의 사건에 이어, 「지위협정 17조 5항 C」에 의해 피의자의 기소전 구속이 문제가 되었다. 현의회, 시민단체 항의 성명. 영사관에 대한 항의. 피해자의 파실론에 대해 「R·E·I·K·O(강간구원센터·오키나와)」가 신문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는 긴급메시지를 발표. 주간지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기사에 대해, 오키나와 변호사회는 주간지측에 권고

게 강간당한 상황을 증언했다. 21세기에 여성은 자신을 '보자기에 싸서 묻어두지는 않을' 것이다. 여성은 성적으로 침해 당한 명예와 인권을 자신의 손으로 회복시키는 투쟁을 시작했다.

오늘 나의 보고에 이어서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타자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오키나와 문제를 리드하고 있는 성폭력 서바이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나는 냉전 심포의 동료들간의 연대에 의해 큰 힘을 빌릴 수 있었다. 특히 200년 12월의 '여성 국제 전범 법정'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중에 오키나와 여성³⁾을 거론할 수 있었던 것은 냉전 심포를 통해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테마의 공유화로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광주사건'의 여성에 대해 보고를 한 광주시의회 의원 안성혜가 6월 29일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미군 병사 사건 보도를 보고, 격려와 구체적인 연대의 편지를 보내 왔다. 그녀의 편지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연대가 가능하다는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2001년의 일본의 교과서 문제와 관련하여 오키나와의 친구로부터 "당신의 심포지엄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일본만의 힘으로는, 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곤란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2. 기지의 섬 오키나와 (미일 안보가 지배하는 섬)

오키나와를 이야기 할 때, 오키나와에 공유된 백년간의 역사 문제가 모티브가 된다. 류큐왕국을 거쳐 오키나와 병합에 의한 폐번치현(廢藩置縣),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일에 의해 전개된 오키나와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체험, 전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군사 식민지(군사차별)이라는 기지 피해 체험을 포함하여 개인의 체험이 아니고 주민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역사 공유의 감정은 강하다. 1995년의 미군 병사 사건은 이러한 오키나와의 역사 공유감의 분출을 초래하여 미군 문제가 세계에 주목받았다. 현재 오키나와에 2만 7천명의 미군 군인 군속과 6천명의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다. 미군에 있어서의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흘려 얻어낸 섬'·점령지로, 일본 본토처럼 안보에 의한 기지의 제공이라는 과정과는 다른 전선 기지 기능을 부여받은 섬이다.

1995년 이후의 미일의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둘러싼 움직임과 안보에 의해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기지·군대가 일으키는 군사적 피해,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환

를 내었다. 여성의 프라이버시 침해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판매에 대해 오키나와의 서점 상업조합은 판매자 측의 지원체제를 취했다. 「오키나와타임즈」가 「요코야마 녹크사건(전오사카부지사 성추행 사건)」의 피해여성으로부터 사건의 여성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를 2 회 게재. 2002년 3월 판결 예정

3) 출처 「오키나와전투와 군'위안부」 「위안부' 전시 성폭력의 실태」 파우넷·잡판 編録風出版 2000년

기시키고 싶다.

1995년부터 거론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95년의 사건에 관한 8만 8천명의 항의집회에서 오키나와의 평화, 인권, 자치에 대한 민중의식이 변화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95년의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기지를 갖는 오키나와, 한국,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비에케스 등 지역국가의 민중과 기지 투쟁의 연대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의 네가지 사건에 전형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근년, 미일 안보가 날마다 생생하게 요괴와 같이 오키나와에 발호(跋扈)하고 있다. 안보체제는 ①1996년 미일 양정부에 의해 'SACO'(오키나와의 시설 및 구역에 관한 미일 특별 행동 위원회)가 발족하고, 후텐마기지 이설에 의한 대체 신기지 건설이 방향 지워졌다. ②1997년 '개정 특조법'에 의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제공 거부 지주의 토지를 무기한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③ 기지유지·건설대책비적 성격을 가지는 오키나와에 정부회계의 예산 배분을 한다는 식으로, 21세기도 오키나와를 기지의 섬으로서 고정하여 안보 군사동맹의 거점으로 재편 강화하는 방향이 명확하다. 그리고 ④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오키나와에 대테러 훈련시설로서 해병대 기지내에 육군특수 부대(그린 베레)용의 신 시설 건설 계획을 진행시켜'(오키나와 타임즈) 2001년 12월 20일, '2002년 회계연도의 계산으로 대테러 대책 관련 특수 작전 훈련장으로서 380만 달러(약 4억 8천 7백만엔)이 계상되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다'(「류큐신보」 동년 12월 22일)고 한다. 비열한 테러 행위에 대한 보복의 군사력 행사를 위해 미 상원의회는 38대 0으로 400억 달러(약 4조 8천억엔)을 지출한다고 한다.

'기지의 섬 오키나와'에서는 일상생활의 안에서 노골적으로 안보가 출현하고, '오키나와에서는 안보가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왜 미군기지를 두게 되었는가. 전후도 미국은 일본 국내에 '방공의 장벽'으로 '태평양의 요석'으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군 기지가 필요'해서 오키나와를 점유하면서 미국의 군사전략의 최전방에 두었다. 소화천황도 1979년 밝혀진 소위 천황메시지에서 GHQ에 대해 '오키나와를 25년 내지 50년 아니면 그 이상 미국이 군사 점유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의 이익이 된다'라는 요지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오키나와를 떼어내고 미군기지로 제공하고 일본은 '독립'했다.

현재 미일안보에 근거하여 오키나와에 미군기지의 과중한 부담의 떠넘기기(국토면적의 0.6%인 오키나와에 일본 주둔미군용 시설의 75%)와 미군 병사에 의한 범죄(오키나와현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미군인 등의 1972년부터 1999년까지의 28년간에 살인을 포함하여 4,963건)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1945년부터 계속된 막대한 건수의 인신 피해, 소음피해,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 미일정부는 일찍이 한번도 근본적 방지, 역지를 위해 입법한 적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미군의 사건 사고에 대한 미일의 보상 체제는 상당히 부실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일관계 기관의 고압적 불성실한 태도는 안보체제가 오로지 군사 우선이며 미일양국의 인권을 보장하는 현

법은 오키나와에 관해서는 기능을 정지시킨다. 그러나 미국 내부에도 일반사회의 사법제도와는 독립된 미군 독자의 군사사법제도의 존재가 있고 성범죄를 포함하여 군대의 범죄를 독자적으로 재판하는 더블·스탠더드가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인권'은 군사 전략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되고 있는 듯 하다.

1972년까지의 미군정 하에서는 군인 범죄는 모두 군사 법정에서 이루어져 재판은 이름 뿐인 판결이 내려져 왔다. 오키나와인을 살상한 군인을 무죄로 하는 극단적인 군사우선주의의 구조가 있었다. 미군의 군법회의의 재판관은 군사령관에 의해 임명되어 조서관, 변호사 그 밖의 법정 구성원도 같은 군사령관이 정한다. 오키나와에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일본의 재판에 회부될 때 일본인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환상을 갖고 '미국에서 재판한다면, 좀더 중죄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지만, 일본인에는 미국 내에서도 군사법정이 성폭력 범죄를 허용한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에 관해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피해』에서는 '95년 미국 내에서도 병사에 의한 성 범죄율은 일반 사회보다 높고, 미공군의 성범죄 발생 상황은 네바다주 공군기지의 군요원 총수 7,020인 중 피고는 26명, 오키나와 가테나(嘉手納)가 다음으로 5,984명 중 피고는 23명...이다' 라는 상세한 기술이 있다.

오키나와의 군사 재판에 관해서는 1951년의 '미 일등병이 여성을 강간하여 체포' 된 사건으로 '징역 30년 병적 박탈 급료 몰수' 라는 보고가 있다. 1955년의 유미코양(6세) 사건(강간 후 참살)은 큰 항의 행동을 불러내, '사형 판결 후 45년의 중노동'이 내려졌지만, 오키나와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판결이 범인의 본국 송환 후 판결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기지의 섬 오키나와' 란 어떤 섬인가. 1972년 오키나와가 다시 일본으로 재편입될 당시, 정식으로 일본국민으로 되기 위해 일본국 헌법과 안보조약이라는 두 개의 헌법이 제시되었다. 시정권 반환 전에는 미국 고등 판무관이 내는 포령, 포고가 오키나와의 헌법으로, 사법·행정·입법·경제도 미국인 정부의 하위에 두어졌다. '조국 복귀'는 안보조약에 의해 새로운 기지 섬으로서 자리 매겨짐을 의미했다. 거기에는 오키나와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문제가 안보동맹의 뒤틀림으로 오키나와의 경제, 인권, 자연, 인간을 뒤덮고 있다.

오키나와가 세계의 관심을 모으는 한가지 이유는 미국의 전쟁중의 전진기지에서 부각될 때이고, 또 하나는 미군 병사에 의한 오키나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 할 때이다. 지난 9·11미국 동시 다발 테러 후, 일본인들은 '오키나와는 기지가 있는 위험한 섬'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번 테러의 영향으로 일본인 관광객 30만명이 오키나와 여행을 취소하였고, 그 피해액은 500억엔 이상이라고 한다. 관광산업계는 관광객의 감소에 의한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단순한 풍평피해(나쁜 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로 보지 않고 '기지피해'로서 일본정부에 국가 보상을 요구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오키나와현 경찰은 '기지는 경찰이 지키고 있으니 안전합니다' 라는 어린에 속임수 같은 안전선언을 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안보체제가 구현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오키나와

132만명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커녕, 주민들을 무시하고 희생시켜 잘라버리는 에고이스틱하며, 그로테스크한 것이다.

일본의 근대 백년은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의 생피를 빨아 살려왔지만, 오키나와에 관해 말하자면, 미군사지배 하의 기지 의존 경제의 뒤틀림 구조는(오키나와의 완전 실업률 9.4%, 전국 평균5.4%) 시정되지 않은 채, 특별한 경제 구조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 '100이 10에 진다' (헌법과 안보)>

미일 안보체제는 냉전의 종언에 의해서도 폐기되지 않았다. 우리는 냉전의 종언에 의한 평화의 배당으로서 미군기지의 정리 축소에서 폐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1996년 하시모토·클린턴 수뇌 회담에서 합의된 '미일안보장 공동선언'(이하 공동 선언)은, 미일의 파트너십이 21세기에 있어서도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전에 있어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군의 존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 하며, '일본의 현재의 수준을 포함해 이 지역에 약 10만명의 전방전개 군사요원으로 현재의 병력을 유지한다' 라고 표명했다.

이것은 재일 미군의 병력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키나와에 대한 냉철한 회답이었다. 그 해 바로 전해인 1995년 9월, 3명의 미군 병사에 의한 소녀 강간 사건이 있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미일 양정부에 대해, 자주 일어나는 미군 범죄의 재발방지조치를 취해 주도록 현의회, 시정촌(市, 町, 村) 의회, 각종시민단체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책을 강구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분노가 8만 5천명의 항의 집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일 양정부는 교활하게도 공동선언에서 오키나와와 관련하여, '미군의 시설 및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오키나와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배려해야' 하며, '미일 안보의 목적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오키나와에 있는 기지의 정리, 통합, 축소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sako(오키나와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sako'는 반기지 운동의 활성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제로는 노후화한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본토 북부에 있는 헤노코 해안에의 이전'을 목적으로 했다. 1997년 12월 주민 투표에 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는 최악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01년 말 현재 일본정부는 나고(名護)시를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집중적으로 경제 이익 유도정책을 채용하고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각종 주민운동을 분단시키려는 정책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여성 그룹은 2001년 8월부터 미영사관 앞에서 헤노코 기지 건설 반대의 금요 집회를 개시하였다.

1997년 9월 미일의 안보 협의 위원회는 '미일 방위를 위한 지침'(소위 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일본과 미국의 보다 강고한 군사동맹체제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국회에서

‘미군 용지 특별 조치법’⁴⁾을 개정했다. 오키나와의 계약 거부 지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개정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는 오키나와인의 토지를 노립수로 한 노골적인 오키나와 차별법으로 ‘기지의 섬 오키나와’를 21세기에 도 재편 강화하고 고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리고 2001년 11월에 사법부도, 개정 특조법 적용의 위헌성을 제소한 소위 반전 지주에게 ‘개정 특조법 합헌’ 판결을 내렸다. 원고였던 시마부쿠로(島袋)씨는 ‘100이 10에 패했다’라고 말했다. ‘103조로 구성된 헌법보다 겨우 10조로 된 미일 안보조약이 우선되었다’는 의미이다.

3. 안보는 미군 기지를 지키지만...

미국의 동시 다발 테러 발생 후, 안보는 선명하게 기지의 섬 오키나와의 전모를 보여왔다. 사건발생 당일, 델타라는 최고의 기지 계엄체제가 발령되어 기지 입구에 철조망이 놓여지고 접점이 블록 장벽이 설치되고, 기지 입구에 기관총을 든 무장 병사가 경계에 임하며 기지의 출입이 엄중하게 되었다. 동시에 테러대책으로서 보도규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해 원자력 잠수함의 출입에 관한 정보가 마스크나 현민에게 알리지 않게 되었다. 기지 취재중인 신문기자가 카메라 필름을 빼앗기는 사건도 발생했다. 오키나와의 기지는 시가지에 밀접한 담을 사이로 하여 미군기지가 있다. 테러대책으로 기지와 담 사이에 둔 초등학교에 미군 병사의 총구가 향해져 어린이들이 두려워하여 항의에 의해 어린이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점까지 후퇴한 경비체제가 취해졌다. 어떤 학생은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미국은 친구가 아니라 이웃 나라의 사람들에게 폭격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다른 부현의 경찰 기동대원이 파견되어 와서, 기지 게이트 입구에서 1미터 떨어진 곳에서 곤봉을 가지고 서서 미군 기지를 지키기 시작했다. 어느 오키나와인이 그 모습을 ‘죽창으로 미사일 기지를 지키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미사일은 커녕 지금까지 미군기지는 핵사찰도 생물병기 사찰도 받은 적이 없다.

2001년 6월 29일 미군 병사에 의한 성폭력이 다시 일어났다(미군 병사는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기지 안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1995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일 지위협정 17조 5항c’는 그의 신병을 8일간 ‘합중국 수중’에 두었다. 그 사이 미군이 동행하여 오키나와 경찰서에서

4) 미군용지 특별조치법(特措法), 정식으로는 ‘일본국과 미합중국과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근거한 시설 및 구역과 일본국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와 수반되는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사정 청취를 받고 그것이 끝나자 다시 기지에 돌아가는 대우를 받았다. 그 후 그는 기소되어 신병이 일본으로 넘겨졌다. 이것은 일반 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군인인 피고에게만 다른 외국인에게는 없는 특권이 부여된 것이다. 이들에게는 ‘유능한 통역’을 이용할 권리, ‘미국의 대표 2명(법무관)이 일본의 법정에 들어가 기록을 하는 권리’가 있다.

이 사건의 공판 방청 과정에서 느낀 것은 ①기소 전 그에게 군의 소개에 의해 일본인 변호사와 자유로이 만나고, 일본 경찰의 사정청취 내용을 알고, 충분한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기소전의 변호사료는 군이 부담했다. 이는 군이 피의자의 은혜에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②피고 소속 부대의 법정 입회는 재판의 흐름을 자국의 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법무관은 법정에서는 발언권은 없지만, 피고는 재판장의 허가로 법정에서 법무관과 이야기가 가능하다.

미군의 성폭력은 왜 다발하는가. ①군 내부의 성폭력을 허용하는 상황과 성폭력에 대한 군사재판의 관용 등에 관해 미국의 군대를 내부 고발한 도로시 마키(Dorothy Macky)는 전직 공군 병사로서 성폭력을 받았지만, 군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제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미국군대 내부의 가정내 폭력, 성폭력의 만연을 지적하고 군대 내에서 성폭력이 어떤 식으로 취급하는지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의 용의자를 군법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상관의 일상적인 지도의 일환인 ‘사무적 사정 청취’로 끝내고, ‘혐의가 확실한 자’이라도 방면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유죄가 되어 미군의 범죄 기록에 남는 경우라도 군은 범죄 기록을 군관계자 이외에 아무에게도 심지어 FBI에게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그랜·커크는 ‘주니어 알오티시(JROTC)가 ‘저소득층의 위험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는 우수한 젊은이들을 군대에 빼앗겨 버린다. 이 프로그램으로 고교생들은 충성심이나, 지도자와 규율에 대한 복종을 배운다. 군사주의와 전쟁의 불가피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배운다.’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군국주의와 성차별주의』의 저자 베티 리어던도 군대의 훈련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구조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 내부의 상황과 더불어 주둔지 오키나와에서는 ②인가가 과밀한 지역 내에 기지가 집중되어, 대규모 군사훈련이 있거나 전쟁이 시작되면 전선 기지가 되므로,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높고, 많은 젊은 병사들이 처음으로 외국의, 축제기분의 개방감을 느끼면서, 특히 이곳이 자신들의 점령지였다는 사실이 많은 범죄를 낳고 있다고 생각된다. 젊은 병사는 ‘워킹·워·머신(걷는 전쟁기계)’으로 교육받아, 힘을 과시하고 싶어진다. 군대에서는 살상의 방법을 40여 가지나 훈련받다고 한다.

미군 병사는 자유롭게 오키나와인 거주 지역을 출입하며, 미군은 ‘병사를 구속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병사의 야간 외출 제한에 응하지 않는다. 안보는 미군 병사를 자유롭게 하고 오키나와 여성에게 상처를 입혀도 된다는 것이겠다.